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350-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In-depth Evaluation of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Rural Development Scheme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위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연구기관명: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연구책임자:	성	주	인	연	구	위	원				
연구진:	마	상	진	연	구	위	원				
	조	미	형	부	연	구	위	원			
	엄	진	영	부	연	구	위	원			
	최	용	욱	연	구	원					
위탁연구진:	김	동	진	부	연	구	위	원	(보사연)		
(보건·의료 부문)	기		명	교	수	(을	지	대)		
	채	수	미	연	구	원	(보	사	연)	
	김	대	은	연	구	원	(보	사	연)	
	채	희	란	연	구	원	(보	사	연)	
위탁연구진:	정	진	철	교	수	(서	울	대)		
(교육 부문)	김	진	모	교	수	(서	울	대)		
	박	덕	병	교	수	(공	주	대)		
	이	건	남	교	수	(한	국	교	원	대)
	안	주	리	연	구	원	(서	울	대)	
	유	영	주	연	구	원	(서	울	대)	

요 약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과 관련되는 부처별 사업들에 대하여 2010년까지 점검·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투입지표’나 ‘실적지표’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1년도부터 정책군을 단위로 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매년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도 평가 대상인 ①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②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등 2개 과제에 대해 정책 형성, 집행, 그리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심층평가에서는 정책 형성, 집행, 그리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실적·투입 위주의 평가지표보다는 성과·산출 중심의 지표로써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목적을 달성할 적절한 수단들이 갖추어져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련 정책 수단이 연계 추진되는지 진단하였다. 특히 금년도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할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정책 평가 시 각 사업별 기초적인 추진 실적은 부처별 현황 자료와 기존 문헌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성과 측정을 위해 통계자료 분석, 농촌 주민 및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조사 수행의 일환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특히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두 부문(보건·의료 및 교육)에 대한 외

부 기관 연구 위탁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가.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2010년~2014년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중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군은 크게 2가지 하위 목표와 5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되며, 이는 11가지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1가지 세부사업 중 8개 주요 과제(‘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및 기능보강 지원’/ ‘지역거점 공공기관 육성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현대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분만취약지 지원’)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는 정책 목표의 적합성 평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구성의 적절성, 정책 수단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보건의료 보장 확대를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등 공공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하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의 포괄적 지향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사업은 일부 영역으로 제한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공중보건의를 대체할 안정적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이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등은 바람직한 대응으로 보인다.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는 세부 사업별로 대부분의 사업들에서 추진 실적상으로는 미흡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지원 방식(지자체 매칭), 시설이나 장비 위주 지원의 한계, 지역거점 의료원의 의료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수익성 개선의 딜레마,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의 파편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책 성과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농어촌 지역의 의료취약지는 해소되지 않고,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향상되지 않는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어촌 주민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응급의료서비스, 의료기관, 의료인력 등에 있어서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 방향으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사업 수단 개발,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역할 제고, 기존 사업의 방향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과제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전달체계 강화,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관련 정책의 성과지표 개발, 지역 주민의 욕구 조사 및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나.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상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군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과제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등이다.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심층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결과,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편이었으나, 향후에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양·문화 프로그램과 진로교육, 예체능 특기 적성 및 외국어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복지적 측면에서 방과 후 학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은 학생 및 지역 주민을 위하여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농간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농

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사업의 예산 규모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예산 교부 지연, 적절치 않은 예산 산정 기준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결과,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정부 및 시·도 교육청의 지원은 사업 인력 측면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력 풀을 제공하고, 사업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추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다양한 인력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한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했다. 반면, 사업 예산 집행 시 가장 중요한 여건은 예산 교부 시기이며, 예산 교부가 제때 이루어져야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재 예산 교부 시기는 학교 예산 교부 시기와 차이가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산 교부 시기의 수정과 함께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분명한 지침서가 제공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학교 육성 정책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농어촌 교육 여건의 전반적 향상은 있었으나, 학교 육성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되는 취학 후 교육 여건 분야(초/중/고교)에 대한 개선 정도는 낮은 인식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 육성 정책 사업들의 실효성, 효과성 문제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주변 학교 시설의 개방은 잘 되는 편이며, 먼 거리에 있는 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향후에도 적극 개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육 참여는 연간 1~2회 정도 이루어지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은 영농 및 직업 관련 교육이며, 향후에는 영농 및 직업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특성화된 농어촌 학교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점, 소규모 학교의 유지를 위해 통폐합이라는 대안보다는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심층평가를 토대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측면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것’, ‘향후 달성되어야 할 농어촌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과제 유지 여부를 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은 학교의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유지해야 한다. 둘째,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특기적성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기숙형 고교 지정 육성 사업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가 인식하기에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편이며, 입시 학원식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가 지역 주민의 교육,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은 사업 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다른 사업의 내용과 동일하다. 특히 ICT 사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은 ICT 연수 및 컨설팅에 우수중학교 지원 학교를 포함하여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은 인프라 구축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책적 요구 및 학교 육성 정책의 개선점을 고려하여 3차 기본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는 과소화 비율이 높고,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학교의 돌봄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농산어촌 초등학교 육성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기에 ‘농산어촌 진로교육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 규모, 교육 내용 등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산어촌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차 례

제1장 서 론

- 1. 배경 및 목적 1
- 2.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의 방향 4

제1부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제2장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개요 및 평가 방향

- 1. 농어촌 보건·의료 체계 현황 11
- 2. 삶의 질 향상계획의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개요 15
- 3.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 심층평가 방법 17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추진 현황

- 1. 연도별 추진 현황 21
- 2. 과제별 추진 현황 22

제4장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평가

- 1. 정책 형성 43
- 2. 정책 집행 52
- 3. 정책 성과 61

제5장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제언

- 1. 소결 82
- 2. 정책 제언 84

제2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제6장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개요 및 평가 방법

1. 농어촌 지역의 교육 특성 및 정책 개요 97
2. 심층평가 방법 102

제7장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추진 현황

1. 연도별 추진 현황 112
2. 과제별 추진 현황 116

제8장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평가

1. 정책 형성 154
2. 정책 집행 179
3. 정책 성과 199

제9장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제안

1. 학교 육성 정책 개선점 도출 234
2. 제3차 기본계획 과제 도출 241

부록 1. 설문조사 개요(보건의료 부문) 250

부록 2. 의료취약지 의료수요 및 공급 현황 255

부록 3. 조사표(보건의료 부문) 260

부록 4. 시도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실적 277

부록 5. 조사표(교육 부문) 280

참고 문헌 307

표 차 례

제2장

표 2-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 기관 수, 병상 수, 의사인력 수(2012년) …	12
표 2-2. 주요 보건의료기반 확충 관련 정책 ……………	14
표 2-3. 의료취약지(2차)와 非취약지의 의료자원 및 건강수준 ……………	15
표 2-4. 형성, 집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구성 ……………	19

제3장

표 3-1. 제2차 계획 ‘보건·복지 증진’ 부문 세부과제 ……………	22
표 3-2.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지원 현황 ……………	24
표 3-3.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012년) ……………	25
표 3-4.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 실적(1994-2011) ……………	28
표 3-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개선 유형별 지원 실적(1994-2011) …	29
표 3-6. 지방의료원 연차별 시설장비 지원계획(안) ……………	31
표 3-7. 적십자병원 연차별 시설장비 지원계획(안) ……………	31
표 3-8. 지방의료원 경영 상황(2012년) ……………	32
표 3-9. 권역별 거점의료기관(전문진료센터) 현황(2012년) ……………	33
표 3-1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연도별 사업 규모 및 예산 ……………	34
표 3-11.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구성 개요 ……………	35
표 3-12. 취약지병원 의료인력 지원 ……………	37
표 3-13. 연도별 공중보건 의사 배치 현황 ……………	38
표 3-14. 연도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추진 현황 ……………	39
표 3-15. 분만취약지 지원 성과목표 달성도(2013년) ……………	40
표 3-16. 지원 지역내 관내 분만을 및 분만실적 현황 ……………	41

제4장

표 4-1. 농어촌 보건의료 관련 제도와 근거 법령	45
표 4-2. 최근 5년(2008~2012)간 지방의료원 지원 내역	55
표 4-3. 인건비 지원 파견 인력을 받은 지방의료원의 수술 및 진료 실적 변화 ...	57
표 4-4. 전국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급여종류별 진료 실적(2006~2011) ...	59
표 4-5. 의료기관 접근성: 각 의료기관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	63
표 4-6. 취약지 및 비취약지의 의료기관 접근성 비교	64
표 4-7. 응급의료서비스 적시 이용 가능성에 대한 농어촌 주민 의견 ..	65
표 4-8.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보건진료소장 평가	66
표 4-9.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점(농어촌 주민)	66
표 4-10. 지역의 응급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보건진료소장)	67
표 4-11.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농어촌 주민)	68
표 4-12.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보건진료소장)	69
표 4-13. 지역 내 의료 접근성	69
표 4-14. 이용기관별 지역 주민 의료 접근성 만족도 평가	70
표 4-15. 미충족 의료 경험	70
표 4-16. 미충족 의료 경험의 이유	71
표 4-17.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72
표 4-18. 의료기관별 만족도	73
표 4-19.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보건진료소장)	75
표 4-20.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	75
표 4-21. 찾아가는 서비스 불편사항 1순위(찾아오는 횟수) 응답자 특성 ...	76
표 4-22.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평가(농어촌 주민)	77
표 4-23.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평가(보건진료소장)	78
표 4-24. 공중보건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보건진료소장) ...	78
표 4-25. 보건의료기반개선 사업에 대한 체감 만족도	80
표 4-26. 시설 개선 전후 대비 농어촌 보건기관 이용자 수 증가율	80
표 4-27. 기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평가 연구	81

제5장

표 5-1. 보건의료기반 개선 정책 성과지표 예시	92
-----------------------------------	----

제6장

표 6-1. 사업별 교육부 담당부서	102
표 6-2. 정책의 형성, 집행, 성과에 관한 평가 지표	105
표 6-3.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및 방법	107
표 6-4. 사업별 인터뷰 실시 여부	109
표 6-5. 농촌교육전문가 대상자 및 응답자 수	110
표 6-6.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대상자 및 응답자 수	110
표 6-7.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및 응답자 수	111

제7장

표 7-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사업 종합(1)	117
표 7-2.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사업 종합(2)	118
표 7-3.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개요	122
표 7-4.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시행 계획	123
표 7-5. 농어촌 전원학교 선정 현황	124
표 7-6.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개요	127
표 7-7.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시행 결과	128
표 7-8.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현황	129
표 7-9.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131
표 7-10.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132
표 7-11.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개요	134
표 7-12.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추진계획	135
표 7-13.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현황	136
표 7-14.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개요	138

표 7-15.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추진 개요	139
표 7-16.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개요	141
표 7-17.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현황	142
표 7-18.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 개요	145
표 7-19.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시행 계획	147
표 7-20.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 추진 계획	148
표 7-21.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현황	148
표 7-22.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개요	152
표 7-23.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추진 계획	153
표 7-24.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참여 학교 수	153

제8장

표 8-1.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실행되어야 할 활동	156
표 8-2.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실행되어야 할 활동 (현지통신원 연령별)	157
표 8-3.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항	158
표 8-4.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하는 목표	159
표 8-5.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요구 관련 정책 내용 분석	162
표 8-6. 사업별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 정도(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164
표 8-7. 사업별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 정도(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164
표 8-8. 각 사업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목적에 부합한 정도	165
표 8-9. 학교 육성 정책 사업의 농어촌 특성 반영 내용 분석	167
표 8-10. 사업의 지원 분야/대상/기간/예산 규모의 적절성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169
표 8-11. 사업의 지원 분야/대상/기간/예산 규모의 적절성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170
표 8-12. 사업 집행 시 정부 및 시·도교육청 지원에 대한 만족도	179

표 8-13. 사업 집행 시 정부 및 시·도교육청 지원에 대한 만족도(사업별) ...	180
표 8-14.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확대되어야 할 지원사항	181
표 8-15. 사업별 정책 지원 필요 부문(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대상) ...	183
표 8-16. 사업별 정책 지원 필요 부문(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대상)	184
표 8-17.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여부	185
표 8-18.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 애로사항	185
표 8-19.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이유	186
표 8-20. 사업 예산 집행 여건	188
표 8-21. 기타 사업 운영 상의 애로사항	193
표 8-22. 기타 사업 운영 상의 애로사항(예산/인력/그 외)	195
표 8-23.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200
표 8-24. 기초학력미달 비율 변화 비교	200
표 8-25. 전원학교 학생규모 증감 현황	201
표 8-26. 전원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변화	201
표 8-27.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202
표 8-28. 연중 돌봄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변화	203
표 8-29. 연중 돌봄학교 학생의 학교만족도 변화	203
표 8-30. 연도별 연중 돌봄학교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변화	204
표 8-31.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205
표 8-32.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205
표 8-33.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206
표 8-34.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207
표 8-35.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207
표 8-36. 정책 사업별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208
표 8-37. 정책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 되는 것	209
표 8-38. 정책 사업별 성과 분석(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대상)	210
표 8-39. 정책 사업별 성과 분석(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대상)	211
표 8-40. 정책 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도	212
표 8-41.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	213

표 8-42. 학교 육성 정책의 향후 방향성 및 개선점	215
표 8-43.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현지통신원) ...	218
표 8-44.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전문가)	221
표 8-45. 주변 학교 시설 개방 정도	222
표 8-46. 지난 1년간 교육 활동에 참여한 횟수	223
표 8-47.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전체)	224
표 8-48.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연령별) ...	225
표 8-49. 확대·강화되었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전체)	226
표 8-50. 확대·강화되었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연령별)	226
표 8-51. 교육활동 참여 장애요인(전체)	228
표 8-52. 교육활동 참여 장애요인(연령별)	228

제9장

표 9-1. 기존 과제 유지 여부(안)	241
-----------------------------	-----

부록1

부표 1-1. 조사 대상자의 일반 현황(통신원)	253
부표 1-2. 조사 대상자의 일반 현황(보건진료소장)	254

부록2

부표 2-1. 의료취약지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현황	255
부표 2-2.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	257
부표 2-3. 관내 의료 이용률	258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범위 5

제2장

그림 2-1. 제2차 기본계획 중 보건복지증진 부문의 목표와 주요 과제 .. 16
그림 2-2. 연구진행 절차 18

제3장

그림 3-1. 사업기관별 관내 분만을 변화 42

제4장

그림 4-1. 농어촌 보건·의료 보장 확대의 정책 목표와 수단의 구성 46
그림 4-2.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 50
그림 4-3.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 52
그림 4-4. 의료취약지의 재정자립도 현황 53
그림 4-5.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2008년) ... 55
그림 4-6.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사항 74

제6장

그림 6-1.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부문의 목표와 주요 과제 100
그림 6-2.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관련 세부 과제 101
그림 6-3.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심층평가 연구 내용 ... 104

제7장

- 그림 7-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과제의 연도별 추진 현황(1) · 113
 그림 7-2.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과제의 연도별 추진 현황(2) · 114
 그림 7-3.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대구) ······ 144

제8장

- 그림 8-1.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정도 인식(연령별) ······ 215
 그림 8-2.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연령별) ······ 219
 그림 8-3.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동거자녀 유무 여부) ··· 220
 그림 8-4.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동거자녀 취학 유형별) ··· 221
 그림 8-5. 지난 1년간 교육 활동에 참여한 횟수(연령별) ······ 224

제9장

- 그림 9-1. 심층평가를 통한 개선점 도출 ······ 236
 그림 9-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유형 ······ 245
 그림 9-3. ‘섬드리 하나로’ 정책: 전남 신안 지역 ······ 247

부록2

- 부그림 2-1. 취약지별 100km² 당 병원 수 ······ 255
 부그림 2-2. 취약지별 100km² 당 응급실 수 ······ 256
 부그림 2-3. 취약지별 100km² 당 분만실 수 ······ 256
 부그림 2-4. 내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 257
 부그림 2-5. 외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 257
 부그림 2-6. 관내 의료 이용률(응급실) ······ 258
 부그림 2-7. 관내 의료 이용률(분만실) ······ 258
 부그림 2-8. 관내 의료 이용률(수술실) ······ 259

제 1 장

서 론

1. 배경 및 목적

1.1.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단위 사업별 평가 방식의 한계 대두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입각하여 기본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부터는 새로 수립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이 시행될 예정이다.
 -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 * '09년 수립한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되었으며,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을 잇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 수립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 지자체 역시 기본계획에 따라 매 5년 마다 시·도,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2010년까지는 매년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각 부처별로 수립한 시행계획의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평가를 실시하였다.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은 2개월 정도 과제별 자체 점검·평가보고서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점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하지만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체 점검·평가보고서 등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서 전문가들이 제한적으로 사업 성과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책 평가라기보다는 개별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다.
 - * 10여 개 관계 부처의 100여 개 개별 사업을 각각 ‘투입지표’나 ‘실적지표’로 평가한 결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1.2. 2011년부터 주요 삶의 질 정책 과제 대상 심층평가 방식 도입

- 기존 평가 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1년도부터 심층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주요 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 연도별로 정책 기조나 시의성 등을 감안하여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정책군을 대상으로 전문지원기관에서 심층 지표에 입각한 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 2012년도에는 ①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과 ② 지역발전역량 강화 정책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13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안건에 반영하였다.
 - *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지역발전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목재펠릿 보일러 시장 확대,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확대, 지역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등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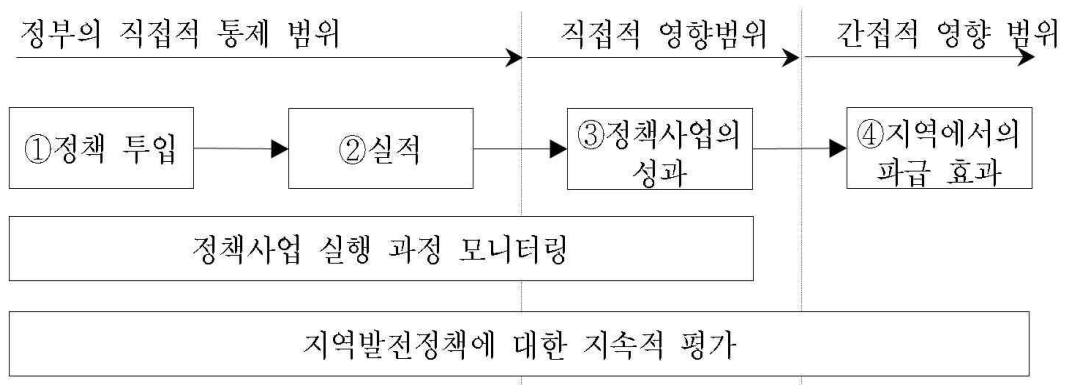
- 2013년도에는 ①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 ②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정책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14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안건에 반영하였다.
 - * 농어촌산업 고도화 정책 및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활용 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유사 사업 통합 및 재편,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도입, 어메니티 분야 정책 유형·성격에 따른 정책군 구분 및 과제 재분류, 신규 도입되었거나 단기간 내 개편이 예상되는 법률·제도를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등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 2014년도 심층평가 작업은, ①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②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등 2개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 해당 과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14년)에서 선정하였다.
 - 2개 과제별로 정책 형성-집행-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며, 관련 자료 분석, 현장조사, 면접,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별 향후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할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2.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의 방향

2.1. 심층평가의 목적과 기본 방향

- 삶의 질 향상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심층평가에서는 정책 성과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 개별 과제 자체의 개선 과제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기보다는 평가 대상 정책군의 취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관련 사업들을 재편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계획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 기존의 부처별 사업 평가는 추진 실적 평가로 간소화하고,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로 구성된 정책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실적·투입 위주의 평가 지표보다는 성과·산출 위주의 지표로써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주력한다.
 - * ① 정책 투입 → ② 실적 → ③ 정책사업의 성과 → ④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한다.
 - * 이전까지의 삶의 질 향상계획 평가는 대체로 ①, ②의 단계에 해당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심층평가는 ③, ④에 해당되는 성과 지표까지 측정한다.

그림 1-1.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범위



- 정책 성과뿐 아니라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목적을 달성할 적절한 수단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련 정책 수단이 연계 추진되는지 진단함으로써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로 삼고자 한다.
- 종합하면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추진 실적) 정책 추진 현황에 관한 것으로 전국 단위 및 사례 지역 사업 추진 내역
 - (정책 형성) 중앙정부 수준에서 정책 목표가 적합하게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갖추어졌는지 고찰
 - (정책 집행) 정책의 추진체계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포함한 집행 과정의 효율성, 정책 성과관리
 - (정책 성과) 정책 추진 결과로 나타난 직접적인 성과와 간접적이며 보다 광범위한 파급효과(영향)

2.2. 심층평가의 주요 내용

- 심층평가는 제1부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과 제2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각각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의 틀로 구성된다.

① 정책 개요 검토 및 평가틀 도출

- 심층평가 대상 정책 개요
 - * 해당 정책의 의의와 방향, 평가 대상 사업 범위
- 심층평가를 위한 평가의 틀과 평가 지표 도출
 - * 문헌 검토,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통해 투입 → 실적 → 성과로 구분되는 평가지표 개발

② 관련 정책 추진 현황(실적)

-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사례지역의 사업 추진 현황

③ 정책 평가

- 정책 형성 평가
- 정책 집행 평가
- 정책의 추진 성과와 파급효과 평가

④ 정책 제안

-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선 방안
 - * 우수사업의 확대 및 부진사업의 개선 등 정책 수단 보완 등

2.3. 평가 추진체계

- 삶의 질 향상계획의 심층평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두 가지 평가 분야 각각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연구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체적인 작업을 총괄한다.
 -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룹에 위탁 추진한다.
 - *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의 연구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동진(부연구위원), 채수미(전문연구원), 김대은(전문연구원), 채희란(연구원), 그리고 을지대학교의 기명(교수)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은 서울대학교(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한다.
 -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연구진은 서울대학교의 정진철(교수), 김진모(교수), 안주리(연구원), 유영주(연구원), 그리고 공주대학교의 박덕병(교수), 한국교원대학교의 이건남(교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제 2 장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개요 및 평가 방향

1. 농어촌 보건·의료 체계 현황

1.1. 공공보건의료의 한계

- 전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 때문에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 농어촌에서는 민간 의료시장이 위축되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지역별 의료 이용 불평등, 응급·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공급 부족, 의료기관의 저소득층 진료 기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 민간 의료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 농어촌의 경우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에 필요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체계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 2012년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는 3,664개소로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공공+민간)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병상 수와 의사 인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공공의 비중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2-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 기관 수, 병상 수, 의사인력 수(2012년)

단위: 개소, 개수, 명

구분	공공보건의료기관 (A)	민간의료기관 (B)	전체 (C=A+B)	공공/전체 (A/C)
기관	3,664	59,156	62,820	5.8%
병상	60,408	541,101	601,509	10.0%
의사인력	14,416	111,586	126,002	11.4%

자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13) p.118 표 참조

-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자원의 양적 확충 및 거시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 건강보험 도입을 전후로 하여 민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충해 왔다.
 - 또한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빠른 시간 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 그러나 과잉 공급, 중복과 낭비, 비효율과 질 저하, 급증하는 의료비 등 ‘양적 공급 중심의 시장형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위기가 도래하였다.
 - 의료기관 종별 기능 미분화에 따른 중복과 낭비, 수도권·대도시로의 자원 집중, 보건의료체계 내 수익 추구 경향 및 영리적 속성 심화 등 시장 실패가 심화되고 있다.
 - 전체적으로는 양적 과잉이나,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의료 취약지, 계층간 건강불평등, 저수익 분야의 전공의 공급 감소, 미충족 의료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다.

1.2. 농어촌 의료취약지 해소 및 보건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 정부는 의료 취약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보건소 등의 보건기관 설치 이외에도, 취약한 공공부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0년대 말부터는 보건의료에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공공의료확충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오영호 2013).
- 정부는 2000년 1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10년 만에 전면 개정(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 2013년 2월 시행)하여 공공의료의 개념과 대상, 영역 등을 대폭 수정하고, 지역별 의료 이용 실태 및 자원 분포를 감안한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즉, 공공의료란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중심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 여부를 중심으로 개념이 개편되었고, 기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취약지 지원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수행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개념을 적용하였다.
-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보건의료기반 확충 관련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표 2-2. 주요 보건의료기반 확충 관련 정책

정책	내용
의료취약지 지원 정책 (2010년 이후)	- 분만취약지, 응급취약지에 대한 지정 및 지역의 의료수요, 의료 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한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지역거점공공병원발전계획 (2010)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기관 신·증축과 리모델링 등 의료시설을 현대화 - 응급·진염병·호스피스 등 시장실패 영역의 공급을 확대하고 의료안전망 프로그램을 도입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2011)	-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고시하고,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특화 - 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역에는 거점병원을 육성(권역별 전문진료센터 포함)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2013)	- 전국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①운영 효율성 제고 ②공익적 기능 강화 ③평가와 지원 체계화 ④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 등의 4대 추진 목표와 세부 개선과제 제시
응급의료기본계획 (2013-2017)	- 주요 정책추진방향은 첫째,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고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농어촌, 취약계층 등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3. 추진된 정책에 대한 평가

- 그동안의 정책을 통해 서비스 제공체계를 1차(기초·취약지)-2차(지역)-3차(광역)로 구축하여 공공의료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지방의 상급 의료체계 개선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의료자원의 수도권·대도시 집중과 환자 쏠림 현상, 지역별·계층별·

분야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비(非)형평성 문제와 건강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 2013년 현재 전국의 분만 취약지¹⁾는 총 48개 지역에 이르며, 응급의료 취약지²⁾는 25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 7개 서비스(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실·분만실·수술실)로 파악한 ‘2차 취약지’는 전국 38개 시·군으로서, 이들 지역은 비취약지에 비해 의료자원 배치와 접근성은 열악한 반면, 연령표준화 사망률, 자살률 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정주 외 2013).

표 2-3. 의료취약지(2차)와 비취약지의 의료자원 및 건강수준

구분	100km ² 당 병원 수 (개소)	100km ² 당 응급실 수 (개수)	10만명당 병상 수(개수)	10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명)	연령표준화 사망률
취약지	0.4	0.2	668.6	1.8	454.1
비취약지	15.9	3.7	854.8	3.5	415.0

자료: 문정주 외(2013) p.31~32 표 참조

2. 삶의 질 향상계획의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개요

○ 제2차 삶의 질 향상계획에서 보건·복지 증진 부문은 “농어촌 주민의 건강하

- 1) 1시간 이내에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접근 불가능한 지역 면적이 30% 이상인 시·군·구
- 2) 응급의료기관이 없거나 있더라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없는 주민이 30% 이상인 시·군·구

고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여, 4대 주요 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서 “농어촌 보건·의료 보장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크게 보건의료기반 확충과 응급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구분한다.

그림 2-1. 제2차 기본계획 중 보건복지증진 부문의 목표와 주요 과제



출처: 농림수산식품부(2009) p.14 표 재인용

- 이러한 정책 목표는 농어촌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의료서비스 질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 ‘보건·의료 보장 확대’는 의료인력 및 시설이 부족하고, 공중보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취약한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 응급의료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응급의료기관 설치 확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 * 의료기관의 8.6%, 병상 수의 13%, 의사 중 6.1%만 농어촌(군지역)에 소재('08.12), 보건(지)소 의사의 86%를 공중보건의가 담당('08.12)
 - * 43개 군에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하고, 도서·산간 175개 읍면은 환자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08~'09년도 기준)

3.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 심층평가 방법

3.1. 평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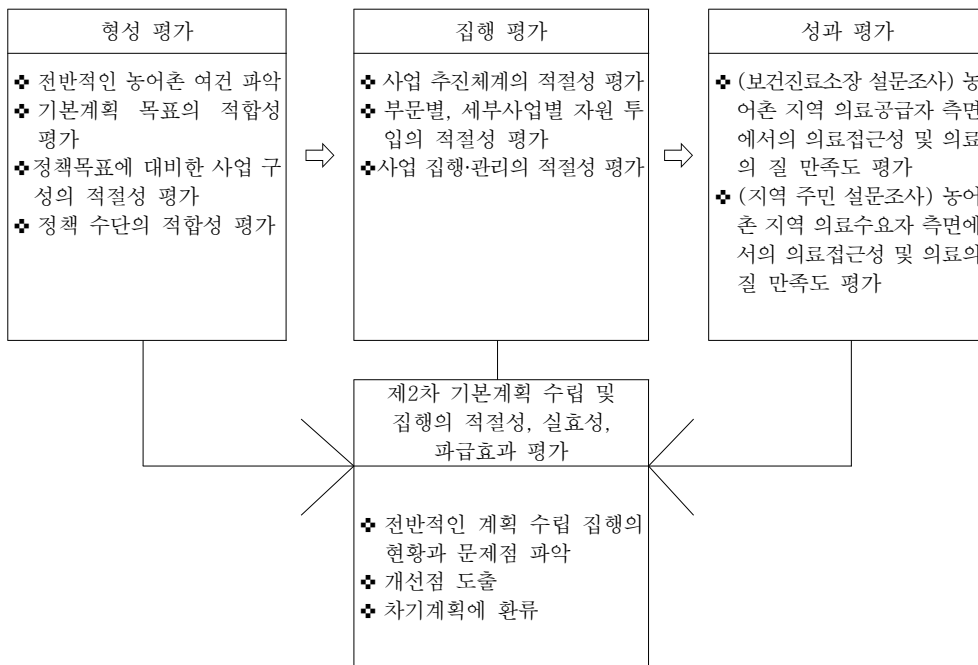
- 제2차 계획에 포함된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평가를 위해 계획 수립의 적절성(형성 평가), 계획 집행의 적절성(집행 평가), 그리고 계획의 효과성(성과 평가)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형성 평가에서는 농어촌의 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목표의 적합성, 정책 목표에 대비한 사업 구성의 적절성, 정책 수단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 집행 평가에서는 시행계획 대비 실적 검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자원 투입의 적절성, 사업 집행관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 성과 평가에서는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장 대상 설문조사와 농어촌 주

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접근성과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본 계획으로 인한 보건의료 관련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3.2. 평가 방법

-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심층평가의 전반적인 연구 진행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2. 연구진행 절차



-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의 제반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심층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들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진행하였다<표2-4>.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문헌검토를 진행하였다.

표 2-4. 형성, 집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구성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형성	계획 목표의 타당성	기본계획의 목표가 농어촌 보건의료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전체 세부사업들을 총괄하고 있는지 평가
	사업구성의 적합성	세부 사업들이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목표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정책 수단의 적절성	세부사업들이 정책목표 실현에 충분하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에 한정적이지 않은지 평가
집행	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보건부문 및 복지부문,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수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체계상에서 연계되어 있는지 평가
	자원 투입	부문별, 세부사업별 예산이나 자원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평가
	사업 집행관리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집행과 관리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
성과	접근성	응급서비스, 의료기관별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주민 체감도 평가
	만족도	응급서비스, 의료기관별 서비스 이용 만족도,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질적 평가, 보건의료기반 개선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평가

□ 설문조사

-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에 대한 체감 효과 및 과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비스 이용자인 농어촌 주민과 서비스 제공자인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이다.

- 주민 대상 조사 내용은, 농어촌 지역 내 보건의료의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 응급의료·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보건의료기반 확충과 관련된 미충족 욕구(unmet needs) 등이다.
- 보건진료 담당공무원 대상 조사 내용은 농어촌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문제점,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응급의료·공공보건의료

기관·공공보건의료 인력 실태 및 보건의료기반 확충 방향과 개선점 등이다.

□ 문헌 검토

-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의 심층평가를 위해 다양한 문헌 및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 그 중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삶의 질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 또한, 세부 과제들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계획 혹은 사업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제 3 장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추진 현황

1. 연도별 추진 현황

- 2010년~2014년 2차 삶의 질 향상계획의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부문에 속한 세부 과제는 다음 <표 3-1>과 같다.
 - 이 중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과제의 경우,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사업 예산 지원의 방향을 포괄 보조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 중 하나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으로 통합됨에 따라 분류해서 표시하였다.
- 전체 11개 세부 과제 중 다음의 8개 주요 과제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및 기능 보강 지원,’ ‘지역거점 공공기관 육성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 현대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지방자치단체),’ ‘분만 취약지 지원’

-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 지원,’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과제는 제외하였다.

표 3-1. 제2차 계획 ‘보건·복지 증진’ 부문 세부과제

번호	사업명	'10	'11	'12	'13	'14
1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및 기능보강 지원					
3	지역거점 공공기관 육성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현대화					
4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6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7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지방자치단체)					
8	분만취약지 지원					
9	농어촌 보건의료기술지원					
10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11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자료: 농림수산물부(2009) p.90 참조

2. 과제별 추진 현황

2.1.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1.1. 개요

○ 사업 추진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대국민 응급의료 제공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및 제14조(농어촌 민간의료기관 육성):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민간의료기관 육성
- 국정과제 7-48-3: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의 민간의료기관 등
- 낙도·오지 지역 헬기·선박이용 응급환자이송체계 구축 지원: 해양경찰청, 산림청, 광역자치단체

○ 지원 내용: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 지원 조건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국비 100%
-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 낙도·오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 형태: 지자체 보조

2.1.2. 추진 실적

○ 추진 내용

- 응급진료권(59개) 중 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한 진료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육성 지원하였다.
 - 군(郡) 지역(84개) 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등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육성·운영 지원하였다.
 - 병원과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를 지원('10~'11)하였다.
 - 해양경찰청 합정에 해양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을 설치('09~'12)하여 해상, 도서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 시 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한 응급 처치를 시행하고, 이송 중 필요한 정보를 병원으로 전송하여 치료 시간을 단축하였다.
- 응급의료 취약지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30분 이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95개 기관에 758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3-2.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관수	48	45	52	71
지원액	5,950	21,549	18,558	18,51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2년의 경우, 응급진료권 취약지에 대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 장비비와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였다.

표 3-3.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012년)

단위: 개소, 백만 원

구분		지역응급의료 센터 육성	지역응급의료 기관육성	농어촌 단일응급의료기 관 운영 지원	당직의료기관 운영 지원
지원 지역 수		10	35	21	5
개소당 지원액	시설·장비비 (지정 첫해)	1,711	380	-	-
	운영비 (매년)	400	250	125	68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사업 보류('10년도 종료)

-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는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아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0년 소방공무원 근무 형태가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되면서 인력확보가 어렵고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종료하였다.
- '11년 사업을 위해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신규 운영 인력 300명(2명×3교대×50개소)을 지자체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 의료취약지의 경우 지원 대상 응급의료기관 선정 곤란

- 강원도 양양군 등 5개 군 단위 지역은 적정 의료기관 부재 등의 사유로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였고, 취약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하여 사업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한 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응급의료기관 지정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 존재

- 지원·육성된 33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중 법정 기준 충족 기관은 '12년 9개에서 '13년 20개로 증가하였다.

-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 인력 기준 충족률은 '12년 37.5%에서 '13년 59.8%로 증가하였다.

2.2.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및 기능 보강 지원

2.2.1 개요

○ 사업 추진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 보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2
- 지역보건법 제19조

□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1994년³⁾ ~

3)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의 대표적인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1994년부터 낙후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0개년 사업으로 2004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농어촌 경제여건의 지속적 악화 및 농특사업의 성과 등에 힘입어 2014년까지 연장되었고, 다시 2024년까지 10년이 연장되었다.

- 사업 대상
 - 지원 대상: 군 지역 및 도농 통합지역의 시 지역 보건의료기관
 - 도·농 통합지역이 아닌 일반시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조건
 -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재정자립도 40% 미만 → 100% 지원, 재정자립도 40% 이상 ~ 60% 미만 → 80% 지원, 재정자립도 60% 이상 → 50%
- 지원 형태: 자본보조(국비 2/3, 지방비 1/3), 경상보조(국비 1/2, 지방비 1/2)
-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능 보강(시설 신축·증축 및 개보수,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 지원 등),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비 지원
 - 신축·증축: 4억 8,900만 원(평당 국고 지원 기준 단가)
 - 개·보수: 1억 원(평당 국고 지원 기준 지원 단가)
 - 도서지역 지원액은 신·증축/개·보수의 평당 국고 지원 기준 단가에 20% 가산

2.2.2. 추진실적

-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투자된 총 액수는 6,775억 7,7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신축·증축 및 개보수에 대한 시설 지원은 6,162억 7,200만 원, 의료장비 지원에 404억 원, 전산장비 지원에 94억 5,500만 원, 보건사업차량 지원은 98억 4,000만 원, 기타 16억 900만 원이 소요되었다.

- 개선사업에 투자된 총 투자금의 91%가 농어촌 보건기관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 지원으로 사용되었으며, 기관 유형별 투자 금액의 규모는 보건지소에 44%로 가장 많이 지원되었고, 보건소에 38.6%, 보건진료소에 17.2%가 지원되었다.

표 3-4.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 실적(1994-2011)

단위: 개소, 백만 원

구분	시설		의료장비		전산장비		보건사업차량		기타		합계 (지원액)
보건소	321	211,848	709	29,539	314	9,132	790	9,704	241	1,237	261,461
보건지소	998	288,174	1,374	9,728	1	2	22	136	247	187	298,228
보건진료소	1,005	166,170	-	-	-	-	-	-	395	185	116,355
시도	1	80	2	1,133	9	320	-	-	0	-	1,533
총합계	2,325	616,272	2,085	40,400	324	9,455	812	9,840	883	1,609	677,577

출처: 기명 외(2012) p.33 재인용

- 1994년부터 2011년까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졌던 시설 지원(시설 지원 형태는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을 살펴보면, 시설 지원을 받은 총 2,325개소 중 보건기관 신축 및 이전 신축, 시설 지원 건수가 2,066건(총 지원 건수 대비 88.9%)으로 시설 개선 유형의 대부분은 신축 및 이전 신축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 시설 지원 중 신축 및 이전 신축의 형태가 아닌 증축 및 개보수 등의 지원은 주로 보건소에서 시행되었다.

표 3-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개선 유형별 지원 실적(1994-2011)
단위: 개소, 백만 원

연도	신축		이전신축		신설		증축		증축·개보수		개보수		개보수·속소신축		합계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1994	4	537	2	733			4	850	5	2,701	1	20			16	4,841
1995	25	11,664	15	12,340			5	201	11	4,926	4	799	2	136	65	30,066
1996	9	2,109	38	16,735			16	2,007	8	2,548	18	3,411			89	26,810
1997	9	6,554	21	14,393			9	1,395	4	2,327	5	658			48	25,327
1998	19	9,106	9	2,471			2	612	9	4,793	6	1,285			45	18,267
1999	21	6,322	49	16,903			2	593	2	601	4	928			78	25,347
2000	16	4,457	36	11,145	1	231	1	252	1	69	1	279			56	16,433
2001	18	4,173	45	10,919			3	998	2	593					68	16,683
2002	32	6,380	50	9,934			2	430	1	148	1	271			86	17,173
2003	32	5,036	66	13,134			1	68			1	52			100	18,290
2004	30	5,085	79	15,080			1	262							110	21,155
2005	213	51,742					4	1,963			1	22			218	53,727
2006	92	26,227	117	25,653			8	3,252							217	55,132
2007	110	24,159	120	23,302	1	354	24	9,736							255	57,521
2008	68	14,161	136	38,281	3	4,860	10	3,985			9	1,179			226	62,466
2009	50	14,927	135	41,517	2	329	2	831			7	882			196	58,486
2010	61	16,955	127	30,030	2	497	14	6,281			13	2,630			217	56,375
2011	49	13,540	148	32,596	3	968	11	2,137			24	2,932			235	52,173
	858	223,104	1,196	315,894	12	7,221	119	35,853			95	15,358			2,325	616,272

자료: 한국건강증진재단(2011)

2.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현대화

2.3.1. 개요

○ 사업 추진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2005년~
- 사업 대상: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 병원 6개소
- 지원 형태: 국비 50%, 지방비 50%(적십자병원은 국비 100%)
- 지원 조건
 - (신축) 건축경과 연수 20년 이상 이상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의료원
 - (증·개축) 급성기 2차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병동 증축 등 시설 확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개보수) 노후 등으로 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의료장비) 노후장비 교체 및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장비 필요 등
- 지원 내용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신축·개보수, 의료장비
 - 혁신 및 서비스 교육: 지역 거점 공공병원 임직원 교육 강화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 운영 실태 평가로 바람직한 운영 방향 제시

2.3.2. 추진 실적

○ 추진 내용

- 민간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노후시설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였으며, 투자비는 장기간(20년간) 분산 지급되었다.
- 지방의료원에는 5년간('10~'14년) 3,986억 원(국비 2,686억 원), 매년 53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시설·장비가 확충되었다.
- 적십자병원은 적십자사가 추진 중인 경영개선계획이 완료되면 세부 검토 후 지원 방향이 결정('10. 상반기)될 예정이다.

표 3-6. 지방의료원 연차별 시설장비 지원계획(안)

단위: 개소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신 축	2	3	3	-	-	8
증 개 축	0	2	2	2	2	8
리모델링	5	4	4	4	3	20
부대시설	2	2	2	2	2	10
의료장비	13	15	15	15	15	73

주: 연차사업은 제외한 개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0)

표 3-7. 적십자병원 연차별 시설장비 지원계획(안)

단위: 개소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시설 개보수	2	2	2	2	2	10
의료장비	6	3	3	3	3	18

자료: 보건복지부(2010)

-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지속적·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채무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재정 현황을 보이고 있다.

- 2012년 한해 지방의료원 34개소의 당기순손실(적자)은 총 863억 원(개소 당 평균 25억 원)에 이르며, 시설·장비 투자, 퇴직금 중간정산, 차입채무 보전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부채가 총 5,338억 원(개소 당 평균 157억 원)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13a).

표 3-8. 지방의료원 경영 상황(2012년)

지방의료원 (개소)	진료과 (개수)	운영병상 (개수)	인력(명)	부채 (백만원)	당기순손익 (백만원)
34	531	8,674	9,018	533,793	△86,334

자료: 보건복지부(2013a) p.9 표 참조

- 현재 우리나라의 거점의료기관은 대체로 지역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기초(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역(지역거점의료기관), 권역(권역거점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 기초 단위의 거점의료기관은 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료취약지’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의 분만 및 응급취약지가 포함되며,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 분만, 수술)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2차 의료취약지 및 3차 의료취약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지역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6개 지역을 묶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과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공공의료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 2차 의료 수준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권역 단위의 거점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또는 노인·신생아 등 대상자별로 ‘전문진료센터’ 형태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5,111억 원을 지원하였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

표 3-9. 권역별 거점의료기관(전문진료센터) 현황(2012년)

단위: 개소

구 분	센터수	구 분	센터수
권역별 지역암센터	12	권역별 노인보건의료센터	4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11	권역별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18
권역별 류마티스 및 관절염센터	5	권역별 재활병원	6
권역별 호흡기질환센터	5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4
권역별 어린이병원	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거점의료기관 가운데 지역거점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거점’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이 제한되거나 진료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다빈도 상병부터 입원, 응급 서비스 등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공공의료의 기본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해야 하는 기관이다.
- 또한 지역거점의료기관은 공공의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의 위상 및 기능 정립에서 시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

2.4.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2010~2012)

2.4.1. 개요

- 사업 추진 근거: 지역보건법 제9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 사업 기간: 2007년~

- 사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
- 지원 내용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4.2. 추진 실적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2012년 기준으로 총 146만 가구를 대상으로 253개소에서 2,750명의 방문 인력이 투입되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635억 원이었다. 2013년부터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었다.
 - 방문인력 1인당 방문 가구 수는 531가구이다.
 - 가구당 투입 비용은 43,500원⁵⁾이다.

표 3-1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연도별 사업 규모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연도	사업규모		예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2010	등록관리가구 118만가구 방문인력 2,700여명	등록관리가구 120만 가구 253개소, 방문인력 2,700명	61,546	61,546
2011	등록관리가구 120만가구 방문인력 2,750여명	등록관리가구 122만 가구 253개소, 방문인력 2,750명	62,974	62,974
2012	등록관리가구 120만가구 방문인력 2,750여명	등록관리가구 146만 가구 253개소, 방문인력 2,750명	64,446	63,5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begin{aligned}
 5) \text{ 가구당 투입 비용} &= (\text{소요된 총 예산} / \text{서비스 대상 총 가구 수}) \\
 &= (635\text{억 원} / 146\text{만 가구}) \approx 43,500\text{원}
 \end{aligned}$$

2.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2013~2014)

-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함으로써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13년부터 보건소 17개 개별 보조사업의 예산이 포괄보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13개 사업 분야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거나 통합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수행하게 되었다.

표 3-11.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구성 개요

기존 국고보조사업 (17개 사업이 사업간 연계성 없이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개 사업으로 통합·포괄적 운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영양플러스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모유수유클리닉 철분제, 엽산제 지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노인사례관리 한의원건강증진허브보건소 한의원 지역보건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원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 방문건강관리
	※사업영역제시→지자체 선택 ※사업간 칸막이가 없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설계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3b) p.8 표 참조

2.6.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2011~2014)

2.6.1 개요

○ 사업 추진 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5항

□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지역 우선 배치

○ 공중보건의사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농어촌 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감소 폭을 최소화한다.

- 도시 지역 민간병원, 보건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 규모를 축소하고, 농어촌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및 의료취약지 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최우선 배치한다.

- 특히,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의료취약지 주민의 진료공백 최소화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 배치 기관을 재검토한다.

- 농어촌과 같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지역 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다.

(2)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에 의사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으로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교수, 임상교수)를 파견할 경우, 파견 의사 인건비의 50%와 수당을 지원한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대학병원의 파견인력 인건비의 50%를 1:1로 분담한다.

* 국립대병원을 우선하되, 국립대병원과 교류가 어려운 경우 시립대병원도 포함한다.

표 3-12. 취약지병원 의료인력 지원

의료 인력	대학병원의 인력지원 내용
전임교수	· 주 2~3회 외래 파견진료 · 진료보조수당은 파견받는 공공병원 부담
임상교수, 전임의	· 지방의료원 T/O를 대학병원에서 채용하고, 보수는 공공병원이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배출 이후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대체할 안정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10)

*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비율은 54.4%,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비율은 70.7% (’09.7, 입학 정원기준)이다.

- 농어촌 의대 정원 할당제도
 - 농어촌 지역 출신 고교생 대상 의과대학 별도 정원 할당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농어촌지역 지정 의료기관 복무 또는 개업하도록 한다.
-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 특성 및 지역 현황 등 분석(의료취약 등)을 통한 지역적 특성(농어촌, 도농, 도시형 구분 등)에 따른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한다.

2.6.2. 추진 실적

-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13년 보건(지)소에 배치된 인원은 전체 공중보건의사의 82.9%에 해당하는 3,876명이다.
 - ’11년 3,398명에 비하면 감소하였지만, 전체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8%에 비하면 증가하였다. (이들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보건(지)소 배치 인원에 비해 응급의료센터 등에 배치된 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역시 의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면, 감소한 인원의 배치 지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3-13. 연도별 공중보건 의사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합 계	4,543	2,901	613	1,029	4,046	2,528	569	949	3,876	2,411	485	980
보건(지)소	3,398	1,851	578	969	3,282	1,839	535	908	3,215	1,848	457	910
병원선, 이동진료반	29	14	7	8	32	15	7	7	29	15	7	7
국·공립병원	438	409	3	26	305	282	3	20	273	219	1	53
보건단체·복지시설	80	73	2	5	55	54	0	3	31	30	0	1
교정시설 등	69	51	18	0	72	53	19	0	69	53	16	0
국가보건기관	139	116	4	19	121	107	4	11	95	82	4	9
응급의료센터 등	390	387	1	2	179	178	1	0	164	164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2.7.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지방자치단체)(2011년~2014년)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는 농어촌지역 임산부를 찾아가 산전검진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낙도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선’ 운영, 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검진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12.7월~) 등이 있다.

표 3-14. 연도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추진 현황

사업	사업 추진 지역 현황			
	2010	2011	2012	2013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6개 군), 경북(9개 군), 충북(3개 시·군), 강원(5개 군)	경남(6개 군), 경북(9개 군), 충북(3개 군), 강원(6개 군)	경남(5개 군), 경북(9개 군), 충북(2개 군), 강원(5개 군)	충북(2개 군), 강원(5개 군), 제주(계획 수립)
병원선 운영	인천, 충남, 전남(2척), 경남	인천, 충남, 전남, 경남	인천, 충남, 전남, 경남	인천, 충남, 전남, 경남
찾아가는 행복병원			경북(3개 군)	경북(3개 군)

자료: <부록 4> 시도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실적 재구성

2.8. 분만취약지 지원(2013년~2014년)

2.8.1. 개요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한다.
- 지원 내용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은 선정 1차년도에는 사업 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장비비 10억 원과 6개월 간 운영비 2억 5천만 원, 총 12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2차년도부터는 사업 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지방비는 1:1 매칭이다.
 - 외래 산부인과 지원사업은 사업 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지방비는 1:1 매칭이다. 이 때, 운영비는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용도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 중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기존

의료기관에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하여 거점 산부인과로 육성한다.

-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연 분만 건수 250건 미만)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
-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불가능(연 분만건수 250건 미만)하고, 외래산부인과 설치 지원이 어려운 경우 배후도시에 거점병원 존재하는 경우는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
- ‘13년 분만산부인과 신규 4개소, 기존 5개소를 설치하며 운영을 지원한다.

2.8.2. 추진 실적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13년에 11개소에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표 3-15. 분만취약지 지원 성과목표 달성도(2013년)

단위: 개소, %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목표치(A)	실적(B)	B/A(%)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개소 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목표 대비 설치 개소 수	11	11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표 3-16. 지원 지역내 관내 분만을 및 분만실적 현황

단위: 건 수, %

선정 연도	의료기관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분만실적	관내 분만실적	관내 분만을(2013)
2011	강진의료원	17,363	11,507	139	327	42.5%
	영동병원	6,421	1,772	109	226	48.2%
	예천권병원	4,053	13,775	42	221	19.0%
2012	울진군의료원	8,734	14,657	112	340	32.9%
	삼척의료원	3,629	7,530	88	454	19.4%
2013	밀양제일병원	3,263	9,579	54	237	22.8%
	고흥종합병원	485	1,596	3	68	4.4%
	거창적십자병원	2,112	7,589	33	138	23.9%
전체		46,060	68,005	580	2,011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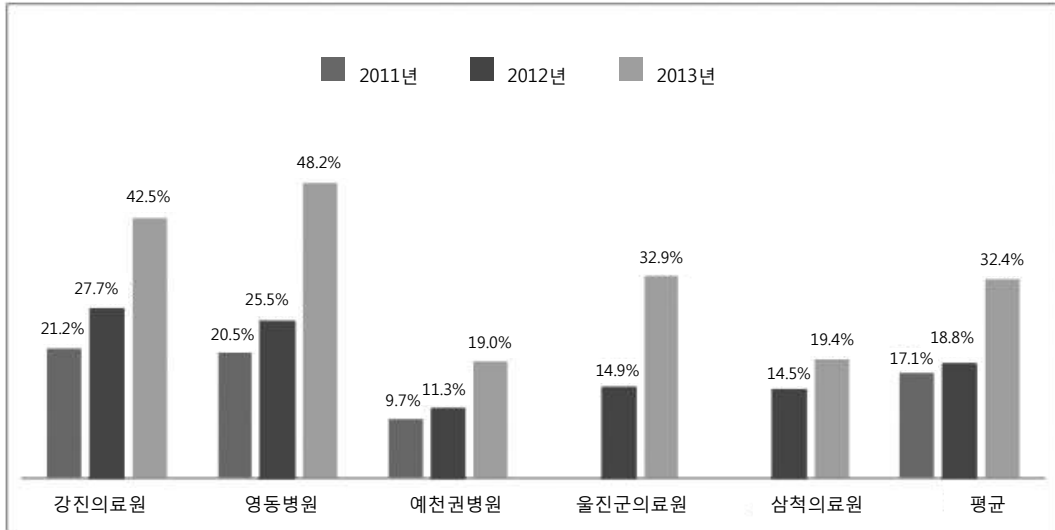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14) p.7 표 재인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관내 분만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11년~'12년 선정기관 관내 분만율 개선: 17.1%('11) → 18.8%('12) → 32.4%('13)(보건복지부 2014)
- 강진의료원: ('11) 21.2% → ('12) 27.7% → ('13) 42.5%
- 영동병원: ('11) 20.5% → ('12) 25.5% → ('13) 48.2%
- 예천권병원: ('11) 9.7% → ('12) 11.3% → ('13) 19.0%

그림 3-1. 사업기관별 관내 분만율 변화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2014) p.7 그림 재인용

제 4 장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평가

1. 정책 형성

- 형성 평가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계획)의 정책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군으로 묶일 수 있는 사업들을 살필 것이며, 이어서 정책 형성의 주요한 내용을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두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1.1. 본 기본계획의 정책적 위치

- 삶의 질 계획은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되는 다른 관계 법령이나 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본 기본계획과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따라서 본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들 역시 독자적으로 파악되기보다 이러한 다른 사업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 삶의 질 계획에 포함된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동시에 농어촌 보건의료사업의 총체 속에서 일부분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본계획 내 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은 다른 사업과의 연계 속에서 보건의료의 정책적 공백을 메우며, 다른 사업들과 더불어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가 하나의 체계로서 움직이도록 한다.

- 농어촌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는 다양한 경로로 제공된다. 민간과 공공의 의료기관, 보건소가 대표적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기관 등도 참여한다.
 -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애주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평가와 상담이 필요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이들 기관의 서비스는 농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근거 법령과 사업에 기반하고 있다<표 4-1>.

표 4-1. 농어촌 보건의료 관련 제도와 근거 법령

관계법령	보건의료 계획/사업
<i>농어촌 보건의료 관련 일반 법령</i>	
보건의료기본법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법	국민 건강증진계획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의료취약지 지정, 거점의료기관 육성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기본계획
지역보건법	보건소 설치,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건강증진 센터 설치(입법예고) 등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노인장기 요양제도
암관리법	국가암 관리사업
<i>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보건의료 관련 법령</i>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소 등에 대한 규정, 지역 보건사업 지원단의 운영 등
농어촌 특별세법	농특세 과세 규정 등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집행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농어촌 특별세에 의한 재원 지원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출처: 기명 외(2012) p.25 재인용

○ 이 사업들은 아직은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각각의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로서 범부처적(cross-governmental)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의 중복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들 사이의 정책 연계가 필수적이다.

- 특히 위에서 예시한 제도 법령 중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체계화라는 큰 틀의 골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2. 정책 목표의 타당성

1.2.1. 정책 목표의 적합성 평가

- 삶의 질 제2차 기본계획에서 보건·복지 증진 부문의 4대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농어촌 보건·의료보장 확대”는 구체적인 목표로 “응급 의료 인프라 등 공공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제시하였다.

그림 4-1. 농어촌 보건·의료 보장 확대의 정책 목표와 수단의 구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9) p.20~21 참조

- 위의 목표는 농어촌 주민의 기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가 강하다. 의료 서비스 분포의 개선과 재조직화는 농촌지역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자원의 확보는 불리한 농촌지역에서 항상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 그러나 의료 자원 분포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촌의 인구 구성, 질병 양상 등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을 담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위의 목표는 서비스 공급 측면의 접근이 강해 서비스 수요 측면에 대한 접근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연결과 전달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
 -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이 지역사업은 대형 사업에서 소형 사업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박광순 외 2001: p.78-80).
 - 고령자 중심으로 다양화·중층화되어 가는 의료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과 더불어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이에 비추어 정책 목표에서 “응급의료 인프라 등 공공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한다는 외형적 측면의 목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은 농촌의료서비스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목표를 협소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좀 더 종합적인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1.2.2. 정책 목표에 대비한 사업 구성의 적절성

- 삶의 질 계획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군은 크게 2가지 하위 목표와 5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되고, 이는 11가지 세부 사업⁶⁾을 포함하고 있다.
 - 대체로 정책 목표의 포괄적 지향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 사업의 단계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일부 영역으로 제한되고 있다.

6) 일부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서는 제외되기도 하고,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였다.

* 제 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10~'14, 보건복지부)은 3가지 중요 과제 (농어촌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농어촌 응급의료 접근성 향상, 농어촌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를 담고 있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정책수단)를 살펴보면,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5가지 세부 과제 내용 외에 구강건강서비스 강화, 암 관리 강화, 정신보건 강화,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및 한의약보건사업 활성화, 취약계층 영양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 이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정책들의 체계화와 편제에 관련되는 문제로 생각된다.

○ 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들이 조율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계획의 정책적 위치가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 삶의 질 계획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고려를 토대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 계획인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일환이 되는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특화할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이후 실행계획과 추진실적 보고서 등에서 정책 목표는 일관되나 사업 수단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2009년 5개년 사업계획 당시의 5가지 세부 사업은 2014년 9개로 늘어났다.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농어촌 보건의료기술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 사업들은 내용적인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의 중요 사업을 잘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과 같이 단년도 사업으로 농어촌 보건 의료 보장의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경우를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의료 사업의 경우 농촌지역 특수성의 맥락 하에서 사업이 계획되어야 하며, 이는 앞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담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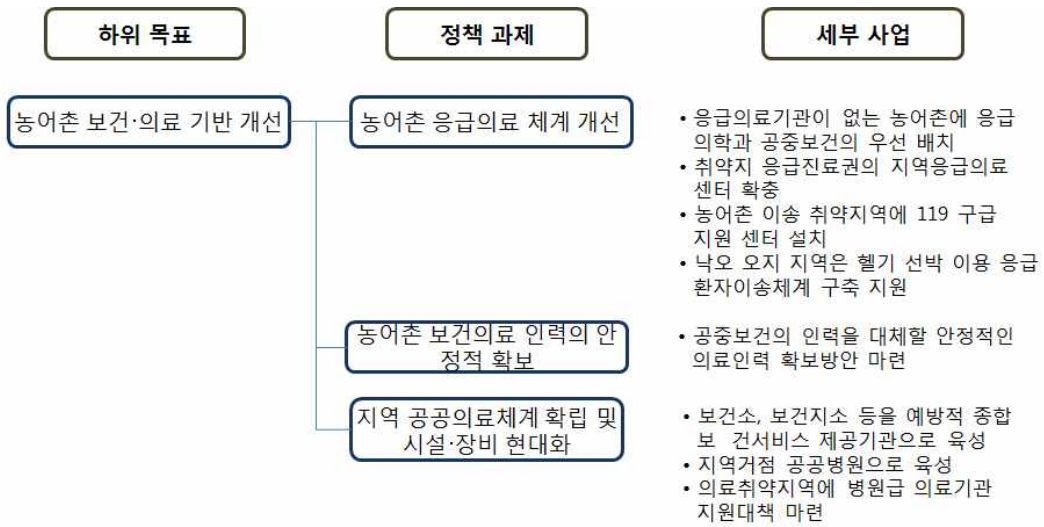
1.3. 정책 수단의 적합성

- 농어촌 보건·의료 보장 확대의 목표는 ‘농어촌 보건 의료 기반 개선’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라는 두 가지 하위 정책 목표를 축으로 하고 있다. 두 가지 정책 목표는 보건 의료 서비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구성이 적합한지, 각각의 정책 수단별 세부 사업은 그 실현에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3.1.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3가지 정책 과제, 4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대체로 응급 및 병원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급성기 치료와 보건소 중심의 예방 서비스, 농촌 보건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림 4-2. 농어촌 보건 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



- 농촌지역에서 민간의료기관의 부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공백은 영향을 받는다.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개선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열거하고 있다.
 -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에 덧붙여 취약지 주민들 스스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 등)와 후송 능력에 대한 조직화와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공중보건의를 대체할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은 그간의 공중보건의 위주의 양적 공급 중심의 보건 인력 설계에 대한 검토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농어촌 의료자원의 기반 개선을 위해 응급과 분만 취약지 선정 등 필수적인 전문의료서비스의 분포를 개선하는 것은 항상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대표되는 인구와 질환 양상의 변화는 일상적인 질환관리에서 농어촌, 특히 면지역의 보건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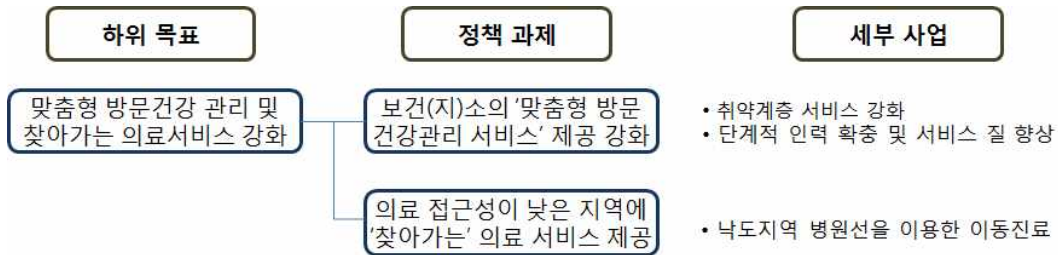
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보건기관의 장비 현대화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여겨진다.

- 그러나 지역사회 일차의료 수요에 대한 대응에서 시설과 장비 강화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와 조화를 이루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또한 지역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 현대화는 질환관리에서 공공보건기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적으로 필요하다. 보건기관은 일정 수준의 진료기능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건강검진 수검상황, 환자 현황 등 지역보건의료 정보 등이 지속적으로 환류되어야 한다.

1.3.2.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 노인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방문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강화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은 향후에도 장기적 전망을 갖고 자리잡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낙도지역 등에 대한 이동 진료는 제한적인 인구 집단에 제공되나 이들 인구에서 의의가 크다는 점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은 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후 추진실적 연차 보고서 등에서는 생략됨으로써, 주요 사업 수단으로 위치를 잡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4-3.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



2. 정책 집행

2.1. 정부 지원 방식(지자체 매칭)

- 본 연구의 평가 대상인 8개 세부사업 중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및 기능보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⁷⁾을 제외하면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국비-지방비가 일정 비율로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수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의료취약지는 비취약지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0.45배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은 1.47배에 이르는 등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 의료취약지의 경우 취약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재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의료취약지의 경우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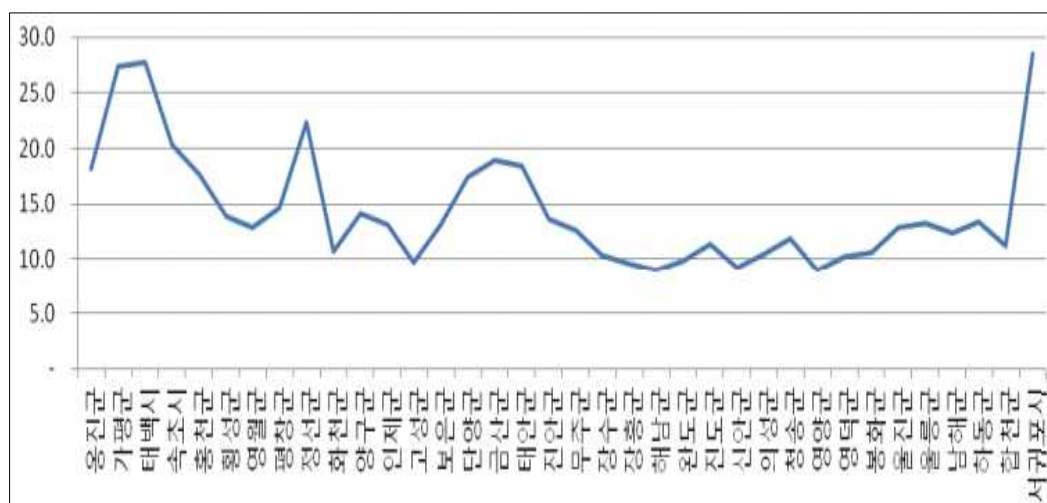
7)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기관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 지원(91%)을 하였으며, 그밖에도 장비 및 차량 등을 지원하였다.

가 비취약지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 응급의료 취약지, 산과의료 취약지 등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매칭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사업 참여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림 4-4. 의료취약지의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출처: 문정주 외(2013) p.13 그림 재인용

-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예산마저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에는 국비 100%가 지원되나, 낙도·오지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지방비가 30% 매칭되어야 한다.
- 분만취약지 사업의 경우, 사업 지원금 적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로 충당되는데, 재정자립도(자치단체 예산 대비 지방

세, 세외수입의 합)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의료취약지역 예상 지역) 입장에서는 사업 수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의 경우, 의료장비가 구비된 이동진료차량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과 함께 필요 시에는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이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필수적인 시설과 장비, 그리고 적절한 인력을 배치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현대화

- 현재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기본 원칙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매칭펀드 방식이다.
 - 지역 내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와 의지가 높음에도 매칭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경우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감소하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낮다(문정주 외 2013).
- 최근 5년 동안(2008~201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한 금액은 총 8,400억 원(개소당 연평균 50억 원)이다. 중앙정부는 시설·장비 등 자본보조에, 지자체는 매칭펀드 형식의 자본보조와 운영비 보조를 담당한다.
 - 5년 동안 중앙정부가 지원한 총 금액은 2,510억 원(29.8%)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5,903억 원(70.2%)으로 2배 이상이다.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자본투자의 50:50 매칭펀드 방식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8) 행정자치부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gah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Jarip_01.jsp)

- 이에 따라 일선 지방의료원에서는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으며, 중앙과 지방의 50:50 매칭 비율에서 지방 분담 비중을 낮추거나 최소한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 4-2. 최근 5년(2008~2012)간 지방의료원 지원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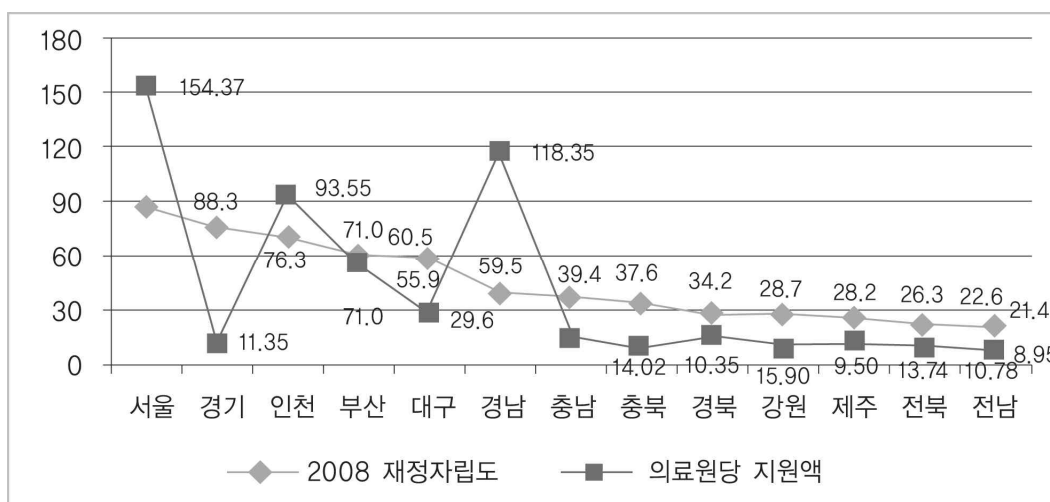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지원 주체	시설·장비 기능보강	경상 운영비	공공보건 프로그램	취약지 인건비	정보화 지원교육 등	계
중앙	2,377	-	24	9	100	2,510
지자체	2,112	3,782	-	9	-	5,903
계	4,489	3,782	24	18	100	8,413

출처: 보건복지부(2013a) p.12 표 재인용

- 서울, 인천, 부산 등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지역이 도 지역에 비해 의료원 당 지원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

그림 4-5.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2008년)



자료: 전현희 의원실(2010) 내부 자료

2.2. 시설이나 장비 위주 지원의 한계

- 지방의료원의 평균 건축 연수는 19년으로 시설은 노후하고, 장비보유율은 민간과 차이가 크지 않으나, 첨단장비 보유 대수는 다소 적어 시설장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
-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이다. 시설 및 장비 등 하드웨어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설 및 장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시설 지원 뿐 아니라, 보건 사업과 진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 응급취약지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시설과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시설 및 장비 외에도 필요한 영역의 수요(예: 인건비 등)를 간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3. 지역거점의료원 의료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 지방의 경우 의사·간호사 구인이 어렵고, 전문의 중 공보의 비율이 17%를 차지하여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 전체 전문의 817명 중 공보의는 141명(17.3%)이다.
 - 체불임금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열악한 처우, 대도시·대형 병원에 대한 선호 등으로 인력 구인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 강도 심화와 이로 인한 의료

사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 상대적으로 큰 액수는 아니나, 정부의 지방거점 공공병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시행된 공공병원의 경우 진료 실적의 긍정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정진호 외 2013).
 - 다만 간호 인력 등 보조 인력과 시설·장비의 종합적 지원 없이 의료진 개인의 파견만으로 지속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단년도의 진료 실적 변화가 개소 당 ‘1억 원’의 인건비 지원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표 4-3. 인건비 지원 파견 인력을 받은 지방의료원의 수술 및 진료 실적 변화

2012		진료과 진료실적				전체병원 진료실적			
		환자수		의료수익		환자수		의료수익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속초		0→50명	+ 32.6%	+299만원	+25.9%	+2.6%	+1.3%	+11.2%	+42%
영월	내과	+214%	+54.3%	+ 87%	+1.7%	+4.6%	+17.4%	+1.5%	+21.6%
	정형외과	+58.9%	+55%	+575%	+40.5%				
강진	내과	+ 16.1%	+ 37.7%	+ 36.5%	+ 14.8%	+47%	+35.5%	+45.5%	+33%
서귀포	신경외과	+ 4.5%	+ 31.4%	+ 23.6%	+ 64.9%	-9.8%	+0.6%	+1.6%	+4.2%

출처: 정진호 외(2013) p.58 표 재인용

- ‘의료취약지파견 의료인건비 지원제도’는 의료취약지에 근무를 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현재 지원 대상을 국립대병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취약지 내 거점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민간병원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인력 채용 및 유지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을 수행하는 취약지 내 의료기관이 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지 않을 경우 취약지 지원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 2011년부터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에 한정하여 5명 내외의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14년에는 총 30억 원의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 차등제는, 간호사 인원 증가에 따른 간호등급 상승분에 의한 가산금보다 인건비 지출이 많아 실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는 제도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 취약지 의료인의 벽지 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비과세 혜택 범위는 연간 240만 원이어서 벽지로 의료 인력을 유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의료취약지 내 중소병원의 55%가 간호등급 신청을 포기하고 있으며, 신청한 병원의 60% 이상은 간호등급이 6등급 이하이다.⁹⁾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지역병원의 경우 간호 인력의 3분의 1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다.
 -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중 20명을 초과하는 의사 수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4개 기관이며, 11~20명은 12개 기관, 5~10명은 27개 기관, 5명 이하는 34개 기관이다. 의사(522명)의 대부분은 전문의(493명)이며, 일부는 일반의(22명) 및 인턴(3명)·레지던트(4명)이다.

2.4.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수익성 개선의 딜레마

- 지역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경영 개선 노력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뒤편으로써 정책 목적이나 기대효과가 퇴색되었다.

9) 간호등급가산제는 각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1~6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등을 자체 신고, 인센티브를 받게 한 제도로 등급이 높을수록 입원관리료를 많이 받게 된다(네이버 지식백과).

-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필수적으로 취약계층 진료, 응급분만, 격리병상 운영 등 시장실패가 뚜렷한 영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수익성을 강조하는 정책 환경이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표 4-4. 전국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급여종류별 진료 실적(2006~2011)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입원	건강보험	47.0	50.4	53.2	57.1	59.2	59.8
	의료급여	40.6	35.6	34.0	30.5	28.8	28.5
외래	건강보험	70.3	66.9	70.0	74.4	73.6	73.8
	의료급여	24.4	20.1	19.0	16.3	15.0	17.1

출처: 삼일회계법인(2012)

-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진단이 경영 효율 및 경영 개선 효과 등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비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2)이 있으며, 실제 2006~2011년까지 지방의료원의 급여종류별 진료실적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등 보험환자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삼일회계법인 2012).

2.5.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의 파편성

- 2010년 이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② 응급취약지 지원사업, ③ 의료취약지 지정고시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사업 단위로 지원정책이 진행되면서, 각 사업별로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내용이 상이하며, 의료취약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예를 들어 응급의료취약지의 경우 24개 시·군 중 6개, 산과 외래 취약지

는 49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의료취약지 지원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사업 간에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특정 지역에 국한한 사업 집행 관리를 넘어서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한 정책, 효과적인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위한 시·군·구, 더 나아가 읍·면·동 지역 단위 정보의 생산,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경험의 공유와 전파 등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2.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 부재

-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 주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지난 6개월간 보건소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29.1%만이 보건소를 이용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정영호 외 2012).
- 또한, 보건소 이용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진료서비스 및 예방접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이용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 보건소를 방문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예방접종(45.7%), 진료서비스(28.5%)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이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의 1순위는 진료서비스, 예방접종, 구강보건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순이었다.
- 지난 10여 년간 보건소를 통한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체감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 2013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포괄 보조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증진 수요 체감도에 따른 사업 수행 결과가 다음 해에 환류되어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정책 성과

- 농어촌 보건 의료 기반 확충 정책의 성과는 삶의 질 계획에서 제시하는 “응급 의료 인프라 등 공공 보건 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의 달성 정도로 평가한다. 즉 ‘농어촌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살펴본다.
- 먼저, 진료과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 현황 파악을 통해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 그리고, 실제로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만족도 등으로 평가한다.
 -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현황, 조사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 농어촌 주민 체감 접근성 및 만족도 조사 결과와 함께 보다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위해 의료취약지의 의료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3.1. 농어촌 지역 진료과별 의료기관 접근성 현황

- 농어촌 지역 진료과별 의료기관 접근성을 살펴보면, 아직도 비취약지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일차 진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이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취약지의 경우 11.4%이다. 외과 22.1%, 소아청소년과 34.9%, 산부인과 51.8% 등이다.
 - 도서지역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여 진료과별로 60분 이내 접근이 불가능한 주민의 비율이 내과 53.1%, 외과 79.6%, 산부인과 82.5%, 소아청소년과 90.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체계에 해당하는 응급의료기관, 수술실, 분만실 등에 대한 접근성은 일차 진료서비스보다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기관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불가능한 농어촌 주민이 46.0%,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60분 이내 도착할 수 없는 주민은 19.4%, 분만실까지 60분 이내 도착할 수 없는 주민은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의료기관 접근성: 각 의료기관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단위: %

구분	내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외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전체 평균	1.8	3.4	8.1	5.4
취약지	전체	11.4	22.1	51.8
	도서	53.1	79.6	82.5
	육지	6.2	14.9	47.9
비취약지	0.2	0.3	0.8	0.5

구분	응급의료기관까지 3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수술실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분만실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평균	9.9	3.0	5.7
취약지	전체	46.0	19.4
	도서	62.0	53.3
	육지	44.0	15.1
비취약지	3.8	0.3	0.7

자료: 문정주 외(2013) p.18~22 참조

3.2. 의료서비스 접근성

- 의료 취약지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은 비취약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 의료기관 4개의 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11.4%(내과)에서 51.8%(산부인과)까지 달하였다. 이에 반해 비취약지의 경우 0.2%(내과)에서 0.8%(산부인과)에 지나지 않았다.
 - 응급의료기관, 수술실, 분만실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비취약지가 0.3%에서 3.8%인 것에 비해 의료취약지의 경우 19.4%에서 46.0%까지 이른다.

- 도시 근교 농어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형적인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 취약지인 경우가 많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농어촌 지역 역시 각 의료기관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도시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농어촌 일반 주민 및 의료 담당자들은 실제로 의료기관 접근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문조사에 근거한 결과는 다음의 <표 4-7>, <표 4-8>, <표 4-13>, <표 4-14>와 같다.

표 4-6. 취약지 및 비취약지의 의료기관 접근성 비교

단위: %

구분	내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외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전체 평균	1.8	3.4	8.1	5.4
취약지	11.4	22.1	51.8	34.9
비취약지	0.2	0.3	0.8	0.5

구분	응급의료기관까지 3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수술실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분만실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전체 평균	9.9	3.0	5.7
취약지	46.0	19.4	36.0
비취약지	3.8	0.3	0.7

자료: 문정주 외(2013) p.18~22 참조

3.2.1.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 거주 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때에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24.3%가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1/4 정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에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촌 주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
 - 보건진료 담당공무원 조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접근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현재와 비교하여 ‘과거 5년 전에 접근성이 더 좋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4.8%인 데 비해 ‘현재 접근성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하락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현재에 비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응급의료서비스 적시 이용 가능성에 대한 농어촌 주민 의견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N
전체		47.8	27.9	24.3	519
연령*	60세 미만	34.2	31.1	34.8	161
	60대	47.6	29.5	22.9	166
	70대	59.7	23.7	16.7	186
지역	읍면소재지	51.0	28.1	20.8	192
	읍면소재지에서 멀지않은 지역	47.6	26.5	26.0	185
	읍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46.2	27.3	26.5	132
건강 상태	좋음	52.4	22.2	25.5	149
	보통	43.9	32.1	24.1	262
	나쁨	51.4	25.2	23.4	107

주: *p<0.05

자료: 현지 통신원 설문조사 결과

표 4-8.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보건진료소장 평가

단위: %, 명

구분		좋음	보통	나쁨	N
과거 5년 전	전체	22.5	25.8	51.7	151
	일반 농어촌	22.9	29.2	47.9	96
	도서, 산간 지역(벽오지)	14.8	11.1	74.1	27
	도농 복합지역	30.0	30.0	40.0	20
현재 *	전체	34.9	36.2	28.9	149
	일반 농어촌	35.8	42.1	22.1	95
	도서, 산간 지역(벽오지)	7.7	23.1	69.2	26
	도농 복합지역	60.0	30.0	10.0	20
향후 5년 후 *	전체	59.6	21.2	19.2	151
	일반 농어촌	58.3	22.9	18.8	96
	도서, 산간 지역(벽오지)	40.7	29.6	29.6	27
	도농 복합지역	85.0	10.0	5.0	20

주: *p<0.05

자료: 보건진료소장 설문조사 결과

표 4-9.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점(농어촌 주민)

단위: %

구분	1순위 N=520	2순위 N=509
가까운 거리에 응급센터가 없다	39.6	5.1
응급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31.7	41.8
응급센터에 도착한 후 응급서비스를 받기까지의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	26.5	19.6
응급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최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7	32.8
기타	0.4	0.6

자료: 현지 통신원 설문조사 결과

표 4-10. 지역의 응급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보건진료소장)
단위: %

구분	1순위 N=144	2순위 N=144
응급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 단축(119 등 구급차 대기시간 포함)	52.1	6.3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15.3	31.9
응급의료 장비가 확충되고 현대화 되어야 한다	7.6	20.8
응급의료 전문 인력의 수를 확충해야 한다	7.6	15.3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9.0	11.8
119 등 구급차를 확충해야 한다	7.6	11.8
기타	0.7	2.1

자료: 보건진료소장 설문조사 결과

-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은 1순위로 가까운 거리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39.6%가 응답하였다. 하지만, 응급의료센터 의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1, 2순위 합치면 7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보건진료소장의 52.1%는 응급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119 등 구급차 대기시간 포함) 단축을 1순위로 꼽았다. 그리고 응급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2순위였다. 가까운 거리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신속한 이송체계 확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3.2.2. 의료기관 접근성

□ 농어촌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농어촌 지역 주민이 지난 1년간 앓을 때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동네병(의)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18.0%,

지방의료원·시도립병원 18.2%, 그 밖에 종합병원·대학병원은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보건진료소장 조사에 의하면,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와 민간 병(의)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7%와 44.2%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서, 산간 지역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p<0.05$)하게 응답자의 80%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라고 응답하였다.
- 서비스 제공자인 보건진료소장의 응답이 실제 주민 조사 결과와 차이가 크을 알 수 있다.

표 4-11.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농어촌 주민)

단위: %, 명

구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민간 병(의)원	민간 종합병원, 대학병원	기타	N
전체		18.0	18.2	48.8	14.5	0.6	490
연령 *	60세 미만	14.6	21.5	53.2	9.5	1.3	158
	60대	12.0	18.9	50.3	18.9	0.0	159
	70대	26.8	14.9	42.9	14.9	0.6	168
지역	읍면소재지	15.9	15.3	49.7	18.6	0.6	183
	읍면소재지에서 멀지않은 지역	15.7	20.9	48.3	14.0	1.2	172
	읍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23.0	19.8	47.6	9.5	0.0	126
건강 상태	좋음	23.6	17.1	44.3	14.3	0.7	140
	보통	16.7	18.0	50.6	14.3	0.4	245
	나쁨	13.5	20.2	51.0	14.4	1.0	489

주: * $p<0.05$

자료: 현지 통신원 설문조사 결과

표 4-12.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보건진료소장)

단위: %, 명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민간 병(의)원	민간 종합병원, 대학병원	기타	N
전체	53.7	0.0	44.2	2.0	0.0	147
일반 농어촌	47.9	0.0	48.9	3.2	0.0	94
도시, 산간 지역(벽오지)	80.8	0.0	19.2	0.0	0.0	26
도농 복합지역	40.0	0.0	60.0	0.0	0.0	20

자료: 보건진료소장 설문조사 결과

- 거주 지역에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만족하는 경우(22.6%)보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31.0%)가 더 많았다.

표 4-13. 지역 내 의료 접근성

단위: %, 명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N
전체		22.6	46.4	31.0	522
연령*	60세 미만	16.5	38.4	45.1	164
	60대	22.4	47.9	29.7	165
	70대	28.0	52.2	19.9	186
지역	읍면소재지	28.2	45.1	26.7	195
	읍면소재지에서 멀지않은 지역	20.3	45.6	34.1	182
	읍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17.8	51.1	31.1	135
건강 상태	좋음	27.5	40.3	32.2	149
	보통	18.6	50.0	31.4	264
	나쁨	25.9	45.4	28.7	108

주: *p<0.05

자료: 현지 통신원 설문조사 결과

- 이용기관별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살펴보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의료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 예를 들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의료 접근성 만족도 평가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18.3%)보다 만족하지 않음

(33.0%)에 더 높은 응답을 보였다.

- 반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4-14. 이용기관별 지역 주민 의료 접근성 만족도 평가

단위: %, 명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N
민간	동네 병의원	18.3	48.6	33.0	306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18.7	45.8	35.4	96
공공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33.3	46.1	20.5	117
	지방의료원·시도립병원	25.2	48.6	26.0	115
	기타	-	-	-	6

주: 의료 접근성 만족도는 응답자가 평가하는 전반적인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나타냄
자료: 현지 통신원 설문조사 결과

3.2.3. 미충족 의료 경험

- 최근 1년 동안 응답자의 28.2%가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였으며, 읍면소재지에서 멀어질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이 높아졌다.

표 4-15. 미충족 의료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N
전체		28.2	71.8	461
연령	60세 미만	31.2	68.8	154
	60대	24.3	75.7	152
	70대	29.3	70.7	150
지역	읍면소재지	24.7	75.3	166
	읍면소재지에서 멀지않은 지역	25.8	74.3	167
	읍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36.7	63.3	120
건강 상태	좋음	24.8	75.2	133
	보통	28.5	71.5	235
	나쁨	31.5	68.5	92

자료: 현지 통신원 설문조사 결과

- 미충족 의료 경험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시간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접근성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이 발생하는 비율은 크지 않았다.

표 4-16. 미충족 의료 경험의 이유

단위: %, 명

구분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기관 에 예약을 하기 힘들어서	근처에 의료기관 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서	의료기관 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증상이 가벼워 서	기타	N	
전체	13.5	10.8	31.8	10.1	18.2	6.8	6.1	2.7	148	
연령	60세 미만	14.0	8.0	34.0	4.0	24.0	10.0	2.0	4.0	50
	60대	14.3	16.7	40.5	4.8	16.7	0.0	4.8	2.4	42
	70대	12.7	9.1	23.6	18.2	14.6	9.1	10.9	1.8	55
지역	읍면소재지	17.3	11.5	23.1	9.6	23.1	5.8	7.7	1.9	52
	읍면소재지에 서 멀지않은 지역	10.4	14.6	35.4	12.5	12.5	8.3	4.2	2.1	48
	읍면소재지에 서 멀리 떨어진 지역	10.9	6.5	39.1	8.7	19.6	6.5	4.4	4.4	46
건강 상태	좋음	10.8	8.1	37.8	5.4	21.6	8.1	5.4	2.7	37
	보통	12.2	13.5	35.1	6.8	16.2	5.4	6.8	4.1	74
	나쁨	19.4	8.3	19.4	19.4	19.4	8.3	5.6	0.0	36

자료: 현지 통신문 설문조사 결과

3.3. 의료서비스 만족도

3.3.1.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병원 전 단계인 구급차 이송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병원 단계인 응급의료센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급차 이송 중 서비스에 대해서 16.5%가 불만족한 반면, 41.0%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센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23.2%가 불만족하고, 30.8%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 구급차 이송 중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지역적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응급의료센터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읍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응급의료센터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읍면소재지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35.2%, 읍면소재지 인근 지역 거주자의 30.4%는 응급의료센터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읍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24.6%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17.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N
병원 전 단계: 구급차 이송 중 의료서비스 만족도		41.0	42.5	16.5	520
지역	읍면소재지	46.1	36.9	16.9	195
	읍면소재지에서 멀지않은 지역	37.0	44.6	18.2	186
	읍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40.1	45.5	14.3	132
	미응답	-	-	-	7
병원 단계: 응급의료센터 의료서비스 만족도		30.8	46.0	23.2	517
지역	읍면소재지	35.2	43.0	21.7	193
	읍면소재지에서 멀지않은 지역	30.4	45.4	24.0	187
	읍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24.6	50.7	24.6	130
	미응답	-	-	-	7

자료: 현지 통신원 설문조사 결과

3.3.2.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

- 동네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경우(20.8%)보다 만족하지 않다는 경우(26.5%)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에 비해,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경우(21.7%)와 불만족한다는 경우(38.9%)가 많은 차이를 보였다.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지방의료원·시/도립병원의 경우, 지역 주민의 의료 욕구를 충족하도록 공공의료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31.5%)가 만족하는 경우(12.3%)에 비해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 이를 통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지방의료원·시/도립병원이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8. 의료기관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N
민간	동네 병원	20.8	52.7	26.5	279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21.7	39.4	38.9	221
공공	찾아가는 서비스	34.3	46.7	19.0	522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12.3	56.2	31.5	635
	지방의료원·시도립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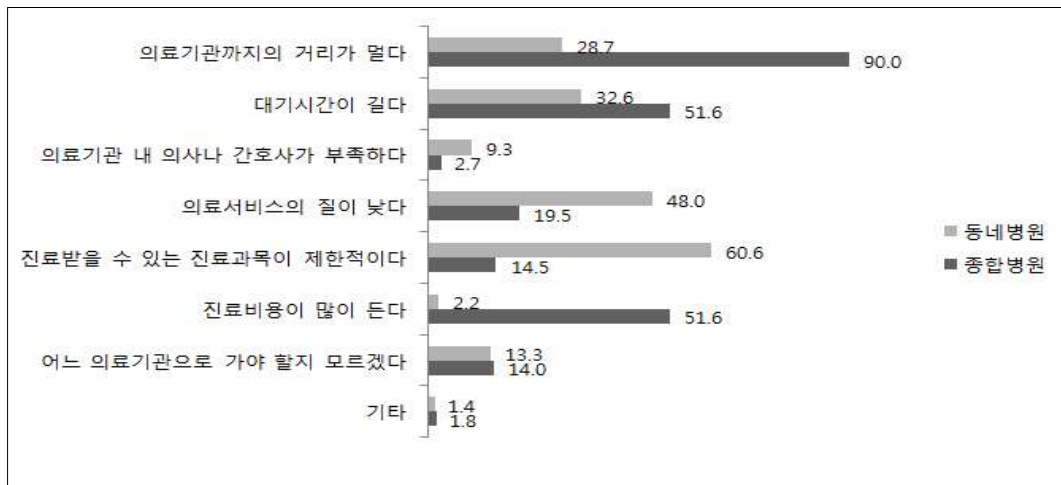
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지방의료원·시/도립병원의 만족도는 직접적인 설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록 1 설문지 12번 문항에 근거해서 산출함. 엄밀한 의미의 만족도 조사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의료욕구를 충족하도록 위 기관이 공공의료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만족도 정도를 유추하였다(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수행됨=만족, 부족하지만 공공의료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는 편=보통, 공공의료기능이 제대로/전혀 수행되지 않음=불만족).

자료: 현지 통신원 설문조사 결과

-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동네병원의 경우 제한적인 진료과목의 문제(60.6%)와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48.0%)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종합병원의 경우 이용자의 90.0%가 먼 거리를 지적하였고, 절반 정도가 대기 시간과 진료 비용의 문제를 꼽았다.

그림 4-6.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사항

단위: %



주: 중복응답

자료: 현지 통신원 설문조사 결과

- 이동진료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족한다는 의견(34.3%)이 만족하지 않다는 의견(19.0%)보다 많았다.
- 하지만, 보건진료소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8.8%는 주민들이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7.4%는 주민들이 불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보다 서비스 제공자인 보건진료소장들이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표 4-19.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보건진료소장)

단위: %, 명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N
전체	58.8	33.8	7.4	148
일반 농어촌	54.7	39.0	6.3	95
도서, 산간 지역(벽오지)	66.7	22.2	11.1	27
도농 복합지역	65.0	25.0	10.0	20

자료: 보건진료소장 설문조사 결과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주민은 찾아오는 횟수가 적은 것(40.4%)을 1순위로 꼽았으나, 보건진료소장은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없는 것(46.0%)이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 지역 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횟수를 늘리는 것도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지역 주민(4.7%)과 보건진료소장(10.1%) 모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불편사항으로 의료장비의 낙후에는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 찾아가는 서비스에 있어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의료장비 지원 및 투자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0.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

단위: %

구분	지역 주민		보건진료소장	
	1순위 N=508	2순위 N=488	1순위 N=148	2순위 N=141
찾아오는 횟수가 적다	40.4	10.2	21.0	18.4
원하는 의료 서비스가 없다	28.5	26.0	46.0	34.8
의료 인력의 전문성이 낮다	24.6	35.5	18.9	20.6
의료 장비가 낙후되었다	4.7	27.7	10.1	20.6
기 타	1.8	0.6	4.1	5.7

자료: 현지 통신원 및 보건진료소장 설문조사 결과

- 가장 불편한 점으로 찾아오는 횟수가 적다고 응답한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시·군청, 관공서, 면사무소 인접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일수록 찾아오는 횟수가 적은 것이 불편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연령별 응답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 시·군청, 관공서, 면사무소 인접지역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전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표 4-21. 찾아가는 서비스 불편사항 1순위(찾아오는 횟수)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1순위=찾아오는 횟수	
		응답자(지역 주민)	N
지역	시군청, 관공서, 면사무소 등 인접지역	38.4	203
	그 외 지역	61.6	
연령	60세 미만	30.3	201
	60대	30.8	
	70대	38.9	

자료: 현지 통신원 설문조사 결과

□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 농어촌 주민들 중에서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보건소 등이 45.5%, 지방의료원 및 시·도립병원이 32.3%, 민간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 20.8%였다.
 - 공공의료기관이 민간 병원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평가(농어촌 주민)

단위: %, 명

구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민간 종합병원, 대학병원				
	높 음	보 통	낮 음	n	높 음	보 통	낮 음	n	높 음	보 통	낮 음	n	
전체	7.4	47.1	45.5	486	14.9	52.8	32.3	464	36.6	42.7	20.8	476	
연령	60세 미만	4.5	47.1	48.4	157	11.6	53.4	34.9	146	33.3	47.3	19.3	150
	60대	7.0	46.8	46.2	158	11.8	52.6	35.5	152	31.6	45.8	22.6	155
	70대	9.6	48.8	41.6	166	21.1	52.2	26.7	161	43.7	36.5	19.8	167
지역	읍면소재지	9.5	52.0	38.6	179	15.9	52.9	31.2	170	37.3	45.8	17.0	177
	읍면소재지에 서 멀리않은 지역	6.3	42.1	51.7	176	15.3	51.2	33.5	170	35.8	42.8	21.4	173
	읍면소재지에 서 멀리 떨어진 지역	6.5	47.6	46.0	124	12.7	55.9	31.4	118	37.0	37.8	25.2	119
건강 상태	좋음	9.4	43.5	47.1	138	15.2	51.5	33.3	132	37.3	38.8	23.9	134
	보통	6.9	49.2	43.9	246	15.1	52.7	32.2	239	34.0	46.5	19.5	241
	나쁨	5.9	47.5	46.5	101	14.1	54.4	31.5	92	41.0	39.0	20.0	100

자료: 현지 통신원 설문조사 결과

- 하지만, 보건진료소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8.7%, 동네 병(의)원 19.3%, 지방의료원·시도립병원 28.1%, 민간종합병원·대학병원이 14.5%로 나타났다.

- 지방의료원·시도립병원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 지역의 공중보건이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보건진료소장에게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13.9%)이 불만족한다는 응답(39.6%)에 비해서 낮았다.

표 4-23.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평가(보건진료소장)

단위: %, 명

구분		높음	보통	낮음	N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	44.3	47.0	8.7	149
	일반 농어촌	37.9	52.6	9.5	95
	도서, 산간 지역(벽오지)	59.3	33.3	7.4	27
	도농 복합지역	45.0	45.0	10.0	20
동네 병(의)원	전체	17.1	63.6	19.3	140
	일반 농어촌	12.0	68.5	19.6	92
	도서, 산간 지역(벽오지)	22.7	59.1	18.2	22
	도농 복합지역	35.0	40.0	25.0	20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전체	15.7	56.2	28.1	121
	일반 농어촌	12.8	56.4	30.8	78
	도서, 산간 지역(벽오지)	26.3	68.4	5.3	19
	도농 복합지역	16.7	44.4	38.9	18
민간 종합병원, 대학병원	전체	44.4	41.1	14.5	124
	일반 농어촌	40.5	43.0	16.5	79
	도서, 산간 지역(벽오지)	52.6	42.1	5.3	19
	도농 복합지역	45.0	40.0	15.0	20

주: *p<0.05

자료: 보건진료소장 설문조사 결과

표 4-24. 공중보건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보건진료소장)

단위: %, 명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N
전체	13.9	46.5	39.6	144
일반 농어촌	13.8	46.8	39.4	95
도서, 산간 지역(벽오지)	12.5	50.0	37.5	24
도농 복합지역	20.0	40.0	40.0	20

자료: 보건진료소장 설문조사 결과

3.3.3. 보건의료기반 개선 사업에 대한 만족도

- 정부에서 실시 중인 농어촌 보건의료기반개선 사업에 대한 체감 만족도에 대해서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제외하고, 응급취약지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 육성사업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특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경우 만족한다는 의견은 4.1%에 불과하고,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60.7%에 이르렀다.
-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전후 대비 농어촌 보건기관 이용자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0년~2013년 이용자 수는 시설 개선 전과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년도 모두 정책 목표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만족 비율이 불만족 비율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설 개선 이후로 농어촌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평가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도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27>과 같다. 평가 결과 대부분 사업 실시 이후에 진료 실적, 주민 이용률, 주민 만족도 등이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25. 보건의료기반개선 사업에 대한 체감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해당없음	N	
응급취약지 지원사업	전체	13.0	44.5	37.0	5.5	146
	일반 농어촌	12.9	47.3	34.4	5.4	93
	도서, 산간 지역 (벽오지)	7.7	42.3	46.2	3.9	26
	도농 복합지역	20.0	35.0	35.0	10.0	2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전체	4.1	22.1	60.7	13.1	145
	일반 농어촌	4.3	20.4	64.5	10.8	93
	도서, 산간 지역 (벽오지)	4.0	24.0	60.0	12.0	25
	도농 복합지역	5.0	25.0	40.0	30.0	20
농어촌 보건의료서 비스 개선사업	전체	29.3	44.9	25.2	0.7	147
	일반 농어촌	26.6	45.7	26.6	1.1	94
	도서, 산간 지역 (벽오지)	26.9	53.9	19.2	0.0	26
	도농 복합지역	50.0	30.0	20.0	0.0	20
지역거점 공공의료기 관 육성 사업	전체	22.5	42.9	30.6	4.1	147
	일반 농어촌	20.4	40.9	34.4	4.3	93
	도서, 산간 지역 (벽오지)	18.5	55.6	25.9	0.0	27
	도농 복합지역	35.0	35.0	20.0	10.0	20

주: *p<0.05

자료: 보건진료소장 설문조사 결과

표 4-26. 시설 개선 전후 대비 농어촌 보건기관 이용자 수 증가율

단위: %

성과지표	연도	목표치(A)	실적(B)	B/A (%)
이용자 증가율	2010	0.6	0.89	148
	2011	1.0	1.14	114
	2012	1.2	1.48	123.3
	2013	1.5	1.55	103
	2014	1.8		

주: 외부리서치기관 설문조사 결과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내부자료

표 4-27. 기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평가 연구

출처	연구대상	효과평가항목	개선·미개선 정책	분석	결과
박선희 외, 2011	144개 보건소	진료실적	2001년까지 개선·미개선	Paired t-test 다중회귀(종속변수:연간진료건수)	다변량 분석에서는 시설개선의 효과 없어짐
나백주, 2010	1)149개 보건소(개선, 미개선) 2)30개 지원 10개 미지원 지역 71,382명 3)253개 보건소 4)149개 보건소 중 130개 보건소	1)진료실적/1인당 청구건수 2)혈압조절 3)이용자 설문:보건기관 이용률, 만족도 4)공무원:만족도	1)신축, 이전신축 후 2년 경과시 개선 2)개선을 80%이상 시 개선지역 3)지원·미지원/지원 내 개선·미개선 4)개선을 80% 이상, 50~80% 50% 미만지역	1)다중회귀 2)카이제곱, 로지스틱 회귀분석 3)분산분석 4)카이스퀘어	1)진료실적은 시설개선 지역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2)개선지역의 혈압조절율이 유의하게 높음 3)보건기관 이용률, 만족도에서 지원지역이 유의하게 높음. 그러나 개선사업 대상 지역 간 차이는 없음. 4)외관이미지, 내부환경에서는 80%이상 개선지역, 접근성에서는 50%미만 개선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천성아 외, 2008	6개 보건소와 59개 산하 보건소 고혈압환자 29,503명 (2005.7.1.~2006.6.30.)	혈압조절	2005.7.1.까지의 신축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개선지역의 혈압조절율이 높음
나백주 외, 2006	1)지원과 미지원 전체 보건소 2)개선·미개선 각 10개 지역 1,023명 3)144개 보건소 중 101개 회수	1)진료실적 2)주민대상 만족도, 이용률 3)공무원대상 만족도	1)지원(개선·미개선), 미지원 2)개선, 미개선 3)미개선, 전기개선, 후기개선	1)페턴관찰 2)카이스퀘어, 로지스틱 분석 3)분포관찰	1)진료실적 개선사업 지역에서만 꾸준히 증가 2)개선여부는 만족도와 이용률에 유의한 영향 3)접근성, 외부이미지, 내부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후기 개선지역으로 갈수록 높음
조개국 외, 2006	1)231개 보건소 2)2002-05년 신축 보건소 15개소, 5개 미개선, 5개 비대상 3)대상976명+비대상195명	1)진료실적:심결건소, 내원일수 등 5항목 2)이용자:만족도, 이용률 3)공무원:만족도 항목으로 시설이 쾌적함 등 8개 *지역대표자 조사도 시행하였으나 포함하지 않음	1),2),3) 지원·미지원	1)회귀분석(종속변수:5년간의 진료실적 등/ Difference-in-Difference) 2),3) 카이스퀘어	1)지원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 2)이용률, 만족도에서 지원 지역에서 더 유의하게 높음 3)모든 항목에서 개선사업 지원이후 나아짐.

제 5장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제안

1. 소결

- 농어촌은 노인 인구 비율 증가 등으로 주민의 의료 욕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 수가 적고, 소득 수준이 낮아 민간의료시장의 활성화가 어려운 지역이다.
 - 의료취약지는 비취약지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개인 소득 수준, 관내 의료 이용률 등은 낮은 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비율은 높다(문정주 외 2013).
 -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료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 공급이 매우 부족하여 의료취약지로 떨어지기 쉬운 경향이 있다.
- 농어촌의 경우 부족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공의료기관이 대체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의 지역별 양극화가 향후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삶의 질 계획에 포함된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 대상이었던 8개 세부사업은 크게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와 산과 의료의 접근성 향상, 농어촌 지역 내 전반적인 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지원, 농어촌 지역 의료인력의 확보, 부족한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세부 사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업 집행 상에 문제가 크지 않았고, 사업의 목적이나 기대효과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 추진 실적의 경우 8개 세부 사업 각각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 그러나 그러한 세부 사업별 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촌 지역의 의료취약지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매년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크지 않다.
 - 농어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고, 그나마 질적 수준이 높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기에는 물리적인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며,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을 보완해줄 수 있을 만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내 보건의료정책기반의 현실적인 목표는 도시에 비해 부족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최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보완해 주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2. 정책 제안

-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 심층평가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지자체 매칭에 의한 정부 지원 방식, 시설이나 장비 위주 지원의 한계, 지역거점의료원 의료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수익성 개선의 딜레마,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의 파편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 이상의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사업 수단 개발,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역할 제고, 기존 사업의 방향 전환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과제를 도출한다.

2.1.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지원 방안 검토

- 이상의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사업별 지자체 매칭 비율을 조정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국비 100%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보건기관 신축·증축 및 개보수, 장비 및 차량 지원을 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경우, 재정자립도 40% 미만 지자체 소재 보건의료기관은 100% 국비 지원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도 100% 국비 지원이다.
 - 하지만, 낙도·오지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30%이며,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50%, 분만취약지사업은 50%,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현대

화 사업은 50%(적십자 병원 6개소: 국비 100%),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파견 의사 인력 인건비도 지자체에서 50% 부담해야 한다. 그 밖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100% 지자체 사업이다.

-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같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재정자립도 40% 미만인 경우 100% 국비로 지원하고, 40% 이상~60% 미만인 지자체는 80%까지 국비로 지원하고, 60% 이상인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부담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2.2.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은 장기적 전망을 갖고 자리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 사업의 방향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세부사업 수단을 풍부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첫째, 방문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역 주민의 위험평가-사례관리 서비스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 방문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책정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 * 일본의 가정봉사원 제도 역시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성격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되었던 점 등을 상기할 때, 현재의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발전되어야 한다.
 - * 영국의 경우 방문서비스는 capitation fee¹⁰⁾와는 별개로 fee per item of service¹¹⁾로 지불된다.

10)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지불액(비용)을 의미한다.

11) 방문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부과되는 지불액(비용)을 의미한다.

- 둘째, 방문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고령화와 더불어 복합적이며 장기적인 사례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방문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의사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의사방문서비스는 여러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최근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 변화 역시 관찰된다. 당장은 방문관리간호사 외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앞서 언급하였듯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현 단계에서 농촌 의료서비스의 소프트웨어 강화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3. 농어촌 의료서비스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한 사업 수단 개발

- 농촌 의료서비스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사업수단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첫째, 인접서비스와의 연계가 강조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독자적 구축보다 보건·사회복지의 종합적 개념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그 정책의 영향이 미치는 장은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 * 예를 들어 허약 노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뿐 아니라 사회보호(social care),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 주택과 교통 정책 등이 지역사회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둘째, 주민 참가나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주민 간의 부조나 돌봄 기능이 지역사회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자조형(self-managed), 주민 지향형(population centred)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

으로 강화해야 한다.

- 셋째, 지역 단위 서비스 경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면지역의 자원을 시군구 단위의 자원이 보조하고, 시군구 단위 자원을 광역 자원이 보조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의 공유, 파견, 순회서비스(mandatory outreach)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4.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역할 제고

- 농촌지역 의료인력 확보는 의사인력 이외의 다른 중급 보건 인력의 양성과 공중보건의의 질적 강화로 강조점이 이동해야 한다.
 - 만성질환에 대한 대응은 기존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형태에 유연함을 요구한다.
 - * 실제 다양한 의료요구에 대한 대응에서 간호사를 코디네이터(coordinator or care manager)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Hiss et al 2007; Unutzer et al 2002).
-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보건기관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질 관리 지표의 개발과 표준화, 이에 기반한 새로운 인센티브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아울러 농촌지역의 한정된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보건기관의 기능을 복합화해 나가야 한다.

2.5. 기존 사업의 방향 전환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효율화 제고 노력 다양화 필요

-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투자 외에 비취약지 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취약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장치가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시장성이 낮아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그 지역은 응급의료취약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 일본 등의 경우 농어촌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적자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줌으로써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있다.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실효성 제고

-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점중심의 공공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경우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의 방향 전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즉,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필요한 모든 의료 수요를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민간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도모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 부처 간 협업 가능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농업안전보건센터

- 삶의 질 계획 중 보건의료기반 확충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되어온 사업들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도 농어업인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들의 연계 협력이 가능

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예방 교육을 위해 농업안전보건센터를 권역별로 7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주로 근골격계 등 급·만성 질환의 농작업 관련성과 위험요인 등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예방지침 개발 및 홍보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히 이들 센터는 주로 대학병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 내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과 협업을 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사업 대상 전문 질환에 대한 환자 발견의 경우, 권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전문질환센터나 거점의료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이나 홍보의 경우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과 연계하여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경우 효과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확충

-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의 경우 응급의료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010~2011년에 걸쳐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소방공무원 근무 형태 변화에 따른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2010년 사업이 종료되었다.
 -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펌프차에 기존의 구급차 역할을 부여한 “펌블런스(pumbulance)”를 도입하여 구급차 공백의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 하지만, 119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뿐만 아니라, 일차적인 응급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단계이다.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송 단계에서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 펌블런스의 확대와 함께 구급차에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한 인력이 동승하고, 의료장비를 구비해 나가는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 농어촌지역 진료과별 의료기관 접근성을 비교하였을 때, 응급의료기관의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외형적으로 시설·장비·인력 투입 대비 이송환자가 적어(50개소 연평균 204건) 효율성 저하가 지적되고 있으나, 면적(100km²) 당 응급실 격차가 18.5배 등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격차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원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까지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119구급지원센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2.6.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과제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전달체계 강화

- 지역별 보건의료 수요가 상이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과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계획의 모든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상명하달식의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취약성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공공의료강화를 통해 취약성을 해소하려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가 스스로의 의료취약성을 진단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와 관련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이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의료 자원, 주민의 의료 욕

구를 반영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기대할 수 있고,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는 계획 평가 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많은 기본계획이 그러하듯 삶의 질 계획 역시 부처 간 연계나 협조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밖에 없다.
 - 아울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각각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사업 실행의 추진 동력이 시군구로 내려갈수록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 보건·의료 부문은 농식품부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삶의 질 계획 내의 보건·의료 부문은 실제 사업 수행 주체인 복지부와의 연계·협조가 중요할 것이다.
- 농어촌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사업 수행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도 부족할 뿐더러 사업 인력 등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뒷받침도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향식 사업 수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 이러한 환경에서 과제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서비스의 전달체계 상에서 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관련 정책의 성과지표 개발

- 본 연구는 제2차 삶의 질 계획에 대한 심층평가 연구로 수행되었으나, 적절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제2차 계획 수립 시 제안된 보건복지 부문 성과지표는 주로 사업의 실적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측정하여 실제 사업의 실효성을 측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 따라서 차기 계획 수립 시에는 그 측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농산어촌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평가에 반영해볼 필요가 있다.
- 이때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 그리고 경제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다차원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표 5-1. 보건의료기반 개선 정책 성과지표 예시

차원 요인	개인 차원	정책 차원
물리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먼 이동거리로 인한 미충족의료율 ②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이동진료, 병원선 등) 충분성 및 만족도 ③ 주말 및 야간 진료에 대한 접근성 및 만족도 ④ 응급의료 및 응급이송체계에 대한 접근성 및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의료기반개선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자원, 전문의료기관의 불균형 개선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민간 의료기관 확보 ② 보건의료기반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③ 119 등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사회· 경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율·의료비 부담 정도 ②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충분성 및 서비스 만족도 ③ 가용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기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료비 부담 해소 정책 ②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확충 및 질적 제고 ③ 가용 의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노력
건강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관적인 건강상태 ② 3대 응급환자의 생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주민의 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파악
의료 공급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내 1차 의료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급 의료기관의 접근성 및 의료 서비스 만족도 ·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접근성 ② 지역내 2차 의료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급 의료기관의 충분성 및 의료 서비스 만족도 · 입원의료 및 보다 전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 및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취약지 개선 사업 · 필수진료과목 개설 및 지원 ②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의 만족도 ③ 취약지 의료인력 및 장비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차원 요인	개인 차원	정책 차원
	③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충분성 및 만족도 · 부족한 민간의료기관을 대체하여야 하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 ④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공보의 등), 시설 및 장비의 충분성 및 만족도	· 의료인력 확보, 공공 및 응급의료 전문인력 교육

□ 지역 주민의 욕구 조사 및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제공자와 수요자의 의견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미충족 의료 경험의 주요 원인이 거주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읍면소재지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높아진다. 물리적 접근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 정책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7. 운영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 보강 사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역 내 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내 보건의료 문제들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나 지방의회의 정당 간 구성 비율 등에 따라 인식과 지원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지역거점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 최근의 예로 진주의료원 및 속초의료원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정부(보건복지부)는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폐업이나 파업·직장폐쇄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관여 수단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2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제 6 장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개요 및 평가 방법

1. 농어촌 지역의 교육 특성 및 정책 개요

1.1. 농어촌 지역의 교육 특성

-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 부문에서 나타나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은 일반적 의미로 읍·면 지역, 농어업 또는 농어업 관련 산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 농어업 인구가 많은 지역을 말한다. 농어촌 지역의 특징은 교육 여건 및 교육 결과 측면에서 도시와 차이를 보인다.
-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여 학교가 소규모화되는 한편, 다문화 가정 및 조손 가정 등의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학교 소규모화는 농어촌 교육 여건을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복식수업, 비전공자 수업 등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행정적 업무 부담과 학급 편제 및 업무 분장 등으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어 이들이 농어촌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둘

째, 학생들의 또래 집단 형성이 곤란하여 학습 동기와 학습 효과가 저하되며, 셋째,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우수 학생들의 도시 유출 및 학업 중단 학생의 증가 현상을 가속화한다(김승보 2014).

- 또한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 학생 수는 2011년 14,391명에서 2013년 19,674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다문화 학생 중 35.3%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교육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 또한 같은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발전 정도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간 교육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 공동체를 통해 생활과 삶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을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2a).
-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도시 지역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고 지역 주민의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모두에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이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부족 및 지속적인 감소, 결혼 가정의 증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기회, 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학부모의 경제적 지위, 부족한 정책적 지원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마상진 2010).
 - 지역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대도시 학생들의 우수학력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중소도시와 읍·면의 순이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읍·면 학생들의 우수학력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간 우수학력 비율의 격차는 커진다.

-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비교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약 1.6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은 61개만 증가하여 평생 교육기관의 공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수는 농어촌 지역이 3,000여 개에 불과하였으며, 대도시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에 치우쳐져 있었다(송미령·노승철 2013).

1.2. 정책 개요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복지 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 여건 향상’,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의 7대 부문별 목표를 수립하였다.
- 7대 부문 중 ‘교육여건 개선’ 부문의 목표는 농어촌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교육력 강화이다.
 -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②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 확보, ③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기회 제공의 세 가지 과제가 제시되었다<그림 6-1>.

그림 6-1.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부문의 목표와 주요 과제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9)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농어촌 전원 학교 및 연중 돌봄학교 육성, 기숙형 고교 운영 내실화 등이 있다. 관련 사업 들은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가 능케 하는 교육·복지 학교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 확보 정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원 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및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임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관련 사업들은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능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정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학 자금 지원 확대, 지역 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등이 있다. 관련 사업들은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비를 줄이고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부분의 3개의 정책 중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과 관련된 제반 사업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현재 6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그림 6-2>.

그림 6-2.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관련 세부 과제



자료: 농림수산물부(2009)

- 2011년에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이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으로 통합되었고, 2011년 부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다. 또한 2013년에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과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8가지 사업 중 통합된 사업과 종료된 사업을 제외한 6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 8개 사업 중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은 교육부 소관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교육부의 담당부서를 정리하면 <표 6-1>과 같다.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은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된다.

표 6-1. 사업별 교육부 담당부서

구분	교육부
	담당부서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학생복지정책과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방과후학교지원과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학교정책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지방교육재정과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학생복지정책과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학생복지정책과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조직도·직원 및 연락처)¹²⁾

2. 심층평가 방법

2.1. 평가 관점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심층평가의 목적은 거시적, 종합적 관점에서 학교 육성 정책 사업이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심층평가는 정책 형성-집행-성과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육성 정책의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http://www.moe.go.kr/web/100034/site/contents/ko/ko_0361.jsp(2014년 10월 30일 접속)

- 정책 형성에서는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 내에서 학교 육성 정책군의 정책 목표가 삶의 질 향상 목표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개별 사업의 목표와 정책 목표가 부합하는지, 정책 수단으로서 개별 사업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 정책 집행에서는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적절한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도가 어떠한지, 예산 집행 여건이 적절한지, 사업 운영상의 기타 애로사항이 없는지 평가하였다.
 - 정책 성과에서는 개별 사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사업 담당 기관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지역사회의 인식은 어떠한지 평가하였다.
- 심층평가 관점을 반영한 연구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학교 육성 정책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학교 육성 정책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학교 육성 정책의 개선점 및 제3차 기본계획의 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평가 내용, 연구 방법 및 산출물은 <그림 6-3>과 같다.

그림 6-3.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심층평가 연구 내용



2.2. 평가 지표

○ 심층평가 지표는 정책 형성-집행-성과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평가 방향 및 대상은 <표 6-2>와 같다.

- 정책 형성 부분은 ‘정책이 적절히 잘 형성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평가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목적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 세부 사업과 정책 목적 간의 상충관계는 없는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사업들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정책 집행 부분은 ‘정책이 잘 집행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

표로 구성하였다. 평가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세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예산 집행 여건의 적절성, 기타 사업 집행 상의 애로사항을 점검하였다.

- 집행 성과 부분은 ‘정책의 성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사업 계획 당시 수립한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사업 담당 기관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지역사회의 인식은 어떠한지 평가함으로써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영향과 향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표 6-2. 정책의 형성, 집행, 성과에 관한 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 지표	세부 내용
정책 형성	정책 목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측면에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을 통하여 향후 달성되어야 할 농어촌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개별 사업의 목표와 정책 목적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교육부문 목표에 각 사업이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가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사업의 목표에 각 사업이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가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사업의 목표에 각 사업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 수단으로써 개별 사업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예산 규모의 수준이 목표 달성에 적절했는가 • 각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예산 규모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 집행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집행 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어떠한가 •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확대되어야 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무엇인가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 •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예산 집행 여건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예산 집행 여건은 적절한가

평가영역	평가 지표	세부 내용
	기타 사업 집행 상의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집행 상의 기타 애로사항이 있는가 •사업 집행 상의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무엇인가
정책 성과	성과 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 정도는 어떠한가
	사업 담당 기관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사업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각 사업의 성과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 사회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지역 주민은 농어촌 교육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개선점은 무엇인가 •학교 통폐합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농어촌 지역의 학교 시설은 주민들의 체육, 문화, 교육 등을 위해 얼마나 활용되는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등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가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중 확대·강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2.3. 평가 방법

- 학교 육성 정책의 평가는 각 지표별로 문헌분석,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방법 중 분석 대상은 아래 <표 6-3>과 같다.

표 6-3.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세부 내용	문헌 분석	인터뷰 및 설문조사			
				①	②	③	④
정책 형성	정책 목표의 적절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측면에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	○	-	-	○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	-	-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을 통하여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	○	○	○	-
	개별 사업의 목표와 정책 목표의 부합성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교육부문 목표에 각 사업이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가	-	-	○	○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사업의 목표에 각 사업이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가	○	○	○	○	-
		학교 육성 사업의 목표에 각 사업이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	○	-
	정책 수단으로서 개별 사업의 적절성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예산 규모의 수준이 목표 달성에 적절하였는가	○	-	○	○	-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예산 규모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	○	-	
정책 집행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 정도	사업 집행 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어떠한가	-	-	-	○	-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확대되어야 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무엇인가	-	○	-	○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정도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	-	-	-	○	-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	-	○	-
	예산 집행 여건의 적절성	사업 예산집행 여건은 어떠한가	-	-	○	○	-
	기타 사업 운영의 문제점	사업 집행 상의 기타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	○	○	-
사업 집행 상의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무엇인가			-	○	○	-	
성과 목표 달성도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 정도는 어떠한가	○	-	-	-	-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세부 내용	문헌 분석	인터뷰 및 설문조사			
				①	②	③	④
정책 성과	사업 담당 기관의 만족도	각 사업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	-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	-	○	○	-
		각 사업의 성과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	○	-
	농어촌 교육여건에 대한 인식	농어촌 지역 주민은 농어촌 교육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가	-	○	-	-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개선점은 무엇인가	-	○	-	-	-
		학교 통폐합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	○	○	○	○
		농어촌 지역의 학교 시설은 주민들의 체육, 문화, 교육 등을 위해 얼마나 활용되는가	-	-	-	-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등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	-	-	-	○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	-	-	-	○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중 확대·강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	-	○
농어촌 지역 주민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	-	-	○		

주: ① 농촌교육전문가, ② 시도별 사업 담당자, ③ 학교 사업 담당자, ④ 현지통신원

○ 문헌분석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서, 회의자료, 공청회 자료, 사업 성과 보고서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정책 형성 영역 평가를 위하여 사업 도입 당시의 사업계획서, 보고서, 회의자료를 고찰하여 어떠한 필요와 요구에 의해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사업 목표 및 계획은 적절하였는지 평가하였다.

- 정책 집행 영역 평가를 위하여 공청회 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고찰하여

사업의 추진체계, 운영상의 성과 및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 정책 성과 영역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작성 및 보고된 사업 성과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추진 실적을 분석하였다.
- 정책 형성-집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 사업별로 교육부 담당자, 농촌교육전문가, 시도별 사업 담당자, 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하여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인터뷰 대상 사업은 <표 6-4>과 같다. 교육부 담당자,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는 7개 사업 모두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농촌교육 전문가에게는 7개 사업 중 잘 알고 있는 사업에 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과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은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가 응답하기 적절하지 않아 농촌교육전문가와 시·도 교육청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6-4. 사업별 인터뷰 실시 여부

구분	농촌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	○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
기숙형 고교 지정 육성		○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	-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	○

- 농촌교육전문가는 농촌교육관련 전공 교수, 농촌교육 현장전문가 등의 16명의 전문가에게 서면 인터뷰를 의뢰하였고, 총 11명의 전문가가 서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각 사업별 인터뷰 대상자 및 응답자 수는 <표 6-5>와 같다.

표 6-5. 농촌교육전문가 대상자 및 응답자 수

구분	대상자 선정 수	응답자 수
농촌교육관련 전공 교수	10명	6명
농촌교육 현장전문가	6명	5명
계	16명	11명

-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각 사업별 인터뷰 대상자 및 응답자 수는 <표 6-6>과 같다.

표 6-6.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대상자 및 응답자 수

구분	대상자 선정 수	응답자 수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14명	9명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	-
기숙형 고교 지정 육성	13명	5명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9명	2명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5명	5명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11명	6명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14명	9명
계	66명	35명

- 현지통신원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656명이 응답하였다.

표 6-7.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및 응답자 수

구분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수	응답자 수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2012년 지정형	15교	9인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n	n	4인
기숙형 고교 지정 육성 사업	2009년 선정학교	68교	17인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2013년 선정학교	50교	17인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2,000개교 대표 선도 교사	20명	7인
계	총 123교		40인

제 7 장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추진 현황

1. 연도별 추진 현황

-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매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현재는 2009년 12월에 수립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7개 부문 중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부문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추진 목적은 농어촌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를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 특히 이는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재정투자 기피 등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추진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관련 사업들의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그림 7-1> <그림 7-2>.

그림 7-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과제의 연도별 추진 현황(1)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계획)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초·중학교 110교 •790억원	•초·중학교 140교 •513억 원 (’09 110교, ’10 30교)	•초·중학교 570교 ¹⁾ •405억 원(돌봄학교 278억원) (’09 110교, ’10 30교, ’11 48교, 돌봄 382교)	•초·중학교 289교 •143억 원 (’10 30교, ’11 48교, ’12 211교)	•초·중학교 156교 •190억 원	•초·중학교 96교 •27.9억 원 (’11, ’12 33교, ’13 63교)

1) ’09년에 지정된 농어촌 전원학교 110는 ’11년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나, 신규로 전원학교 78교 추가지정과 연중 돌봄사업 382교를 통합하여 총 570교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초·중학교 378교 •289억 원	•초·중학교 383교 ²⁾ •230억 원
------------------------	--------------------------------------

2) 연중 돌봄학교 383교 중 2011년에 충북 원남중과 속리중이 속리산중학교로 통합 하면서 지정학교수 382교로 변경된 후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으로 통합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140개 시·군 초·중·고교 (14,605개 학급) •382억 원	•140개 시·군 초·중·고교 (16,210개 학급) •421억 원	•140개 시·군 초·중·고교 (17,162개 학급) •515억 원	•140개 시·군 초·중·고교 (46,948개 학급 ³⁾) •657억 원	•140개 시·군 초·중·고교 (45,998개 학급) •973억 원 ⁴⁾	•140개 시·군 초·중·고교 (46,401개 학급) •975억 원
---	---	---	--	---	---

3)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어촌 지역 지원학급을 학년당 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서 전체학교로 확대

4) 2013년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농어촌 토요프로그램 지원금 23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보통교부금 총 973억 원으로 확대 지원

그림 7-2.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과제 의 연도별 추진 현황(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계획)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68교, 2,378억 원		•150교, 45억 원	•150교, 213억 원	•150교, 247억 원	•150교, 177억 원
5) '08년 82개교(3,191억 원), '09년 68개교(2,378억 원)를 선정하여 총 150개교에 시설비 5,551억 원 지원, 2011년부터는 기숙사 운영비(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운영비, 급식비) 지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9개 군 지역 초·중·고등학교, 619억 원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13개 지역, 83억 원	•13개 지역, 59억 원	•13개 지역, 95억 원	•13개 지역, 124억 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20교, 100억 원			•50교, 252억 원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초·중학교 300교, 35억 원			•초·중학교 2000교, 136억 원 ⁶⁾	
6) '13년에 선정된 300개교에 지속 지원(6억 원), '14년 신규 1,700개교에 지원(약 110억 원), ICT 활용 체험학습 역량 강화(약 20억 원)					

- 2009년 주요 추진 과제 중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은 2009년 6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96개교를 대상으로 27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은 2008년 1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11년부터 전원학교 육성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46,401개 학급을 대상으로 97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4년에는 150개교를 대상으로 177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에 종료되었다. 2014년 현재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전남, 경북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이 계획되어 있다.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2011년에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이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원학교 지원 대상 학교 수는 초·중학교 570교가 되었다. 이는 2010년에 지정된 전원학교 30교, 2011년에 지정된 전원학교 48교와 돌봄학교 382교가 통합된 결과이다.
 - 통합되기 전, 2010년 돌봄학교 사업 대상 학교 수는 383교였으나, 2011년에 충북 원남중과 속리중이 속리산중학교로 통합하면서 학교 수가 382교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전원학교 육성 사업으로 통합된 학교 수는 382교이다.

- 2013년에는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과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다.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전원학교), 고등학교(기숙형 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중학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20교, 2014년 30개 학교, 2015년 30개 학교에 3년간 학교당 총 15억 원을 지원한다.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은 스마트 기기, 무선 인터넷망, 스마트 멘토링 등을 활용하여 농산어촌 초중학교의 온라인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300개 학교에 6억 원, 2014년 1,700개 학교에 110억 원을 지원하였다.

2. 과제별 추진 현황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시행 중인 6가지 사업과 2010년도에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으로 통합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과 2011년도에 종료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8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8가지 사업 과제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평가를 진행할 것이다<표 7-1>, <표 7-2>.

표 7-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사업 종합(1)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사업 목적	농어촌 지역의 중심학교에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 여건 개선	학기중, 방학중, 주말에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하여 교육복지 여건 강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실시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기숙사 시설 지원을 통해 통학여건 개선 및 실질적 교육력 제고
기간	2009~현재	2008.12~2010	2006~현재	2008~현재
대상 및 조건	2011, 2012년 지정형 전원학교 33교,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한 63교	농어촌 지역 초·중학교	농어촌 지역 학급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급)	기숙형 고등학교 (군 및 도농복합도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 내용	농어촌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65일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 교육력 향상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간 및 학교·지역간 연계 지원, 협의회 구성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컴퓨터 및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시설 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인건비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기숙사 시설비 소요액의 50% 지원
지원 금액 및 형태	특별교부금 9.9억 원(33개교), 보통교부금 약 18억 원(63개교)	806억 원 (특별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대응투자의 형태)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975억 원	17,683백만 원 (시·도교육청 지방비)
현황	96개교	383개교	농어촌 지역 46,401 학급	150교
추진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기본법 제14조」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추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도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추후 계획	2013-17년까지 총 156개교로 확대하고, 69.3억 원 지원 예정	2011년부터 전원학교 사업에 통합	2017년까지 231,927 학급에 5년에 걸쳐 4902억 원 지원 계획	2014년 기숙형 고교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연구 수행, 현장 컨설팅 등 계획

표 7-2.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사업 종합(2)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사업 목적	군 단위 농어촌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	열린 평생교육기관으로써 학교 역할을 정립하여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	학생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 악순환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 육성	농산어촌 초중학교의 온라인 체험학습 활성화
기간	2009~2011	2009~현재	2013~현재	2013~현재
대상 및 조건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전체 초·중·고등학교(사업 대상 공모에 따른 지원)	농어촌 지역 초·중·고교 및 지역 주민	면 소재 중학교 (재학생 60명 이상)	농산어촌 초·중학교 (ICT 활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등 우선 선정)
지원 내용	3개의 유형 (1유형: 초중고 통폐합+병설유치원 통폐합, 2유형: 초중고 통폐합, 3유형: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 유치원 신설)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내실화,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시설비, 인건비, 기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통학버스 등) 지원	스마트 기기(10대 내외), 무선 인터넷망, 스마트 멘토링(40회 내외), ICT 콘텐츠 활용 연수 등
지원 금액 및 형태	619억 원(국고 250억 원, 특교 369억 원)	100% 지방자체단체 예산	1개 학교당 1년에 5억씩 3년 지원(특교)	특별교부금 136억 원
현황	전남 함평, 함평 거점중 및 거점고 신설, 경북 안동, 웅부중 신설, 경북 울릉, 울릉중 신설	강원(301개교), 충남(69개기관), 전북(33개), 대구(47개교)에서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 실시	현재 50개교 (2015년까지 80개교)	2,000개교
추진 근거	「교육기본법」 제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 시설의 이용),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 제30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추후 계획	2011년부터 지역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내 통폐합, 재배치에 대한 초기사업비 지원	-	2015년 30교 추가지원 계획	2013~2017년까지 4,000개교에 총452억 원 지원 계획

2.1.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2.1.1. 사업 개요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우수인력 배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2009년부터 면 소재 61~200명 내외 규모인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형, 공모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였으며, 유형에 따라 학교당 3년간 4억 5,000만원~15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 종합형, 시설 지원형, 프로그램 지원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 농어촌 학교 환경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시설과 환경이 노후화되고, 학교 환경의 열악성이 가중됨에 따라,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및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특히 농어촌 경제의 쇠퇴, 인구 공동화에 따른 학생·학교 수 감소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 지원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여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우수인력 배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생이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 농어촌 전원학교는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

연친화적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e-러닝 교실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였다.

- 자연 친화적 시설로서 자연체험 학습장, 텃밭, 태양광 및 지열 시설, 생태 연못, 산책로 등을 구비하고 교실 현대화와 e-러닝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고자 하였다.

○ 또한 전원학교의 학교 규모는 작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학교 실정에 따라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정규 교육과정, 다양한 방과후 교육,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 특색 있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영어, 문화 예술, 체육,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 간, 학교(급)간 연합 운영, 다양한 인적 자원 활용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 또한 도농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도농 간 학교결연 프로그램, 단기 교환 방문 및 교육 프로그램, 중장기적 산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 도시 학생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 1촌 1사 프로그램 연계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 전원학교에 우수 인력을 배치, 활용하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 교장·교사 공모제 실시, 교사 초빙 비율 확대, 인턴 교사 등 학습 보조 인력,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 학생 모집의 자율권 부여, 순환근무제 개선을 통한 희망 교원의 지속적인 근무여건 조성, 교직원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였다.

○ 전원학교 운영 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의 문화, 교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고, 학교 내 가칭 지역사회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

키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 통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가칭 학교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된 학교발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시도하려고 하였다.

- 농어촌 전원학교와 연중 돌봄 사업의 통합으로 전원학교의 체험중심 교육과정과 연중 돌봄학교의 복지지원 기능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전원학교 사업에 돌봄 기능까지 포괄하는 우수학교 육성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교육부, 사업관리 지원센터,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기본계획 수립, 대상 학교 최종 확정 및 사업비 지원, 사업 평가 등 총괄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사업관리 지원센터는 사업 평가·관리 전담, 단위학교 컨설팅, 관계자 연수, 첨단 e-러닝 교실 운영 등 지원, 사업 홍보, 정보제공, DB 구축 및 사업 관련 안내, 농어촌 교육 발전방안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 시·도교육청은 사업 대상 지역교육청 심사·추천, 전반적 사업관리 수행, 사업 학교 지원계획(교장공모제·교사초빙제 실시, 자율학교 지정 등 행정적 지원, 연수 및 평가 등)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 교육지원청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조정하여 전원학교 선정·추천 및 사업학교 지원, 프로그램 기획자(평생교육사) 채용,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학교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한다.
 - 단위 학교는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자율 운영, 지역 주민과 협력체제 구축,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학교시설 지역 주민에 개방 등 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개요를 요약하면 <표 7-3>과 같다.

표 7-3.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과 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우수인력 배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 모델 창출 	
사업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교육청 면소재의 학생수 61~200명인 초·중학교 중 지정형, 공모형 두 유형으로 지원 	
사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부터 진행 중 	
사업 규모	지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선정 후 3년 동안 지원
	지원 학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66개교 지원 - 2009년 110개교 선정 - 2010년 30개교 선정 - 2011년 48개교 선정 (돌봄학교 382개교와 통합) - 2012년 15개교 선정 - 2013년 63개교 선정
	지원 예산액 (지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에 따라 교당 4.5억~15억 원 지원(3년간)/특별교부금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 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 생태체험학습, e-러닝 인프라 구축 강한 프로그램 : 체험중심 교육과정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우수인력 배치·활용 : 교장공모제·교사초빙제·기타 지원인력 배치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연계 : 시설개방, 주민참여프로그램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 강화 : 자율학교 지정 등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학교 선정 시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 실시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 및 인근 학교·지역대학·아동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2.1.2. 사업 추진 현황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과 시·도 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한 보통교부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15년에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표 7-4>.

표 7-4.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시행 계획

단위: 백만 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특별교부금)	자부담	합계
2013	156/156		5,490		5,490
2014	96		990		990
2015	78		450		450
2016	63		-		-
2017	63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 2014년도 현재 총 96개의 초·중학교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96개교는 2011, 2012년 지정형 전원학교 33교와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 2013년 지정형 63교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선정된 학교는 다음과 같다<표 7-5>.

표 7-5. 농어촌 전원학교 선정 현황

유형	시도	학교 수
2012년 지정형	인천	1
	경기	1
	강원	1
	충북	1
	충남	1
	충남	1
	전북	1
	전남	4
	경북	2
	경남	2
	2011년 지정형	강원
충남		2
전북		1
전남		10
경북		1
	경남	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2.2.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2.2.1. 사업 개요

-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은 농어촌 학교·학생에 대해 학기 중, 방학 중, 주말에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교육복지 여건을 강화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계획되었다.
-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은 2008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2개 시·도교육청의 군 지역 면 소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교육청이 지역·학교의 교육발전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및 협력 의지가 있는 관내 면 소재 학교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선정하고 심사 후 교육부에 추천·지원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사업 대상 학교에게는 특별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대응 투자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1차년도에는 특별교부금 100%, 2, 3차년도에는 특별교부금 70%와 대응 투자 30%의 형태로 지원한다.

-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은 그간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과 같이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경제적 취약성, 도농 간 교육 격차 심화 등의 문제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농산어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읍·면지역의 교육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면지역 교육의 열악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돌봄학교 사업에 대한 추진이 더욱 강조되었다.
- 또한 농산어촌 지역 가정결손의 심각성을 고려한 교육·복지적 접근을 추구하여 면지역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를 강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은 12개 시·도교육청의 군 지역 면 소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농산어촌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통해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 사업 연계를 통해 농산어촌 학생에게 365일 교육복지, 연중 돌봄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간 및 학교·지역 간 연계, 협의회 구성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학기 중에는 일과 전·일과 중·일과 후에 학생의 학습결손 치유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주말 및 방학에는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신하여 학교 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학습·문화·보건·의료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농산어촌 지역 여건 및 소규모 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 및

기초학력 증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 학교 간 시설 공동 활용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교육부, 사업관리 지원센터,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는 기본계획 수립, 대상학교 최종 확정 및 사업비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 시·도교육청은 사업대상 지역교육청 심사·추천, 전반적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사업학교 지원계획(각종 행정적 지원, 연수 및 평가)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 지역교육청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조정하여 사업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 단위학교는 학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자율 운영, 지역 주민 협력체제 구축,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개요를 요약하면 <표 7-6>과 같다.

표 7-6.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표	• 농어촌 학교·학생에 대해 학기중·방학중·주말 등에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교육복지 지원 강화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도모	
사업 지원 대상	• 12개 시·도교육청의 군지역 면소재 유·초·중·고 2개 이상의 학교로 구성(학생총수 200명 이상)	
사업 기간	• 2008. 12월부터 2010년	
사업 규모	지원 기간	• 대상 선정 후 3년 동안 지원
	지원 학교 수	• 총 383개교 지원 - 2009년 378개교 선정 - 2010년 5개교 선정
	지원 예산액 (지원 형태)	• ('09~'11) 806억 원 • 지원 형태: 특교 100%(1차년도), 특교 70% + 대응투자 30%(2,3차년도)
지원 내용	• 학기중 : (일과전) 독서교육, (일과중) 특성화 정규교육과정 및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일과후) 공부방·야간보육교실 등 • 주말·방학 : 학교간 연계 체험학습, 문화예술교육, 방학 돌봄교실 등 • 복지지원 : 급식지원, 통학서비스, 보건서비스, 저소득층 자녀 복지지원 등	
사업 관리	• 사업학교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14조」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추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2.2.2. 사업 추진 현황

-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0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부터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으로 통합되었다<표 7-7>.

표 7-7.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시행 결과

단위: 억 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 회계	기금등			
2009	383					298		298
2010	383					230		230
2011	383					278		27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은 현재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으로 통합되었으나 시행 기간 동안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8>과 같다. 학교 수는 2010년 378교에서 2011년 383교로 확대되었다. 2010년 연중 돌봄학교로 선정된 11개 학교는 전원학교로 전환되고 16개교가 추가로 선정되었다. 2011년에는 1개교가 폐교되고, 12개 시·도, 86개 군에서 총 382개교가 선정, 운영되었다.

표 7-8.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현황

단위: 개

년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2009	10	2	9	2	15	55	45	44	38	47	77	34	378
2010	10	2	9	2	15	55	47	44	39	47	77	36	383
2011	10	2	9	2	15	55	46	44	39	47	77	36	38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2.3.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2.3.1. 사업 개요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방과후 교육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06년 시작되었으며,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보통 교부금(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제외: 별도 기준에 의해 교부)을 지방비 100%로 지원한다.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06년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개발 및 지원 사업’ 시범 실시로 인해 추진된 사업으로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전체 학교의 학급을 대상으로 한다.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다양한 양질의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만족

도 제고 및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 방과후학교 종합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 순회강사 및 지역연합을 통해 소규모 학교 간 방과후학교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 지역사회의 우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 교육부는 기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교부 시,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기준 재정 수요를 산정해야 한다.
 - 시·도교육청은 사업 대상에 대한 전반적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사업학교 지원계획(각종 행정적 지원, 연수 및 평가)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 지역교육청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조정하여 사업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 단위학교는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개요를 요약하면 <표 7-9>와 같다.

표 7-9.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양질의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지원 대상		•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전체
사업 기간		• 2006년~현재
사업 규모	지원 기간	• 별도 기간 제한 없음
	지원 학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4,605개 학급 • 2010년 16,210개 학급 • 2011년 17,162개 학급 • 2012년 46,948개 학급 • 2013년 45,998개 학급 • 2014년 46,401개 학급
	지원 예산액 (지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재정정보통교부금 975억 원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제외(별도 기준에 의해 교부)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은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강사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컴퓨터 및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 •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등
사업 관리		-
추진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도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2.3.2. 사업 추진 현황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4년도 현재 총 46,401개 학급을 대상으로 있으며, 향후에는 학급 수 변화 없이 지원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표 7-10>.

- 농어촌 지역은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인해 수익자 부담이 가중되어 방과후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사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컴퓨터 및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및 운영비,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인력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표 7-10.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단위: 백만 원

	사업규모 (학급)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회계	기금등			
2013	46,323	-	-	-	-	97,325	-	97,325
2014	46,401	-	-	-	-	97,489	-	97,489
2015	46,401	-	-	-	-	97,976	-	97,976
2016	46,401	-	-	-	-	98,465	-	98,465
2017	46,401	-	-	-	-	98,957	-	98,95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2.4.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2.4.1. 사업 개요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은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격차 완화, 학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 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은 2013년부터 기숙사 운영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장학금 지급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으로 기숙사비를 경감하였다.
-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교육 격차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다.
 - 2008년도에는 농산어촌 지역의 1군 1교 기준 지역 거점고 중심의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82개교를 지정하여 ‘기숙형 공립고’라고 지칭하였다.
 - 2009년에는 기존 공립고에서 사립고까지 선정 대상이 확대되었고, 선정 범위 또한 군 지역에서 도·농 복합도시로 확대하여 68개교를 추가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총 150개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하였고, 명칭도 ‘기숙형 공립고’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 즉, 군 및 도농복합도시 소재 기숙형 고등학교 150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한 기숙사 입사생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 기숙형 고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모델학교 운영 등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고, 워크숍 개최, 현장컨설팅을 병행한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기숙형 고교 입시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 기숙형 고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현장 컨설팅 추진, 기숙형 고교 정책연구학교 성과보고회, 기숙형 고교 우수사례 확산 공유를 위한 교직원 워크숍, 직무연수 등 추진, 기숙형 고교 운영성과 평가 및 컨설팅 정책 연구 추진, 기숙형 고교 영문 브로슈어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 등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 기숙형 고교 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연구 수행, 현장 컨설팅, 기숙형 고교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직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개요를 요약하면 <표 7-11>과 같다.

표 7-11.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형 학교 운영 내실화 • 150개 기숙형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 	
사업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형 고등학교 (군 및 도농복합도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사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현재 	
사업 규모	지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기간 제한 없음
	지원 학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교
	지원 예산액 (지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부터 기숙사 운영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운영비, 급식비 등의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함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 및 현장컨설팅 실시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2.4.2. 사업 추진 현황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은 2009년부터 150교를 대상으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향후 계획 상에도 2017년까지 150교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예정이며 지원 예산은 2015년부터 150억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표 7-12>.

표 7-12.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추진계획

단위: 백만 원

	사업규모 (학급)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	광특	기타 회계	기금등			
2013	150교	-	-	-	-	24,728	-	24,728
2014	150교	-	-	-	-	17,683	-	17,683
2015	150교	-	-	-	-	15,000	-	15,000
2016	150교	-	-	-	-	15,000	-	15,000
2017	150교	-	-	-	-	15,000	-	15,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 기숙형 고교로 선정된 학교는 2008년 82개교, 2009년 68개교, 총 150개교이다. 지역별로 선정된 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표 7-13>.

표 7-13.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현황

시도	2008년 선정학교	2009년 선정학교	계
부산	1	-	1
대구	1	1	2
인천	2	1	3
울산	1	-	1
세종	1	-	1
경기	4	10	14
강원	11	7	18
충북	7	6	13
충남	7	9	16
전북	8	5	13
전남	16	7	23
경북	13	12	25
경남	10	10	20
계	82개교	68개교	150개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2.5.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2.5.1. 사업 개요

- 농산어촌 경제의 쇠퇴와 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 이동으로 농산어촌·구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학력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교육부 2009).
- 적정규모학교 육성 종합방안은 다양한 전략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영세사학의 해산·통폐합 및 사립학교 이전 촉진, 학교 신설 수요 적정 관리 방안 마련,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 유치원 육성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 이 중 다양한 전략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과제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통폐합된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 단위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지역 전체 학교를 통폐합·재배치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은 군 단위 농어촌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교육 품질을 제고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의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유·초·중·고등학교를 통합·재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전반적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 둘째, 학교 통폐합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자체 장기발전 계획 및 관계부처의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등과 연계·추진한다.
 - 셋째, 시설투자 중심의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특색 있고 우수한 교육활동 운영 지원을 병행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한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개요를 요약하면 <표 7-14>와 같다.

표 7-14.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표		• 군 단위 농어촌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교육품질을 제고함
사업 지원 대상		• 9개 군지역
사업기간		• 2009년~2011년
사업 내용		• 군(郡) 지역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된 학교 통폐합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재배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농산어촌 학교 교육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
사업 규모	지원 예산액 (지원 형태)	• 국고 250억 원, 특별교부금 369억 원 • 장기적으로 지역 내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10.10.1), 군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2.5.2. 사업 추진 현황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은 지역의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유·초·중·고등학교를 통합·재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전반적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군단위 학교 재배치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및 다목적시설 설치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였다.
- 2009년 사업 대상을 공모하여 지원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표 7-15>.

표 7-15.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추진 개요

구분	사업내용	선도군	재정지원	통폐합 내용
1유형	초·중·고 통폐합 +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신설	전남 해남군	207억 원 (국고 125억 원, 특교 82억 원)	초·중·고 5교 통폐합, 단설유치원 1개 신설
2유형	초·중·고 통폐합	충북 괴산군	202억 원 (국고 125억 원, 특교 77억 원)	초·중·고 6교 통폐합, 1교 신설
3유형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 유치원 신설	인천 강화군 등 7군	각 30억 원 (특교 210억 원)	단설유치원 각 1개 신설

자료: 교육부(2009)

○ 2014년에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전남 함평(중·고등학교)과 경북 안동(중학교), 울릉(중학교) 지역 등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개편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 중이다.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농어촌 지역 중·고교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함평중, 함평여중, 나산중, 학다리중을 함평중과 함평여중 2개 학교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또한 함평여고, 나산고, 함평골프고와 학다리고를 일반계열 거점 고등학교와 특성화 계열 거점 고등학교 2개교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 경북교육청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거점 기숙형 중학교 육성사업에 따라 안동시 면지역에 소재한 도산중, 임동중, 안동중 와룡분교, 안동중 인계분교, 길주중 녹전분교 등 5개 학교를 통합하여 1개 학교로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별 기숙형 중학교 육성을 통해 상치교사 배치 등 기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해소하고, 공동체교육 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울릉도 지역은 보다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포항 등으로 취학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 및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북

교육청은 울릉도에 소재한 울릉중, 울릉서중, 울릉북중, 우산중 등 4개 소규모 중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역시 안동 지역과 동일하게 거점 기숙형 중학교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6.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2.6.1. 사업 개요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은 첫째,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며, 둘째,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그들의 자립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셋째,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을 휴일 및 방과후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 방법, 지원 내용 및 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 지역의 평생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평생학습관,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개요를 정리하면 <표 7-16>과 같다.

표 7-16.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 능력 함양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방과후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사업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주민	
사업 기간	• 2010년부터 2014년	
사업 규모	지원 기간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지원 학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301개교) • 충남(69개교) • 전북(33개교) • 대구(47개교) (학교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을 실시하는 곳에 한함)
	지원 예산액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지방비 100%)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 시설 개방 등 	
추진 근거	• 지역별로 상이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2.6.2. 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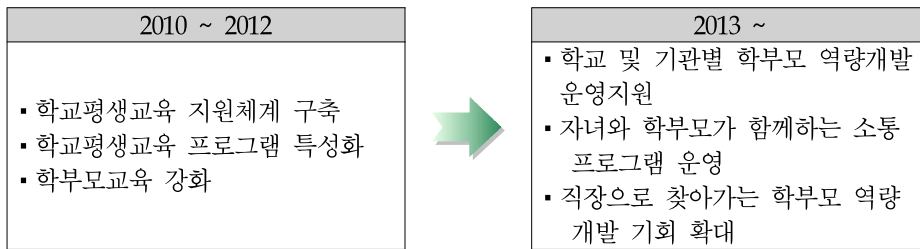
- 2014년 현재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강원 279개교, 충남 33개교, 전북 34개교, 대구 47개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표 7-17>.
- 2014년도에는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7-17.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현황

지역	사업구분	개소수 (‘13)	개소수 (‘14)	‘13 예산	‘14 예산
합 계				6,032	12,412
강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2개교	22개교	3,518	4,715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279개교	-		
충북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교육부 주관 공모 결과 ※ 5개분야, 26개 프로그램 선정	평생교육 과제발굴	90	306
충남	학교시설 등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	69개교	33개교	362	418
전북	평생학습관 운영	7개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7개관	140	150
	마을도서관 등 개방운영	33개	34개	36	485
전남	농어업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1개관	21개관	855	3,123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14개소	16개소	160	160
경북	도민참여교육	23회 8,380명	23회 7,000명	102	96
	행복학습지원센터 등	23개 사업 등	20개 읍면동	260	1,866
경남	소외계층 프로그램 공모 등 실시	45개	21개	110	597
대구	학교평생학습관 사업 추진	47개교	47개교	228	155
인천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환경원예과(80), 향토자원개발과(44) 등	환경원예과, 향토자원개발 과 등	-	147
광주	소외계층 농어촌평생교육	11기관, 30명	11기관, 35명	-	7
울산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64기관 39,528명	53기관 16,530명	90	106
세종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7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공모 2월	81	81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	프로그램 재구축 8월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주5일(1일 3시간)	주5일(1일 3시간)		
	토요프로그램 운영	주5일 수업제 활성화	좌동		

- 강원지역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며, 2010년부터 355개교에 학교도서관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충남지역은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가진다. 2012년부터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성인문자 해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지역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문화·정보의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평생학습관과 농어촌 학교마을 도서관 34개교에 대하여 학교마을 도서관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 대구지역은 열린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 역할을 정립하여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학교평생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자녀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47개교에 총 1억 5,56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대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며, 학부모교육을 강화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학부모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여 학교 및 기관별 학부모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장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2014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부모역할, 인성 및 생활지도, 자기주도학습 등의 주제로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였다<그림 7-3>.

그림 7-3.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대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a)

2.7.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

2.7.1. 사업 개요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은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 중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학생이 60명 이상인 면 소재의 중학교 80개교를 선정하여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5억 원씩 총 3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설비, 인건비, 기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임차를 위한 경비로 사용가능하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개요를 정리하면 <표 7-18>과 같다.

표 7-18.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표		•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 중학교를 육성
사업 지원 대상		• 재학생이 60명 이상인 면 소재의 중학교
사업 기간		• 2013년부터 2015년
사업 규모	지원 기간	• 대상 선정 후 3년 동안 지원
	지원 학교 수	• 총 80개교 지원 - 2013년 20개교 선정 - 2014년 30개교 선정 - 2015년 30개교 선정
	지원 예산액 (지원 형태)	• 매년 교당 5억 원 지원(특별 교부금) • 총 120억 원 지원
지원 내용		• 시설비: 기숙사 신축, 리모델링, 특별실 구축 등 •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단기 인건비 • 기자재비: 각종 기자재 및 장비 구입 비용 • 프로그램 운영비: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 • 기타: 통학 버스 임차 등 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
사업 관리		• 컨설팅 및 성과 관리
추진 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은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다. 최근 10년간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하여 약 9,978억 원을 투자하는 등 꾸준한 지원을 하였으나 중학교 지원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 특히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조사하였을 때 중학교의 도농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농어촌 중학교에 대한 낮은 신뢰로 교육 이농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를 연계할 수 있는 우수 중학교를 육성하여 우수한 입학자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농어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는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중심적인 중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 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중학교를 집중 지원하여 농어촌 중학교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
- 초등학교(전원학교 육성 사업), 고등학교(기숙형 공립고 지원)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군단위 면지역 중학교를 집중 육성한다.
- 지리적·문화적 여건 부족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 기숙사 또는 통학차량 등 지원을 통해 주변 학생 및 도시 유학생의 생활 여건을 마련하고 거점 중학교로의 진학을 유도한다.

-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시·군, 지역 교육청, 단위학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 시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MOU체결을 추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중학교 육성 계획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등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한다.
- 교육청은 인근 지역의 희망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학구제를 허용하고, 학교장 공모제(초빙형)을 통하여 학교 육성에 열정이 있는 교장을 초빙해야 하며,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우수교육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단위학교는 자유학기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학교 동아리 운영(스포츠 클럽,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농산어촌 ICT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7.2. 사업 추진 현황

-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는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 시·도별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80개교에 매년 5억 원씩 총 1,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표 7-19>.

표 7-19.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시행 계획

선정 학교 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교 내외	20교 내외 × 5억 원 내외			-	-	시·도별 지방비 확보
30교 내외	-	30교 내외 × 5억 원 내외		-		
30교 내외	-	-	30교 내외 × 5억 원 내외			
총 80교 내외	100억 원	250억 원	400억 원	300억 원	150억 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은 2017년도까지 총 12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표 7-20>.

표 7-20.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 추진 계획

단위: 백만 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80	-	-	120,600	-	120,600
'13	20/20	-	특교	10,000	-	10,000
'14	50	-		25,200	-	25,200
'15	80	-		40,200	-	40,200
'16	60	-		30,100	-	30,100
'17	30	-		15,100	-	15,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2013년 20개교, 2014년 30개교, 총 50개교이다. 지역별로 선정된 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표 7-21>.

표 7-21.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현황

구분		2013년도 선정 학교 수	2014년도 선정 학교 수
수도권 (14개교)	경기	3개교	5개교
	강원	-	4개교
	인천	2개교	-
충청권 (12개교)	충남	2개교	6개교
	충북	2개교	1개교
	세종	1개교	-
전라권 (11개교)	전남	3개교	6개교
	전북	1개교	-
	제주	1개교	-
경상권 (13개교)	경남	1개교	4개교
	경북	3개교	4개교
	부산	-	-
	대구	1개교	-
	울산	-	-
계		20개교	30개교

2.8.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2.8.1. 사업 개요

- 농산어촌 학교 ICT 사업은 2013년 7월 18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농어촌 지역 스마트 교육 활성화’의 실행 방안으로 수립되었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교육정보화 시스템을 농산어촌 학교에 접목하여 지원함으로써,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은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동안 축적된 교육정보화 역량과 학습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도·농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적·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과제로 구성된다.
 - 과제 1.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확보
 - 과제 2. 콘텐츠 활용 여건 개선
 - 과제 3. 콘텐츠 활용 능력 제고
 - 과제 4. 인프라 확충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의 4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사이버 학습 콘텐츠, 수학·과학 콘텐츠, 진로체험 콘텐츠,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콘텐츠, 역사 콘텐츠를 개발한다.
- 콘텐츠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교수학습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고 창의 체험활동을 위한 가상체험관을 구축하며, EBS 콘텐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EBS 클립 뱅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EBSe 방과후 활용 증진을 위한 TG(Teacher's Guide)를 개발한다.

- 콘텐츠 활용 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ICT 학습 지원 스마트 멘토링을 도입하여 농어촌 초·중학교에 ICT 멘토를 배치하여 3년간 지원하며, ICT 콘텐츠 및 활용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농어촌 교사 ICT 활용 연수를 강화한다.
 - 선정된 학교에는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교당 10대 내외) 보급, 무선인터넷망 구축, 방과후 스마트 멘토 등이 지원된다. 특히 기존의 스마트 교육 사업과 달리 방과 후 멘토가 온·오프라인으로 멘토링을 실시하여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 ICT 콘텐츠 활용 가이드북은 시·도교육청 사이버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요 교과목별 학습 콘텐츠가 제공되며, 2009 교육과정에 맞춰 진로탐색, 문화체험 등 가상체험 콘텐츠(7종), 교과 학습콘텐츠(54종)이 개발 추진되었다.
 - 스마트멘토링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스마트멘토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EBS 교육 멘토링 사업(온라인), 예술 강사(문화부)·대학생(오프라인) 등을 통해 시범학교별 멘토를 배치하여 운영하며, 스마트 멘토는 방과 후에 학생의 ICT 체험활동을 함께하고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온라인/오프라인 멘토는 학교당 1명 내외로 온라인 멘토 72만 원(1.2만 원×2h×2일×15주), 오프라인 멘토 225만 원(2.5만 원×2h×3일×15주)의 예산을 배정한다.
- ICT 인프라 확충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한다.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초·중학교 총 4,000개교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된다. 스마트 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구축은 사업 참여 첫 해 1년간 지원하고, 스마트 멘토링은 3년간 지원되

며, 현장방문 및 담당자 연수를 통해 사업을 관리한다.

- 시·도교육청은 스마트 기기(패드, 태블릿 PC)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배정된 예산 및 학교 실정에 따라 보급토록 하며 교당 10대 × 단가 0.5백만원 × 학교 수를 예산 배정 기준으로 한다.
- 시·도교육청별로 무선인터넷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따라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토록 하며, 교당 2.5백만원 × 학교 수를 예산 배정 기준으로 한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개요를 요약하면 <표 7-22>와 같다.

표 7-22.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표		• 스마트 기기, 무선 인터넷망, 스마트 멘토링 등을 활용하여 농산어촌 초·중학교의 온라인 체험학습을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 농산어촌 초·중학교 4,000교(ICT 활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등 우선 선정)
사업 기간		• 2013년부터 2015년
사업 규모	지원 기간	• 스마트 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구축 첫째 1년 지원 • 스마트 멘토링 3년간 지원
	지원 학교 수	• 총 4000개교 지원 - 2013년 300개교 선정 - 2014년 1700개교 선정 - 2015년 2000개교 선정
	지원 예산액 (지원 형태)	• 452억 원(특별교부금)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학습 콘텐츠 - 수학·과학 콘텐츠 - 진로체험 콘텐츠 - 문화·예술 콘텐츠 - 체육 콘텐츠 - 역사 콘텐츠 • 콘텐츠 활용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교수학습 통합 사이트 구축 - 창의 체험활동을 위한 가상 체험과 구축 - EBS 콘텐츠 활용도 제고 • 콘텐츠 활용 능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학습 지원 스마트 멘토링 - 농어촌 교사 ICT 활용 연수 - ICT 콘텐츠 및 활용 가이드북 제작 •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기기 보급 - 무선인터넷망 구축
사업 관리		• 농어촌교육지원센터(서울대학교)에서 사업 관리
추진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2.8.2. 사업 추진 현황

- 2014년도 현재 총 2,000개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2,000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4,000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총 4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표 7-23>.

표 7-23.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단위: 백만 원

	사업규모 (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합계	4,000			45,209		45,209
'13	300/300		특교	3,509		3,509
'14	2,000			13,600		13,600
'15	4,000			16,600		16,600
'16	3,700			8,500		8,500
'17	2,000			3,000		3,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년도)

- 2014년도 현재 ICT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별 학교 수는 <표 7-24>와 같다.

표 7-24.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참여 학교 수

단위: 개

시도	배정	시도	배정
부산	10	충북	128
대구	17	충남	221
인천	28	전북	203
울산	21	전남	305
세종	11	경북	304
경기	245	경남	238
강원	226	제주	43

자료: 교육부(2014) 내부자료

제 8 장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평가

1. 정책 형성

- 정책 형성 부문에서는 학교 육성 정책이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적절하게 형성되었는가를 평가하며, 이를 위하여 ‘정책 목표의 적절성’, ‘정책 사업의 목표와 정책 목적의 부합성’, ‘정책 수단으로서 개별 사업의 적절성’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1.1. 정책 목표의 적절성

- 정책 목표의 적절성은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측면에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향후 달성되어야 할 농어촌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평가하였으며, 세부 내용별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농촌교육 전문가와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표 8-1>.

- 농촌교육 전문가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1순위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 제공’, 2순위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3순위 ‘방과 후 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 4순위 ‘학생을 위한 교양·문화 프로그램 제공’, 5순위 ‘학생들의 예체능 특기 적성 및 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의 순이었다.
- 현지통신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1순위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 제공’, 2순위 ‘우수한 학교 교원 확보’, 3순위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여건 개선’, 4순위 ‘농어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5순위 ‘학생들의 예체능 특기 적성 및 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의 순이었다.
- 농촌교육 전문가와 현지통신원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 제공’, ‘학생들의 예체능 특기 적성 및 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우선순위 5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교육전문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반면, 현지통신원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원 확보, 학생들의 진로교육 여건 개선 측면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8-1.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실행되어야 할 활동

우선순위	농촌교육전문가(n=11)	현지통신원(n=656)
1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 제공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 제공
2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우수한 학교 교원 확보
3	방과 후 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여건 개선
4	학생을 위한 교양·문화 프로그램 제공	농어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5	학생들의 예체능 특기 적성 및 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	학생들의 예체능 특기 적성 및 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
6	우수한 학교 교원 확보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
7	지역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기숙사 제공
8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	학생을 위한 교양·문화 프로그램 제공
9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연계 교육 활동 실시	지역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10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여건 개선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11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기숙사 제공	지역 내 학교-산업체-교육청의 협의체 구성
12	지역 내 학교-산업체-교육청의 협의체 구성	방과 후 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
13	학생을 위한 입시교육 여건 강화	학생을 위한 입시교육 여건 강화
14	농어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연계 교육 활동 실시

- 현지통신원의 응답 결과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40대 이하는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 제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여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표 8-2>.

표 8-2.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실행되어야 할 활동
(현지통신원 연령별)

연령대	우선순위	내용
40대 이하(n=48)	1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여건 개선
	2	학생들의 예체능 특기 적성 및 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
	3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 제공
	4	학생을 위한 교양·문화 프로그램 제공
	5	우수한 학교 교원 제공
50대(n=167)	1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 제공
	2	우수한 학교 교원 확보
	3	학생들의 예체능 특기 적성 및 외국어 교육 여건 개선
	4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5	지역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60대(n=205)	1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 제공
	2	우수한 학교 교원 확보
	3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여건 개선
	4	농어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5	지역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70대(n=167)	1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 제공
	2	우수한 학교 교원 확보
	3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
	4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여건 개선
	5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기숙사 제공

○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농촌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8-3>과 같다.

- 농촌교육 전문가는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순위로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2순위로 '방과 후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3순위로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8-3.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항

순위	농촌교육 전문가(n=11)
1순위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 육성
2순위	방과 후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어촌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3순위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4순위	군 단위 농어촌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함으로써 교육 품질을 제고
5순위	농어촌 지역 기숙형 고교 확대 및 내실화
6순위	농어촌 지역의 거점별 우수 중학교 선정 및 교육 지원
7순위	농어촌 학교의 ICT 인프라 구축 및 ICT 교육 활동 프로그램 확대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을 통하여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농촌교육 전문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8-4>와 같으며, 세 집단 모두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하는 가장 우선된 목표로 '도·농간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를 꼽았다.

- 농촌교육 전문가는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1순위 '도·농간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2순위 '교육품질 제고', '농어촌 학생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확대', '농어촌 주민을 위한 교육활동 확대'를 꼽았다.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1순위 '도·농간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2순위 '농어촌 학생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확대', 3순위 '농어촌 학교 시설 개선'을 꼽았다.
- 단위 학교 사업 담당자는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1순위 '도·농

간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2순위 ‘농어촌 학교 시설 개선’, 3순위 ‘농어촌 학생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확대’를 꼽았다.

표 8-4.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하는 목표

순위	농촌교육 전문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1순위	도·농간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도·농간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도·농간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2순위	농어촌 학생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확대	농어촌 학생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확대	농어촌 학교 시설 개선
3순위	교육품질 제고	농어촌 학교 시설 개선	농어촌 학생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확대
4순위	농어촌 주민을 위한 교육활동 확대	문화 및 예체능 프로그램 강화	교육품질 제고
5순위	문화 및 예체능 프로그램 강화,	교육품질 제고	문화 및 예체능 프로그램 강화
6순위	학생 돌봄 기능 강화	학생 돌봄 기능 강화	교육비 지원
7순위	농어촌 학교 시설 개선	동아리 활동 내실화	동아리 활동 내실화
8순위	-	교육비 지원	농어촌 주민을 위한 교육활동 확대

○ 정책 목표의 적절성 지표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은 학생 및 지역 주민을 위하여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농간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 특히 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양·문화 프로그램과 진로교육, 예체능 특기 적성 및 외국어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복지 측면에서 방과 후 학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고, 학교 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

- 박성희(2012)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농촌학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학교, 둘째, 돌봄을 지원하는 학교, 셋째,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열린 학교, 넷째, 열정 있는 교사가 있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교이다.
- 좋은 농촌학교로 평가받은 학교들은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차량을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었다. 농촌학생의 대부분은 통학하는 거리가 멀고, 교통수단이 편리하지 않아 등하교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며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석식 후 하교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통학차량 운영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 환경을 정비해 나가면서 교사들에게는 동기 유발을, 학생들에게는 자긍심을, 지역 주민에게는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었다.
 - 또한 가정을 대신해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학생의 자신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개인별·수준별 지도를 통해 학습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성에 기반한 농촌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특히 해체 및 결손 가정을 대신하여 농촌 학교들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학교가 학생의 통합적, 지속적,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
 - 그뿐만 아니라 좋은 농촌학교는 지역 사회의 학교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행하며, 학부모 회의를 통해 학부모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었다. 부족한 자원 및 적은 학생 수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인근에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와 연계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거나 상급학교와 협력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 회의를 통해 학부모의 요구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학부모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었다.

- 이와 동시에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농촌학생을 위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활동 및 양육지도를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초임교사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 앞서 살펴본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요구 및 좋은 농촌 학교의 특성이 현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 8-5>와 같다.
- 지원 대상을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으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이다. 중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이며, 고등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은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은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이다. 분석 결과 미취학 아동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 내용을 교육 서비스, 복지 서비스, 학교시설 및 통학 여건 개선 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교육 요구 중 교양·문화 프로그램, 진로교육, 예체능 특기 적성 및 외국어 교육은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하고, 복지 서비스는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학교시설 및 통학 여건 개선 서비스는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 농산

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은 교육 여건 개선 요구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을 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사업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5.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요구관련 정책 내용 분석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미취학 아동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지역 주민	교육 서비스	복지 서비스	학교시설 및 통학 여건 개선 서비스
①	-	○	○	-	-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365일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 (돌봄학교 사업)	첨단 수업 환경 조성
②	-	○	○	○	-	방과 후 컴퓨터, 예체능 및 특기적성 교육 지원	-	-
③	-	-	-	○	-	-	-	통학 여건 개선
④	-	-	-	-	-	-	-	학교의 적정 규모화
⑤	-	○	○	○	○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
⑥	-	-	○	-	-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지원	-	학교 시설 개선비 및 기자재비 지원, 통학버스 지원
⑦	-	○	○	-	-	-	-	스마트 기기 및 무선인터넷 망 구축

①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②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③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④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⑤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⑥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 ⑦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1.2. 개별 사업의 목표와 정책 목적의 부합성

- 개별 사업의 목표와 정책 목적의 부합성은 각 사업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교육 부문 목표인 ‘농어촌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인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학교 모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를 위하여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교육부문 목표에 각 사업이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사업의 목표에 각 사업이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가’, ‘학교 육성 사업의 목표에 각 사업이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평가하였으며, 세부 내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각 사업이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에 기여한 정도를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 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8-6>, <표 8-7>과 같으며, 전반적으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세부 사업들은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에 기여하는 편으로 분석되어 학교 육성 정책의 세부 사업들이 정책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선도군 지원 사업이 평균 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이 평균 4.1로 높게 평가된 반면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과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은 평균 3.8로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 측면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표 8-6. 사업별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 정도(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구분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n=35)			
	교육기반 강화		교육력 강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4.0	.54	3.9	.35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	-	-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4.0	.00	4.0	.00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5.0	.00	5.0	.00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3.8	.84	3.6	.55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3.8	.84	3.6	.89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4.1	.60	4.1	.64
계	4.0	.61	3.9	.60

주: 5점 척도 평가 결과임(5: 높음, 1: 낮음).

-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농어촌 거점별 우수 학교 육성 사업이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이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 측면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표 8-7. 사업별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 정도(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구분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n=58)			
	교육기반 강화		교육력 강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3.7	.97	3.9	.93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4.3	.96	4.0	.00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3.9	1.21	4.0	1.26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4.7	.48	4.4	.63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4.4	.79	4.3	.52
계	4.2	.98	4.1	.91

주: 5점 척도 평가 결과임(5: 높음, 1: 낮음).

○ 각 개별 사업이 농어촌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지 조사한 결과는 <표 8-8>과 같다. 응답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농촌 교육 전문가(평균 3.8),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평균 3.8),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평균 3.9)로 응답하였다. 즉 개별 사업들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별 평균을 살펴보면 농촌교육 전문가의 경우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 사업의 평균이 4.5로 가장 높았고,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경우 응답자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의 평균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의 평균이 2.8로 가장 낮았다.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경우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의 평균이 4.4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의 평균이 3.4로 가장 낮았다.
- 조사 대상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에 대한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간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8-8. 각 사업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목적에 부합한 정도

보기	농촌교육전문가 (n=11)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n=33)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n=57)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3.5	1.29	3.6	.52	3.4	.88	3.5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4.5	.82	-	-	4.0	.00	4.3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3.7	.90	3.8	.44	3.6	1.47	3.7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3.5	.93	4.5	.71	-	-	4.0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4.5	.52	4.3	.58	-	-	4.4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3.5	.82	2.8	.84	4.4	.62	3.6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3.5	.93	3.0	.78	4.0	.58	3.5
계	3.8	.44	3.8	.79	3.9	1.04	.44

주: 5점 척도 평가 결과임(5: 높음, 1: 낮음).

- 전반적으로 각 사업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보다는 시설이나 설비 지원 등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고, 시설이나 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의 경우 통학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체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시 학원식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담당 교사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우수 사례를 보급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교정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은 교육을 도구로 인위적으로 농촌을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학교의 분야별 특화 과정을 설치하고 학교 간 교류 수업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등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의 경우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 규모가 너무 크고, 많은 학교에 혜택을 주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읍, 면지역 소규모 중학교 학생들이 거점중학교에 집중되어 인근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마을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농어촌 균형발전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학교 육성 정책 사업과 지원 내용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 <표 8-9>와 같다.
 -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은 2011년 종료되었으나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지자체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과소화 학교의 교육 품질 유지 및 1면 1개교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의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취약계층 학생은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교육복지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과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사업이 이와 관련되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과 학교적응을 위한 전교생 문화 교육 등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표 8-9. 학교 육성 정책 사업의 농어촌 특성 반영 내용 분석

농어촌 지역 특성	관련 사업	지원 내용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 여건 열악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면 지역 우수 중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농어촌 지역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군 단위 농어촌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
취약계층 증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365일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 (돌봄학교 사업)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자립능력 함양
읍·면 간 교육 여건 격차 심화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면 지역 우수 중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농어촌 지역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도·농간 학업 성과 격차 심화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농어촌의 불리한 교육여건 해소를 위해 농어촌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농어촌 지역 고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제공
평생교육 지원 격차 심화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 방과후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

- 읍·면간 교육 여건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 학교 간 연계와 지역 교육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농어촌 학교 간 연계를 통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과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이 있다.
- 도·농간 학업 성과 격차 심화의 문제점을 다루는 사업으로는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과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이 있다.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은 농어촌의 불리한 교육여건 해소를 위해 농어촌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며,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은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학력증진 및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평생교육 지원 격차 심화 문제를 다루는 사업으로는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 방과 후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3. 정책 수단으로서 개별 사업의 적절성

- 정책 수단으로서 개별 사업의 적절성은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예산 규모가 사업의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예산 규모의 수준이 목표 달성에 적절하였는가’,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예산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세부적으로 평가하였다.
-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및 예산 규모의 수준이 목표 달성에 적절한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8-10>, <표 8-11>과 같다.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 3.5로 보통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영역별 평균은 지원 분야(3.9), 지원 대상(3.6), 지원 기간(3.4), 예산 규모(3.1)로 지원 기간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의 적절성이 평균 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의 평균이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평가 영역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사업이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 모두 가장 높았다. 각 영역별 적절성이 가장 낮은 사업을 살펴보면 지원 분야 영역은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3.6), 지원 대상 영역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3.2), 지원 기간 영역과 예산 규모는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3.0, 2.0)이다.

표 8-10. 사업의 지원 분야/대상/기간/예산 규모의 적절성(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구분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n=36)								평균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예산 규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3.7	.76	3.3	.49	3.0	1.20	3.3	.89	3.3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	-	-	-	-	-	-	-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4.0	.00	4.0	.00	4.0	.00	4.0	.00	4.0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5.0	.00	4.5	.71	4.5	.71	4.5	.71	4.6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3.6	.89	3.8	.45	3.6	.89	3.0	1.00	3.5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4.0	.71	3.2	1.30	3.8	.84	3.4	1.34	3.6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4.0	.71	3.7	.52	3.0	.87	2.0	.87	3.2
계	3.9	.71	3.6	.70	3.4	.95	3.1	1.13	3.5

-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3.6으로 보통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평균은 지원 분야(3.9), 지원 대상(3.9), 지원 기간(3.4), 예산 규모(3.3)로 지원 분야, 지원 대상은 비교적 적절하나 지원 기간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의 적절성이 평균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의 적절성 평균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평가 영역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원 분야 및 지원 대상의 적절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사업(4.3)이며, 가장 적절성이 낮은 사업은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3.4)이다. 지원 기간의 적절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3.7)과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3.7)이고, 가장 적절성이 낮은 사업은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3.2)이다. 예산 규모의 적절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4.1)이며, 가장 낮은 사업은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2.7)과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2.7)이다.

표 8-11. 사업의 지원 분야/대상/기간/예산 규모의 적절성(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구분	단위 학교 사업 담당자(n=45)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예산 규모		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4.0	.87	3.9	.93	3.7	.87	3.4	1.24	3.8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4.0	.00	4.3	.50	3.3	.96	3.3	.96	3.7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3.4	1.31	3.3	1.33	3.2	1.32	2.7	1.23	3.2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4.3	.48	4.4	.62	3.5	1.03	4.1	.72	4.1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3.9	.38	4.1	.38	3.7	.49	2.7	.95	3.6
계	3.9	.96	3.9	1.03	3.4	1.07	3.3	1.19	3.6

- 지원 분야, 대상, 기간 및 예산 규모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의견을 사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숙형 고교 지정 및 육성 사업의 경우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여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를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지원 대상과 관련된 의견을 사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숙형 고교 지정 및 육성 사업의 경우 사생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 사생 관리 및 학교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60명 이상인 학교보다 면 지역의 중학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중학교로 한정하기 보다는 예산 규모를 축소하여 농어촌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지원 기간과 관련된 의견을 사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원학교 육성 사업의 경우 특별교부금 사업이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힘들다 보니 지원 기간 동안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지원이 종료된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비를 매년 꾸준히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의 경우 기숙사 신축을 계획한 학교가 기숙사 신축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예산을 모두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어 지원 기간을 연장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5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원 기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지원 예산 규모와 관련된 의견을 사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원학교 육성 사업의 경우 동일한 예산 지원보다는 학교 규모와 학교 시설 및 운영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예산 규모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의 경우 대체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지원을 받고 난 뒤 교육청에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교사의 사감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감 배치를 위한 인건비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과 예산이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도농복합형 기숙형 고등학교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조리사 인건비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식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조식과 석식의 경우 급식인원이 적어 급식비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의 경우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교 실정 및 학교 의지에 따라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농어촌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의 경우 3년의 예산 지원이 종료된 후 현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사업의 경우 예산 5억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농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의 경우 스마트기기 구입 및 무선망 구축을

위해 배부된 예산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며, 특히 예산이 늦게 교부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1.4. 정책 형성 부분 평가 결과 종합

- 정책 형성 부분은 학교 육성 정책이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적절하게 형성되었는가를 평가하였다. 정책 목표의 적절성, 정책 사업의 목표와 정책 목표의 부합성, 정책 수단으로써 개별 사업의 적절성을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농촌교육 전문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정책 목표의 적절성은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측면에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향후 달성되어야 할 농어촌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평가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농촌교육전문가와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 제공이 가장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그러나 우선순위 5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교육전문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여건 개선 및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반면, 현지통신원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원 확보, 학생들의 진로교육 여건 개선 측면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 현지통신원의 의견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학령인구의 자녀가 있

을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하의 경우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여건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연령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교육 여건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농촌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2순위 ‘방과 후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3순위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을 통하여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농촌교육 전문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선순위를 비교하였을 때 세 집단 모두 ‘도·농간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를 1순위로 꼽아 집단 간 인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별 사업의 목표와 정책 목적의 부합성은 각 사업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교육 부문 목표인 ‘농어촌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인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학교 모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를 위하여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교육부문 목표에 각 사업이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사업의 목표에 각 사업이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지’, ‘학교 육성 사업의 목표에 각 사업이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평가하였다.
- 각 사업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교육부문 목표인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에 기여한 정도를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세부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에 기여하는 편으로 나타나 세부 사업들이 정책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집단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경우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5.0)의 기여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사업과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사업(3.8)의 기여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경우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4.7)의 기여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3.7)의 기여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은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학교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세부 사업들의 목표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응답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각 개별사업들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단 간 응답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농촌교육전문가는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의 부합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경우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의 부합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경우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의 부합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3.5),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4.3),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3.7),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4.0),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사업(4.4),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3.6),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3.5)으로 나타났다.

- 각 사업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보다는 시설 및 설비 지원 등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시 학원식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담당 교사의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보급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교정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을 도구로 인위적으로 농촌을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학교의 분야별 특화과정을 설치하고 학교 간 교류 수업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정책 수단으로서 개별 사업의 적절성은 각 사업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의 교육부문 목표인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각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예산 규모의 수준이 목표 달성에 적절하였는가’,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예산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세부적으로 평가하였다.
-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및 예산 규모의 수준이 목표 달성에 적절한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전체 평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3.5),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3.6)로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경우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전체 평점 4.6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전체 평점 3.2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원 분야 영역의 경우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의 적절성이 3.6으로 가장 낮았고, 지원 대상 영역의 경우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의 적절성 3.2로 가장 낮았다. 지원 기간과 예산 규모 영역의 경우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의 적절성이 각각 3.0, 2.0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경우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전체 평점 4.1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전체 평점 3.2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영역의 경우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의 적절성이 각각 3.4, 3.3, 3.2로 가장 낮았고, 예산 규모 영역의 경우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과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의 적절성이 각각 2.7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지원 분야, 대상, 기간 및 예산 규모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의 경우 지원 분야, 지원 기간, 지원 예산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선 지원 분야 측면에서 지원 분야를 구체화하여 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원 기간 측면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3년간 지원되고 나니 지원 당시에는 학생 수가 증가하였지만 지원이 종료된 이후 학생 수가 다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학교가 정착할 때까지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한 지원 예산 측면에서 예산 규모를 차등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의 경우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평가에서 특히 적절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해당 교육청에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해마다 예산이 축소되고 있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예산 축소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고, 사감 배치를 위한 인건비가 부족하여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급식 조리사 인건비 산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급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농어촌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의 경우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사업의 적절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으나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는 사업의 적절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여 인식차이가 가장 큰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학교당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농촌지역 중학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면지역의 중학교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지원 기간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3년의 예산 지원이 종료된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농어촌 ICT 지원 사업의 경우 스마트기기 구입 및 무선망 구축을 위해 배부된 예산 규모가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예산 교부가 늦게 이루어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정책 집행

- 정책 집행 부문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 정도,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도, 예산 집행 여건의 적절성, 기타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2.1. 정부 및 시·도교육청 지원 정도

- 정부 및 시·도교육청 지원 정도는 사업 집행 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어떠하였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업 집행 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어떠한가’,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확대되어야 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무엇인가’를 평가하였다.
-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집행 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5점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8-12>.

표 8-12. 사업 집행 시 정부 및 시·도교육청 지원에 대한 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3.5	1.08

-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서면 인터뷰 결과를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13>과 같다. 정부 및 시·도교육청 지원 정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사업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으로 확인되었고, 가장 낮은 사업은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13. 사업 집행 시 정부 및 시·도교육청 지원에 대한 만족도(사업별)

구분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n=45)	
	평균	표준편차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3.9	0.78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3.8	0.50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3.0	1.26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3.6	1.15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3.7	0.49

- 따라서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인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사업 시행 중 불만족 원인과 현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농촌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확대되어야 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표 8-14>와 같다.

표 8-14.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확대되어야 할 지원사항

보기	농촌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n	%	n	%	n	%
사업 담당 인력 연수 제공	6	18.7	13	15.7	16	12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	9	28.1	10	12	26	19.5
행정 인력 지원 강화	3	9.4	9	10.8	24	18.1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	2	6.3	16	19.3	19	14.3
사업성과 및 해당 학교에 대한 홍보	2	6.3	5	6	11	8.3
다양한 교육 자료 제공	1	3.1	11	13.3	17	12.8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21.9	15	18.1	16	12
기타	2	6.3	4	4.8	4	3
계(복수응답 가능)	32	100	83	100	133	100

○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5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가운데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확대되어야 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대하여 농촌교육전문가는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9명)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7명), 사업 담당 인력 연수 제공(6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16명)에 이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15명), 사업 담당 인력 연수 제공(13명)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단위학교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26명), 행정 인력 지원 강화(24명),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19명)의 순으로 많이 응답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확대되어야 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대한 농촌교육전문가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의견은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 또한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과 농촌교육전문가들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들에 비해 사업 진행을 위한 인력 지원 및 연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의 양적 및 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서면 인터뷰 결과를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15>와 같다.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과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확대되어야 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 중 ‘사업 담당 인력 연수 제공’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 또한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과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은 ‘행정 인력 지원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
 - 반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은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를 1순위로 선정하였고,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은 ‘다양한 교육 자료 제공’을 1순위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분석 결과의 종합적 순위를 살펴보면,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담당 인력 연수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서면 인터뷰 결과의 사업별 분석 결과는 <표 8-16>과 같다.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사업은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과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은 ‘행정인력 지원 강화’를 1순위로 선정하였다.
 -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동 1순위로 선정된 ‘사업 담당 인력 연수 제공’은 농산어촌학교 ICT 지원사업의 1순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별 분석 결과의 종합적 순위를 살펴보면,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 ‘행정인력 지원 강화’, ‘명확한 사업지침 안내’ 순으로 확인된다.

표 8-15. 사업별 정책 지원 필요 부문(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대상)

구분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n=35)		
	1순위	2순위	3순위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사업 담당 인력 연수 제공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	행정 인력 지원 강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행정 인력 지원 강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담당 인력 연수 제공,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	다양한 교육 자료 제공	행정 인력 지원 강화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행정 인력 지원 강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사업 담당 인력 연수 제공,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		사업성과 및 해당 학교에 대한 홍보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다양한 교육 자료 제공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
종합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담당 인력 연수 제공

표 8-16. 사업별 정책 지원 필요 부문(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대상)

구분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n=58)		
	1순위	2순위	3순위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	행정 인력 지원 강화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 담당 인력 연수 제공, 행정 인력 지원 강화, 사업성과 및 해당 학교에 홍보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 다양한 교육 자료 제공		행정 인력 지원 강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행정 인력 지원 강화,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사업 담당 인력 연수 제공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 다양한 교육 자료 제공	
종합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	행정 인력 지원 강화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

2.2.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도

- 유관기관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관(예: 지역 내 학교, 시설, 기관, 업체 등등)을 의미한다.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도는 사업 집행 시 네트워크 구축 여부는 어떠하였는지, 네트워크 구축 시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를 평가하였다.
-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표 8-17>과 같다.

-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3명 중 60.4%에 해당하는 32개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9.6%에 해당하는 21개교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학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을 하지 않은 이유와 네트워크 구축 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8-17.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여부

보기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n=53)	
	n	%
그렇다	21	39.6
아니다	32	60.4

○ 이와 동시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표 8-18>과 같다.

-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학교들은 네트워크 구축 시 애로사항으로 네트워크 대상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8명)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어 업무 과중으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여력이 없었다(6명), 유관기관 관계자가 비협조적이었다(4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8-18.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 애로사항

보기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n=22)	
	n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3	13.6
네트워크 대상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8	36.4
유관기관 관계자가 비협조적이다	4	18.2
업무 과중으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여력이 없었다	6	27.3
기타	1	4.5
계	22	100

- 반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학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표 8-19>.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14명)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으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10명)에 많이 응답하였다.
 -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학교 중 사업 운영에 있어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에 있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19.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이유

보기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n=29)	
	n	%
사업 운영에 있어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지 않다	0	0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3	10.3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14	48.3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으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	10	34.5
기타	2	6.9
계	29	100.0

- 이와 같이 학교 주체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대학교 농어촌교육지원센터는 네트워크 구축의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단위 및 전국 단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농어촌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 지정의 연구센터로 농어촌 교육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관계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지원 및 교육여건 분석’,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관계자 연수’,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사례 공유’, ‘농어촌 교육지원 사업 성과관리 및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이며, 특히 ICT 지원 사업, 지역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참여 교사의 연수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하여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3. 예산 집행 여건의 적절성

- 예산 집행 여건의 적절성은 사업 예산 집행 여건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업 예산 집행 여건은 어떠한가’를 평가하였다.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 집행 여건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다음의 <표 8-20>과 같다.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때 예산 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평균 4.6)는 것에 이어 예산 집행을 위한 분명한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평균 4.4)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경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때 예산 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평균 4.6)는 것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으며, 이어 예산 집행을 위한 분명한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평균 4.3)에 동의하고 있었다.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담당자는 사업 예산 집행 여건에 비교적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동의의 강도에는 차이를 보였다.
- 이와 같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제때 예산 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항의 동의 강도가 높은 이유는 예산 교부 시기와 학교 예산 집행 시기에 차이가 있어 원활한 사업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교부 시기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예산 집행의 경우, 학기는 3월에 시작하지만 예산 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1~2월이기 때문에 예산 교부 시기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12월 이전에 예산을 확정하여 다음 해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담당자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두 번째로 높은 동의 강도를 보인 문항은 ‘예산 집행에 있어 분명한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이다. 실제로, 사업 담당자가 사업과 관련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할 경우 본래 사업 취지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예산 집행 교육과 예산 집행 지침서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 지출 예산 틀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예산 편성 및 집행 상의 경직성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0. 사업 예산 집행 여건

보기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n=35)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n=58)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사업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목간 변경이 필요하다	3.5	1.15	4.1	1.12
2)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제때 예산 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4.6	0.81	4.6	0.84
3)지원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자체 대응예산규모를 결정·조정할 필요가 있다	3.6	1.13	4.2	0.96
4)예산 집행을 위한 분명한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4.4	0.81	4.3	1.02

2.4. 기타 사업 운영의 문제점

- 기타 사업 운영의 문제점은 사업 집행 상 어떠한 것들이 애로사항이었는지, 이 중 구체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사업 집행 상의 기타 애로사항은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서면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사업 집행 상의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 ‘사업 집행 상의 기타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문헌분석을 한 결과,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지원 기간 3년이 지나면 사업 지원이 종료되어 연속적인 사업 효과를 창출해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 여건과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원학교 수의 확대 및 안정적 예산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의 경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성격을 띠고 실행되었다는 점과 3년이라는 단기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후속 지원이 담보되지 못한 점을 애로사항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사업 기간 동안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의 중복 투자가 쟁점화 되고 사업 최종 연도에는 전원학교 사업과 통합 운영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사업비로 채용된 계약직 전담 요원들의 신분 불안과 교사들의 업무 과중에 따른 피로감이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야기했다.
 - 이와 동시에 연중 돌봄학교 사업비를 성질별 집행내역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와 인건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된 것으로 보아 사업을 전담 추진할 정규인력이 없어서 많은 인건비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방과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기반 여건이 취약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보다 프로그램 선택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교과 프로그램보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이지만, 몇몇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과 성적 향상을 위한 보충 수업의 개념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므로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기와 적성을 발견하고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실제로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참여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기숙형 고교 중 일부가 기숙형 입시 학원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숙형 고교는 체험·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지도 및 감독이 요구된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생 선발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학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성적 위주의 선발보다는 입시전형을 다양화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 동시에 기숙형 교육 프로그램을 인성과 지성, 체력 등 조화롭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의 애로사항으로는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토지 보상가격 등 주민이견이 발생하여 일부 지역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은 농어촌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교원 및 행정실의 업무가 폭증하여 사기 고양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강사가 필요하나 농어촌 학교의 경우 시내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강사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그 밖에도 진로교육을 위한 인근 산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나 중학교 체험에 비협조적인 분위기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운영기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예산 교부가 지체되어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사업 예산 처리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업무 추진 상에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예산이 사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또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학생인솔, 현장체험 등의 출장비, 업무 협의를 위한 협의회비, 교사 연수비 등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기존의 학교 예산으로 활동을 지원하다보니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도교육청별 스마트 교육환경 현황을 조사 했을 시 조사 대상에 대한 개념 설명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무선망 구축의 경우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선망을 구축하였다고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

- 그러므로 대상학교의 스마트 인프라 현황을 파악할 경우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설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특징을 설명하여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교원 연수 시 기기 사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방법을 연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는 교원 연수 시 무선망 설치 및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구입,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제적 사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사업예산 편성 시 현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현재 예산 편성 기준은 스마트 기기 한 대당 5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실제 구입가격은 한 대당 80~9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실제 판매 가격을 반영하여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업 집행 상의 기타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표 8-21>과 같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우수강사 확보 방안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평균 4.7)’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는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부담이 있다(평균 4.5)’고 인식하고 있었다.
- 또한 두 집단 모두 구체적인 사업 운영 매뉴얼 제공, 교육 콘텐츠 제공, 학교 여건 개선, 우수강사 확보 방안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확충,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에 대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8-21. 기타 사업 운영 상의 애로사항

구분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n=35)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n=5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구체적인 사업 운영 매뉴얼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4.5	0.66	4.2	1.01
2) 보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4.4	0.61	4.2	0.92
3) 해당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기반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3	0.86	4.3	0.94
4)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우수강사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7	0.64	4.4	0.91
5)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4.1	0.77	4.5	0.88
6)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4.3	0.63	4.4	0.84
7)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과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4.3	0.78	4.3	0.90

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임(5: 매우 그렇다~1: 전혀 그렇지 않다).

○ 또한 사업 집행에 있어 겪은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해달라는 문항에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모두 사업 대상학교 선정 기준의 모호함과 예산 교부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한 응답을 가장 많이 기입하였다.

- 이어 예산 자체의 부족으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의 기타 응답으로는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문화 콘텐츠, 인프라 등이 부족하다는 점, 사업 추진에 있어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수시로 변화하는 학생들의 흥미나 요구를 교육적 결과로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었다.

○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및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사 연수 강화,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 설명회, 우수사례 공유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응답하였다.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교실 환경 개선 등 시설 관련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교사 연수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특히 농어촌 우수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교부시기가 학교 예산 집행시기와 달라 1차 년도의 경우 명시이월이 불가피 하였으며, 명시이월의 경우 항목 변경이 불가능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공개 입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회사나 모델을 사양이 떨어지는 등 담당자가 기대한 것과 다른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의견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동기 부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또한 광역학구제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학교 홍보가 활성화 되고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우수한 입학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농어촌 ICT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학교의 접근성이 떨어져 우수 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강사 확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 기타 사업 운영 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응답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8-22>와 같다.

표 8-22. 기타 사업 운영 상의 애로사항(예산/인력/그 외)

구분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n=35)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n=58)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교부 시기의 수정 시·도교육청에서 사업관리 및 컨설팅, 간담회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없어 역할 수행이 어려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부족, 예산교부시기와 학교예산교부시기의 차이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 교육부에서 단위학교로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매년 변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산으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움 물건 구입 시 상품 모델명을 직접 지정하기 어려워 담당자 요구와 차이가 발생 예산 지원이 전혀 없을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이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함 일정 범위의 예산 사용에 대해 규제가 없으면 함 예산 목간 변경이나 협의회를 비롯한 예산 사용 지침에 대해 질문할 곳이 없음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 자율성 보장, 사업학교 인센티브 제공 담당장학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교사 및 행정) 부족, 업무 담당자의 업무경감 필요, 인센티브 필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우수사례 공유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위한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전국단위의 워크숍, 지역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필요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인프라 구축 예산 확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하드웨어 지원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 보완 필요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 문화 콘텐츠 및 학교 제반 시설, 인프라 부족

2.5. 정책 집행 부분 평가 결과 종합

- 정책 집행 부문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 정도,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도, 예산 집행 여건의 적절성, 기타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농촌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정부 및 시·도교육청 지원 정도는 사업 집행 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어떠하였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업 집행 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어떠한가’,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확대되어야 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무엇인가’를 평가하였다.
 -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집행 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5점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통 수준 보다 조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농촌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확대되어야 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농촌교육전문가는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9명)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16명)에, 단위학교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력 풀 제공(26명)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도는 사업 집행 시 네트워크 구축 여부는 어떠하였는지, 네트워크 구축 시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를 평가하였다.

-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 53명 중 60.4%에 해당하는 32개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9.6%에 해당하는 21개교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학교들은 네트워크 구축 시 애로사항으로 네트워크 대상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8명)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학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14명)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예산 집행 여건의 적절성은 사업 예산 집행 여건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업 예산 집행 여건은 어떠한가’를 평가하였다.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 집행 여건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때 예산 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각 평균 4.6)는 것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 기타 사업 운영의 문제점은 사업 집행 상 어떠한 것들이 애로사항이었는지, 이 중 구체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사업 집행 상의 기타 애로사항은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서면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사업 집행 상의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업 집행 상의 기타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평

가한 결과,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우수강사 확보 방안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평균 4.7)'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는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부담이 있다(평균 4.5)'고 인식하고 있었다.

- 또한 사업 집행에 있어 겪은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해달라는 질문에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모두 매년 사업학교 선정과 예산 교부가 늦어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어 예산 자체의 부족으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및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사 연수 강화,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종합적으로 정책 집행 부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사업 인력 측면임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력 풀을 제공하고, 사업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추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에게 연수 기회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사업 운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인력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 지침 안내가 필요하다.

○ 둘째, 사업 운영에 있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 운영에 있어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 과중으로 인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를 구축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담당자가 용이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유관기관과 사업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 셋째, 사업 예산 집행 시 가장 중요한 여건은 예산 교부 시기 및 지속성이다.
- 그러나 현재는 예산 교부 시기와 예산 집행 시기에 차이가 있어 원활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예산 교부 시기를 수정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분명한 지침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 이와 동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인프라 구축,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즉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 또한 강조된다.

3. 정책 성과

- 정책 성과 부문은 학교 육성 정책이 농어촌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한 부문이며, 이를 위하여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도, 사업 담당 기관의 성과 만족도, 농어촌 교육 여건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3.1. 성과 목표 달성도

- 성과 목표 달성도는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 정도는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문헌 분석을 통해 개별 사업들의 목표치 대비 성과를 평가하였

다. 사업별 성과 분석 자료, 추진 실적 자료 등을 참고하여 개별 사업들의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8가지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의 2013년도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 2013년도에는 시·도교육청의 신규 선정학교 수 부족 등으로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62.4%를 기록하였다<표 8-23>.

표 8-23.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지원 학교 수	선정학교 명단	교	250	156	6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 반면 2009년 대비 2012년 기초학력미달 비율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농어촌 전원학교의 학생들과 도시지역(대도시, 중소도시) 학교 학생들을 비교하였을 때, 기초학력이 뒤쳐진 학생이 현저히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원학교 육성 사업이 도시 지역과의 교육 격차 줄일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표 8-24>.

표 8-24. 기초학력미달 비율 변화 비교

구분	초6		중3		합계	
	도시지역	전원학교	도시지역	전원학교	도시지역	전원학교
'09년→'12년(%)	1.7→0.8	2.1→0.8	7.0→3.3	7.5→3.3	5.1→2.4	5.5→2.4
감소폭(%p)	△0.9	△1.3	△3.7	△4.2	△2.7	△3.1

자료: 교육부(2009~2012)

- 그 밖에도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학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원학교의 재학생 감소 폭은 적었으며, 그 중 약 41% 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표 8-25>.

표 8-25. 전원학교 학생규모 증감 현황

구분	초			중			합계		
	계	유지·증가	감소	계	유지·증가	감소	계	유지·증가	감소
'09년 → '12년(교)	77 (100%)	28 (36.4%)	49 (63.6%)	33 (100%)	13 (39.4%)	20 (60.6%)	110 (100%)	41 (37.3%)	69 (62.7%)

자료: 교육부(2009~2012)

- 마지막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요인에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매년 점차적으로 높아진 것 또한 긍정적인 성과이며, 교수·학습지원을 위해 무선인터넷 기반 e-러닝교실을 구축하고, 파스텔 (FASTEL) 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농어촌 학교가 스마트교육 선도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성과를 보였다<표 8-26>.

표 8-26. 전원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변화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평균
2010	80.5	75.4	77.9
2011	86.0	80.6	83.3
2012	86.5	83.0	84.8

자료: 교육부(2014)

-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은 목

표치 이상을 달성하여 농산어촌 교육복지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표 8-27>. 즉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 365일 care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8-27.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만족도	전문기관 설문조사	%	70	80.6	11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1b)

-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 대하여 학습결손을 치유하고, 돌봄기능이 열악한 가정을 대신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여 학습과 생활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교육·문화·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 실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한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기초미달학생비율 달성목표(0.8%)를 2011년도에 조기 달성하였다.
- 다만 2010년 대비 2011년 우수학력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우수 학력 비율도 연차별로 향상되고,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3년간 4.5%, 2.6%,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표 8-28>.

표 8-28. 연중 돌봄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변화

단위: %

구분	우수			보통			기초			미달		
	'09	'10	'11	'09	'10	'11	'09	'10	'11	'09	'10	'11
초등학교	39.3	43.8	39.0	41.3	38.2	44.5	17.6	17.0	15.8	1.8	0.9	0.7
중학교	14.1	15.9	17.9	44.1	44.3	48.5	34.4	35.3	29.8	7.4	4.5	2.8
계	27.1	30.6	26.3	42.7	41.1	46.7	25.8	25.7	25.0	4.5	2.6	2.0

자료: 임연기(2012). p.79-103

- 이와 동시에 연중 돌봄학교 학생의 학교 만족도는 3년간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생 전체 만족도는 2009년 평균 72.7점에 비해 2010년에는 80.1점, 2011년 84.5점으로 11.8점 향상되었다. 학생의 학교만족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특히 교육활동 및 교육결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8-29>.

표 8-29. 연중 돌봄학교 학생의 학교만족도 변화

단위: 점

구분	사례수(N)	평균	09대비 증감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학교
초등학교	2009	10,671	↑ 10.2	↑ 13.5	↑ 11.8
	2010	9,413			
	2011	8,139			
중학교	2009	10,673	↑ 10.2	↑ 13.5	↑ 11.8
	2010	7,462			
	2011	6,008			

자료: 임연기(2012). p.79-103

- 연중 돌봄학교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역시 전년대비 초·중학교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 연중 돌봄학교 학부모 만족도는 2010년 77.4점에 비해 2011년 82.8점으로 5.4점의 향상을 보였다.
-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특히 자녀의 학교생활 및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역시 초등학교 학부모의 만족도가 중학교 학부모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8-30>.

표 8-30. 연도별 연중 돌봄학교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변화

단위: 점

구분	사례수(N)	평균	증감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학교	
초등학교	2010	7,582	79.0	↑6.2	↑4.6	↑5.4
	2011	4,202	85.2			
중학교	2010	6,121	75.8	↑6.2	↑4.6	↑5.4
	2011	2,566	80.4			

자료: 임연기(2012). p.79-103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 2013년도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실적은 목표치 대비 1.5% 상향 달성되었다<표 8-31>. 농어촌 학교에 대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의 특기적성 및 소질 계발에 기여하였으며 2013년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표 8-31.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참여율	참여학생 수/전체학생 수×100	%	83	84.5	10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의 성과로는 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학부모 기숙사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점과 기숙형 고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또한 기숙형 고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권역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운영과정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 이와 동시에 2013년도 기숙형 고교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목표치 대비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는 기숙형 고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지원이 증대됨에 따라 기숙형 고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표 8-32>.

표 8-32.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기숙형 고교 교육 만족도	기숙사생 대상 설문조사	%	68	78.1	1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 2011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실적은 목표치 대비 100% 달성되었다<표 8-33>.

표 8-33.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군별 통폐합 실적	실적조사	군	9	9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b)

- 또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전반적인 교육 여건 개선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10.10.1),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다는 점을 사업의 성과로 확인할 수 있다.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되었고,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 등을 휴일 및 방과 후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가시간을 건전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인 학습자의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수리 능력 및 삶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 함양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 2013년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목표는 100% 달성되었다<표 8-34>.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 학생 한명, 한명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초등학교(전원학교), 고등학교(기숙형 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학교에 집중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표 8-34.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지원 학교 수	선정학교 명단	교	20	20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 13년도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의 성과 목표는 100% 달성되었다 <표 8-35>. 또한 관련 콘텐츠와 전자칠판 및 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운영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스마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용 능력 및 정보 탐색 능력이 향상되었다.

표 8-35.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지원 학교 수	선정학교 명단	교	300	300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군의 8개 사업의 목표와 추진 실적을 <표 8-36>에 종합 정리하였다.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표 8-36. 정책 사업별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구분	성과지표	측정기준	목표치 (A)	실적(B)	달성도 (B/A,%)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지원 학교 수	선정학교 명단	250	156	62.4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만족도	전문기관 설문조사	70%	80.6%	115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참여율	참여학생수 /전체학생 수×100	83%	84.5%	101.8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기숙형 고교 교육 만족도	기숙사생 대상 설문조사	68%	78.1%	114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군별 통폐합 실적	실적조사	9군	9군	100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지원 학교 수	선정학교 명단	20교	20교	100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지원 학교 수	선정학교 명단	300교	300교	100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투융자 계획		투융자 실적		집행율
	60억 원		95억 원		158.3

3.2. 사업 담당 기관의 만족도

- 사업 담당 기관의 만족도는 사업에 대한 성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업에 대한 만족 정도는 어떠한지,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각 사업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각 사업의 성과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사업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평가한 결과는 <표 8-37>과 같다. 결과적으로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가 응답한 상위 순위에 해당하는 성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사업들의 성과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교육 기회 확대’와 ‘학생 만족도 향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7. 정책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 되는 것

보기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n(명)	%	n(명)	%
교육 기회 확대	17	25.4	37	18.1
교육 품질 향상	9	13.4	24	11.8
교육비 부담 경감	9	13.4	30	14.7
학생 만족도 향상	13	19.4	37	18.1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3	4.5	17	8.3
학부모 만족도 향상	10	14.9	29	14.2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2	3.0	17	8.3
학생 이탈 방지	3	4.5	12	5.9
기타	1	1.5	1	0.5
계(복수응답 가능)	67	100.0	204	100

-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서면 인터뷰 결과를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38>과 같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판단한 사업 성과의 종합적인 순위는 공동 1순위로 ‘교육 기회 확대’, ‘학생 만족도 향상’이 선정되었고, 3순위로 ‘학부모 만족도 향상’이 선정되었다.

- 반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학생 이탈 방지’,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 부분에서는 사업 담당자들이 기대하는 성과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담당 사업들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교육의 양적 측면에는 기여를 하였으나, 교육의 질적 측면을 의미하는 학업 성취

도 향상과 같은 성과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또한 농촌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이탈, 지역 발전 등과 같은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학교 육성 정책 사업의 성과만으로 연관 지을 수는 없는 부분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적 측면의 지원과 함께 농어촌 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8-38. 정책 사업별 성과 분석(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대상)

구분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1순위	2순위	3순위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교육 기회 확대	학부모 만족도 향상	교육 품질 향상, 학생 만족도 향상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교육 기회 확대, 학부모 만족도 향상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교육 기회 확대, 교육 품질 향상, 교육비 부담 경감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교육 기회 확대, 학부모 만족도 향상		학생 만족도 향상,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학생 만족도 향상	교육비 부담 경감, 학부모 만족도 향상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교육 기회 확대, 학생 만족도 향상		교육 품질 향상, 학부모 만족도 향상,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종합	교육 기회 확대, 학생 만족도 향상		학부모 만족도 향상

-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서면 인터뷰 결과를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39>와 같다.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은 ‘교육 기회 확대’를 사업 성과의 1순위로 선정하였고, 기숙형 고교·육성 사업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은 ‘학생 만족도 향상’을 사업 성과의

1순위로 선정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이 판단한 사업 성과의 종합적인 순위는 공동 1순위로 ‘교육 기회 확대’, ‘학생 만족도 향상’이 선정되었고, 3순위로 ‘교육비 부담 경감’이 선정되었다. 즉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응답 1순위와 2순위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두 집단 모두 사업 성과 고려 시, 학생 측면에서 가장 많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8-39. 정책 사업별 성과 분석(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대상)

구분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n=58)		
	1순위	2순위	3순위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교육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학부모 만족도 향상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교육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 만족도 향상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교육 기회 확대, 교육 품질 향상, 학생 만족도 향상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학생 만족도 향상	교육비 부담 경감, 학부모 만족도 향상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교육 기회 확대, 학생 만족도 향상		교육 품질 향상, 학부모 만족도 향상,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종합	교육 기회 확대, 학생 만족도 향상		교육비 부담 경감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를 평가한 결과는 <표 8-40>과 같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57.6%,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64.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사업 성과에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40. 정책 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도

보기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n=33)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n=56)	
	n	%	n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	0	1	1.8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	9.1	2	3.6
보통이다	10	30.3	10	17.8
만족하는 편이다	19	57.6	36	64.3
매우 만족한다	1	3.0	7	12.5
계	33	100	56	100

- 한편 사업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인 대상자들에게 이에 대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경우, 불만족 이유의 1순위로 ‘지역 내 일부 학교 지원에 대한 불만’을 선정하였고, 2순위로 ‘교육비 부담 증가’를 선정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인식 부족이 제기되었다.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은 불만족 이유의 1순위로 ‘학교 운영비 부족’을 선택하였고, 2순위로 ‘학생의 학업 부담 증가’를 선정하였다.
- 이는 실제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담당자의 의견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즉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일부 학교만을 지원해줌으로써 지원 대상 학교에만 사업 성과가 편중되고 이로 인해 ‘지역 내 일부 학교 지원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는 것이다.
- 반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은 학교 운영비 부족을 불만족의 원인으로 본다. 즉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더 많은 운영비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3.3. 농어촌 교육 여건에 대한 인식

- 농어촌 교육 여건에 대한 인식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인식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정도, 학교 육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개선점,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농어촌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활용 정도,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정도, 참여 교육 내용, 교육 내용 중 추가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내용,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농어촌 지역 주민은 농어촌 교육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개선점은 무엇인가’, ‘학교 통폐합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농어촌 지역의 학교 시설은 주민들의 체육, 문화, 교육 등을 위해 얼마나 활용되는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등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중 확대·강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 농촌교육전문가와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은 농어촌 교육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가’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 8-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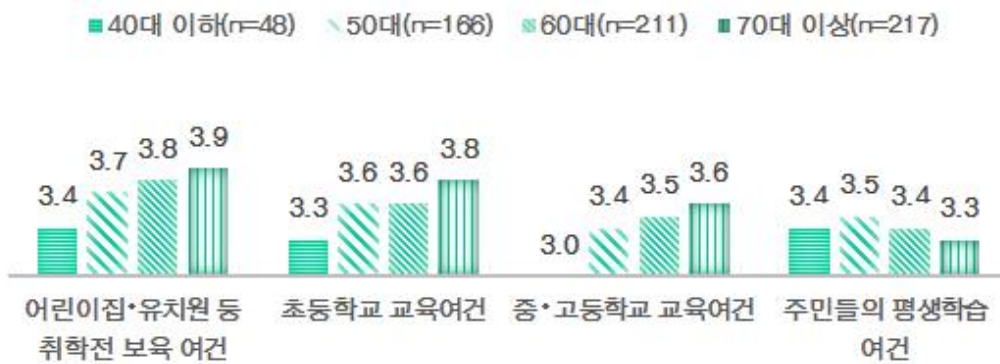
표 8-41.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

보기	농촌교육전문가(n=10)		현지통신원(n=65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학 전 보육 여건	4.0	0.47	3.8	0.79
초등학교 교육 여건	3.8	1.16	3.6	0.83
중·고등학교 교육 여건	3.4	0.84	3.5	0.76
주민들의 평생학습 여건	3.6	0.52	3.4	0.77

- 농촌교육전문가와 현지통신원이 인식한 각 분야별 여건 개선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개선 정도를 보인 분야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학 전 보육 여건’ 분야로 농촌교육전문가와 현지통신원이 일치되는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평균은 3점대 중후반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개선 정도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인식한 3점과 다소 나아졌다고 인식한 4점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학교 육성 정책군의 사업들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적게나마 나아졌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반면 가장 낮은 개선 정도를 보인 분야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농촌교육전문가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교육 여건’ 분야로 선정되었고, 현지통신원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평생학습 여건’ 분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은 결과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군에 해당하는 전 사업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사업들의 역할이 미비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현지통신원이 인식한 교육 여건 분야의 경우 ‘주민들의 평생학습 여건’ 분야가 가장 적은 개선 정도를 보였다. 이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사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특히 농어촌 지역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의 사업 추진이 실제로 농어촌 주민들의 평생학습 여건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나아가 평생학습 환경 구축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학습 기회를 습득하지 못하는 이유 혹은 기회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못하는 이유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현지통신원의 응답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8-1>과 같다. 40대 이하 응답자들은 전반적인 교육 여건의 개선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1.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정도 인식(연령별)



- 농촌교육전문가와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평가한 결과를 요약한 표는 다음 <표 8-42>와 같다.

표 8-42. 학교 육성 정책의 향후 방향성 및 개선점

1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 인적 자원 필요
2	농어촌 학교만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
3	농어촌 학교를 평생학습의 장으로 마련
4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공급과 추가 인력 공급
5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이 아닌 다양한 대안 필요

- 농어촌 학교에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 농어촌 교육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수교사의 확보이다. 특히 교사의 자질과 농촌학교와 농촌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 이는 단지 실력을 갖춘 새로운 교사의 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농촌에 대한 열의를 가진 교사로서 농촌학교에 근무하며 농촌학생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교사를 의미한다.
 - 교사뿐만 아니라 농촌학교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장도 필요하다. 특히 농촌교장의 리더십으로 변화 지향적 리더십과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농어촌 학교에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 인적 자원들을 확보함으로써 양적·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우수한 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농어촌학교 ICT 지원 사업을 통해 디지털 매체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이 유발되었지만, 호기심 유발 차원에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 교사의 투입, 교사와 학생 간의 멘토-멘티 관계 구축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피상적인 학습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농어촌 학교만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농어촌 학교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학력수준을 보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 어렵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촌학교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면, 농어촌 지역과 학생들에게 특화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낮은 학력수준의 학생들에게 보충 학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적정수준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학생에게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 학교를 평생학습의 장으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게하기 위해서 학부모, 지역사회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 농어촌학교 시설을 현대화, 복합화 하여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센터, 평생교육센터로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 전문가 등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 분야의 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의 공급이 시급하다.
 - 또한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영농교육 및 직업교육 등은 기술센터 등 전문화된 기관이 있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 따라서 시민성 교육, 인문학 교육 등을 통해 ‘주민 행복’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방과후 교육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 인력의 공급과 추가 인력의 공급이 필요하다.
 -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켜야 한다.
 -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와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교사의 가중된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 인력을 제공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

-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정책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선택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소규모학교들은 혁신학교나 대안학교 등의 기능을 수용하여 지속적인 보존 정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
 - 또한 1면 1학교 유지 원칙을 지킴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보다는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특성화학교 형식으로 운영해나가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다.
- 나아가 기숙사 등 시설의 현대화 및 면학 분위기 조성, 농어촌 학교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 시상 대폭 확대, 귀농귀촌예정자들에 대한 농산어촌 교육형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개선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지통신원,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농촌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지통신원들의 약 54.5%가 소규모 학교를 근처에 있는 큰 학교와 통폐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8-43>.

표 8-43.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현지통신원)

보기	현지통신원(n=654)	
	n	%
작더라도 유지해야 함	241	36.9
잘 모르겠음(판단보류)	56	8.6
근처 큰 학교와 통폐합	357	54.5

- 현지통신원의 연령별 응답 분포를 살펴본 결과, 40대 이하 응답자와 50대 이상 응답자 간에 상이한 분포를 확인하였다<그림 8-2>.

- 즉 현지통신원의 전반적인 의견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쪽으로 기울었으나, 취학 자녀를 둔 40대 부모의 65.3%는 소규모 학교가 작더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거 자녀 유무에 따라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존속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더 많은 의견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2.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연령별)



- 실제 응답 결과,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동거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동거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은 통폐합 반대 의견(소규모 학교 유지)이 5.5% 정도 높았으나, 동거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은 통폐합 찬성 의견이 2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3>.

그림 8-3.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동거자녀 유무 여부)



○ 또한 동거자녀 취학 유형에 따른 응답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유지와 통폐합 의견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그림 8-4>.

- 동거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지에 대한 의견이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통폐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향후 교육 여건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유지에 대한 의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4.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동거자녀 취학 유형별)



-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인근의 큰 학교로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농촌교육 전문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모두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단위학교 사업담당자의 41.1%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농촌교육전문가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들은 이보다는 약한 정도를 보이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이를 통해 단위학교 사업담당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이며 학교 유지에 대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약한 의견을 보였다<표 8-44>.

표 8-44.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전문가)

보기	농촌교육전문가 (n=11)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n=33)		단위학교 사업담당자(n=56)	
	n	%	n	%	n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9.1	6	18.2	23	41.1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5	45.5	12	36.4	15	26.8
보통이다	3	27.3	4	12.1	4	7.1
동의하는 편이다	1	9.1	9	27.3	9	16.1
매우 동의한다	1	9.1	2	6.1	5	8.9
계	11	100.0	33	100.0	56	100.0

- 실제로 제주 서귀포시의 수산초등학교는 통폐합 위기였던 작은 학교에서 타 학교들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은 학교이다. 수산초등학교는 재적 학생 수는 25명에 불과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에 오르내렸지만 수산초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발족, 제주도 재정 5억 원과 수산리 및 총동문화 후원금 7억 원을 확보해 공동임대주택 2동을 건립하는 등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 이와 같은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수산초 학생 수는 2013년 32명, 2014년 47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학교 인근 공동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 수가 늘었다.
-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학교 시설은 주민들의 체육, 문화, 교육 등을 위해 얼마나 활용 되는가’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 8-45>과 같다. 응답자의 48%가 주변 학교 시설의 개방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그 중 약 5%가 주민들이 매우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고 하였다.
 - 이를 통해 먼 거리에 있는 교육 기관의 역할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주변 학교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근 학교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농어촌 주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8-45. 주변 학교 시설 개방 정도

보기	현지통신원(n=646)	
	n	%
전혀 개방 안 됨	48	7.4
잘 개방 안 됨	162	25.1
잘 모름	92	14.2
개방이 잘 되는 편	310	48
매우 활발히 주민들이 활용	34	5.3
계	5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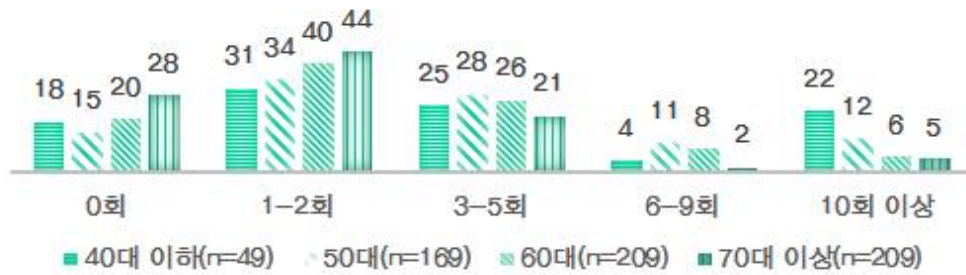
-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등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 8-46>와 같다.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자체 등에서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연간 1회 이상 교육 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즉 농어촌 주민 10명 중 8명 정도의 주민들이 연간 교육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8-46. 지난 1년간 교육 활동에 참여한 횟수

보기	현지통신원(n=644)	
	n	%
참여한 적 없음	135	21
1~2회	251	39
3~5회	161	25
6~9회	42	6.5
10회 이상	55	8.5
계	644	100.0

- 현지통신원 응답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간 3-5회의 참여 횟수를 보이는 연령층은 50대, 60대 주민들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내 40대 이하의 주민 수 부족, 70대 이상의 고령층 주민들의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8-5>.
-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 횟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주변 학교 시설 활용 및 교육 참여자들을 위한 버스 대절 등의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림 8-5. 지난 1년간 교육 활동에 참여한 횟수(연령별)



- 참여 횟수와 더불어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순위별로 나열한 결과는 다음 <표 8-47>과 같다. 첫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영농 및 직업(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7.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전체)

순위	보기	현지통신원(n = 604)
		합계(3가지 선택)
1순위	영농 및 직업(취업) 관련 교육	525
2순위	교양·문화 교육	233
3순위	보건·체육(스포츠)·건강 교육	217
4순위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	191
5순위	자원봉사 교육	146
6순위	정치·시민참여 교육	56
7순위	문해(글 읽고, 쓰기)·학력인정 교육	32
8순위	이 외의 교육	27
9순위	어학 교육	9
계		604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 내용을 연령별 순위로 비교해본 결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현재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농업 관련 교육에 주로 참여하고 있으나, 연령에 관계없이 교양 교육, 건강 교육,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8-48>.
-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필수적인 농업 교육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다른 분야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48.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연령별)

	40대 이하(n=101)	50대(n=401)	60대(n=468)	70대 이상(n=447)
1순위	영농 및 직업(취업) 관련 교육	영농 및 직업(취업) 관련 교육	영농 및 직업(취업) 관련 교육	영농 및 직업(취업) 관련 교육
2순위	교양·문화 교육, 보건·체육(스포츠)·건강 교육	교양·문화 교육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	보건·체육(스포츠)·건강 교육
3순위		보건·체육(스포츠)·건강 교육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

- 이와 더불어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중 확대·강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8-49>와 같다. 그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교육은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도 정보화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주민들 또한 정보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 향후 관련 교육을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49. 확대·강화되었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전체)

순위	보기	현지통신원	
		n	%
1순위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	133	25.6
2순위	영농 및 직업(취업) 관련 교육	113	21.7
3순위	교양·문화 교육	112	21.5
4순위	보건·체육(스포츠)·건강 교육	109	21
5순위	자원봉사 교육	16	3.1
6순위	정치·시민참여 교육	14	2.7
7순위	어학교육	13	2.5
8순위	문해(글 읽고, 쓰기)·학력인정 교육	8	1.5
9순위	그 외 교육	2	0.4
계		520	100.0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향후 확대 되었으면 하는 교육 내용을 연령별 순위로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 <표 8-50>과 같다. 5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1순위로 교양·문화 교육이 선정되었고, 60대 이상에서는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이 선정되어 연령층 간에 서로 다른 결과가 확인되었다.

표 8-50. 확대·강화되었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연령별)

	40대 이하(n=42)	50대(n=141)	60대(n=173)	70대 이상(n=158)
1순위	보건·체육(스포츠)·건강교육, 교양·문화 교육	교양·문화 교육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
2순위		영농 및 직업(취업) 관련 교육	영농 및 직업(취업) 관련 교육	보건·체육(스포츠)·건강교육
3순위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	보건·체육(스포츠)·건강교육	보건·체육(스포츠)·건강교육	영농 및 직업(취업) 관련 교육

- 실제로 인천 용진군은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정보화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민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은 하루 2시간씩 1주일 단위로 전문강사를 초빙 하여 각 면별로 정보화 수준에 맞는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으로, 공인인증서 사용하기, 온라인 쇼핑하기, 아이핀·마이핀 가입하기, 스마트폰 활용하기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지리적 위치로 인한 농어촌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도시와 정보화 격차도 크게 벌어져 이를 방치할 경우 새로운 차별이 고착화 될 것이기 때문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따라서 향후에도 주민들의 교육 요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정보 활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이에 대한 이유는 ‘너무 바빠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다음의 장애요인은 ‘가까운 거리에 교육 기관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확인되었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 교육 기관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먼 거리에 있는 교육 기관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표 8-51>.

표 8-51. 교육활동 참여 장애요인(전체)

순위	보기	현지통신원(n=610)	
		n	%
1순위	너무 바빠서	217	35.6
2순위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127	20.8
3순위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몰라서	101	16.6
4순위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84	13.8
5순위	원하는 교육이 없어서	57	9.3
6순위	학습할 자신이 없어서	14	2.3
7순위	교육비용이 너무 비싸서	10	1.6
계		610	100.0

○ 응답의 연령별 순위를 비교해본 결과, 70대 이상의 주민들은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교육활동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나, 60대 이하의 주민들은 너무 바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표 8-52>.

-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바쁘지 않은 시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학교를 적극 활용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표 8-52. 교육활동 참여 장애요인(연령별)

	40대 이하(n=48)	50대(n=165)	60대(n=200)	70대 이상(n=192)
1순위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2순위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3순위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몰라서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몰라서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몰라서	너무 바빠서

3.4. 정책 성과 부문 평가 결과 종합

- 정책 성과 부문은 학교 육성 정책이 농어촌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도, 사업 담당 기관의 성과 만족도, 농어촌 교육여건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 성과 목표 달성도는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 정도는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문헌 분석을 통해 개별 사업들의 목표치 대비 성과를 평가하였다.
 - 사업별 성과 분석 자료, 추진 실적 자료 등을 참고하여 개별 사업들의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8가지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2013년을 기준으로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100%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 담당 기관의 만족도는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업에 대한 만족 정도는 어떠한지,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각 사업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각 사업의 성과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사업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평가한 결과,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가 응답한 상위 순위에 해당하는 성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사업들의 성과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교육 기회 확대’이며, 그 다음으로는 ‘학생 만족도 향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와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를 평가한 결과,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57.6%,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64.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사업성과에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동시에 사업성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인 대상자들에게 이유를 확인한 결과,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지역 내 일부 학교 지원에 대한 불만’을 선정하였고,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은 ‘학교 운영비 부족’을 불만족의 이유로 선정하였다.
- 농어촌 교육여건에 대한 인식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인식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정도, 학교 육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개선점,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농어촌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활용 정도,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정도, 참여 교육 내용, 교육 내용 중 추가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내용,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농어촌 지역 주민은 농어촌 교육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개선점은 무엇인가’, ‘학교 통폐합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농어촌 지역의 학교 시설은 주민들의 체육, 문화, 교육 등을 위해 얼마나 활용되는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등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중 확대·강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 농촌교육전문가와 현지통신원이 인식한 각 분야별 여건 개선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개선 정도를 보인 분야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학전 보육 여건’ 분야로 농촌교육전문가와 현지통신원이 일치되는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든 평균은 3점대 중후반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개선 정도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인식한 3점과 다소 나아졌다고 인식한 4점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학교 육성 정책군의 사업들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적게나마 나아졌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학교 육성 정책의 향후 방향성 및 개선점에 대해서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 인적 자원 필요하다는 점, 농어촌 학교만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해야 한다는 점, 농어촌 학교를 평생학습의 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공급과 추가 인력 공급과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이 아닌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현지통신원,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농촌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평가한 결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현지통신원의 의견은 응답자의 54.5%가 근처 큰 학교와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동거자녀 유무에서 차이를 보였고, 동거자녀 중에서도 자녀의 취학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응답 분포를 보였다. 동거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 통폐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지에 대한 의견이 다소 높았다.
- 또한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가 적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농촌교육 전문가,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모두 동의하는 의견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의 41.1%는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문항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학교 시설은 주민들의 체육, 문화, 교육 등을 위해 얼마나 활용되는가’를 평가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주변 학교 시설의 개방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그 중 약 5%가 주민들이 매우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고 하였다.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자체 등에서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연간 1회 이상 교육 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 참여 횟수와 더불어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순위별로 나열한 결과, 첫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영농 및 직업(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응답자의 약 87%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중 확대·강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교육은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너무 바빠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으로 정책 성과 부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학교 육성 정책은 전반적인 교육 여건을 향상시켰으나,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되는 취학 후 교육 여건 분야는 미약하였다.
- 학교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들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향상되었으나 취학 전 보육 여건에 대한 개선 인식이 가장 높고, 취학 후 교육여건 분야에 대한 개선 정도는 낮은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 육성 정책의 지원 대상은 초/중/고교이기 때문에 사업들의 실효성, 효과성을 확인하고, 개선에 대한 체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둘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주변 학교 시설 활용,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교육활동 참여를 증가시켰다.
- 농어촌 지역의 주변 학교 시설의 개방은 잘 되는 편이며, 먼 거리에 있는 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향후에도 적극 개방이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육 참여는 연간 1~2회 정도 이루어지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하는 교육은 주로 영농 및 직업(취업) 관련 교육이며, 향후에는 영농 및 직업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이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향후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특성화된 농어촌 학교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 농어촌 학교에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소규모 학교의 유지를 위해 통폐합이라는 대안보다는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 소규모 학교와 큰 학교와의 통폐합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적은 수의 교사와 학생이 이끌어나가는 농어촌 학교의 특수한 특성을 다른 시각에서 개발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고안해볼 필요가 있다.

제 9 장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제안

1. 학교 육성 정책 개선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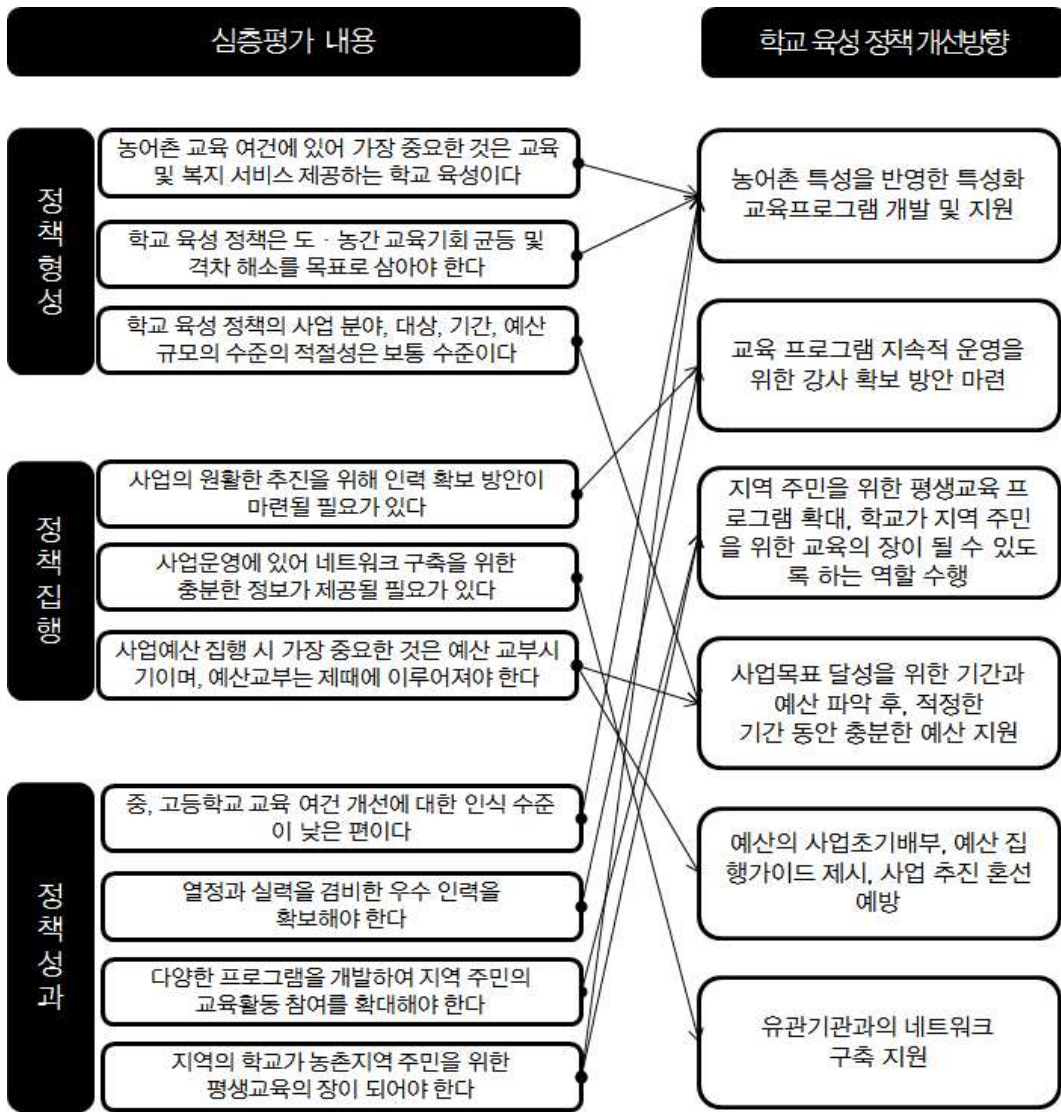
- 농촌교육 전문가, 시·도별 사업담당자, 단위학교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서면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부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 형성 부문에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은 농어촌의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육성해야 하고, 도·농간 교육기회 균등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각 사업의 분야, 대상, 기간 및 예산 규모가 사업의 목표 달성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정책 집행 부문에서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예산이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
 - 정책 성과 부문에서 중, 고등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며,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교육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지역의 학교가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성과 영역별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육성 정책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로 도출하였다<그림 9-1>.
 - 첫째,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 둘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 넷째, 예산은 사업 초기에 배부하고,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도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다섯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 여섯째,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 각 개선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어촌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교육전문가들은 농어촌 교육 여건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육성”을 1순위로, “방과 후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2순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 즉,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때, 진로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적 특색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서 비슷한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9-1. 심층평가를 통한 개선점 도출



- 농어촌 지역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진로 체험 및 직업 체험 등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학교별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관련 교과 교사가 주체가 되어 인근의 학교와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하며,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근 학교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농촌의 10~15%가 결혼이민자인 만큼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많이 있으나,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 능력’을 함양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을 위한 다문화 수용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다문화 학생들은 적응만 어느 정도 이뤘을 시, 진로 교육 등을 통해 이 사회의 귀한 일원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 목표를 명확화 시켜주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이탈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농어촌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 집행 상의 기타 애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우수강사 확보 방안이 마련된 필요성’에 대해 평균 4.6 정도 수준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 실제 경상남도 교육청의 함양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사 풀(pool)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강사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영국의 CCE(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에서는 창의적 학습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아동과 아동 가족의 삶을 개선하고, 학습자의 열망, 성취, 재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비교적 장기적으로(1년 이상) 학교와 연계하여 미디어 전문가와 함께 영화를 만들어본다든가, 연극하는 사람과 함께 학교 연극을 기획하여 공연하고, 공예가와 함께 학생들의 공동 작품을 만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

- 셋째,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평생학습 환경 구축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학습 기회를 습득하지 못하는 이유 혹은 기회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못하는 이유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여 적정한 기간 동안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 즉,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사업의 지원 분야, 대상, 기간 및 예산 규모의 수준이 목표 달성에 적절성 정도에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 2.9로 보통 수준 보다 낮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 따라서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규모, 목표에 따라 기간, 예산을 정하는데 있어 컨설팅 사업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를 통한 충분한 기간과 예산이 지원되도록 한다.
- 다섯째, 예산은 사업 초기에 배부하고,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도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설문조사 결과 농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의 경우 스마트기기 구입 및 무선망 구축을 위해 배부된 예산 규모가 매우 작아 현실적으로 ICT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특히 예산 교부가 늦게 이루어져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 그리고, 예산 집행을 위한 분명한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 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 따라서, 일부에서는 예산 집행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의 특성에 따른 예산 사용이 불가능하여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지만, 최소한 예산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추가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 가이드를 제시, 설명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자의 집행 관련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여섯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체 45명 중 57.8%에 해당하는 26개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3.3%에 해당하는 15개교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학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11명, 42.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실제 지역 교육지원청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있지 못한 상황이다(최돈민 2013).
 - 또한, 일선 학교가 주로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의 종류는 교육지원청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센터 45.2%, 생활권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 40.3% 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김현철, 황여정 2012: 5-6).
 - 농어촌 학교는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지역 교육청은 지역의 발전과 학교의 운영이 함께 추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지자체의 협력체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서울대학교 농어촌교육지원센터는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과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의 참여 학교, 지역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및 교육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의 모임, 지역별 모임의 장을 만들어 의견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가 전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상의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제3차 기본계획 과제 도출

2.1. 유지되어야 하는 과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과제의 경우,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기숙형 고교 지정 육성 사업,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사업,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등이 있다.
- 기존 과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성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측면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것”, “향후 달성되어야 할 농어촌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과제 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 9-1>과 같다.

표 9-1. 기존 과제 유지 여부(안)

구분	유지 여부	개선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	• 학교의 돌봄기능 강화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	• 특기적성 교육 및 외국어 교육 강화
기숙형 고교 지정 육성 사업	×	•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가 인식하기에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편이며, 입시 학원식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	•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가 지역 주민의 교육,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구분	유지 여부	개선점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	• 사업 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다른 사업의 내용이랑 동일함. 특히 ICT 사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은 ICT 연수 및 컨설팅에 우수중학교 지원 학교를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	○	• 인프라 구축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환경과 첨단 e-러닝 시설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이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이를 통해서 교육환경 조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특성화교육과정프로그램(체험, 조사, 탐구, 토론 등), 지역연계프로그램 등), 우수 인력 배치, 지역사회와의 연계, 학교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농산어촌은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돌봄 서비스 기능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연중 돌봄학교 사업이 2010년을 기점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돌봄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해당 사업에서 담당을 하여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 둘째,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방과후 교육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농어촌 정부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사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업무 전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특기적성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방과후 대학생 멘토제”: 지역소재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개별화된 학습 및 특기적성 지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 “방과후 교육 바우처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잠재적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 예산지원(지원대상자가 1년간 사용 가능액 모두 교육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으로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구축
 - “농산어촌 방학 교육 지원 프로그램”: 읍·면단위 이하 농산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방학 중 학교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도·지역 교육청 및 단위 학교가 역할 분담
- 셋째, 기숙형 고교 지정 육성 사업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격차 완화, 학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운영비, 급식비 등의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가 인식하기에 정책 수단으로써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입시 학원식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의 경제의 쇠퇴와 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이동으로 농산어촌, 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어 교육과정 운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규모로 학교를 육성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 통폐합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를 재배치함으로써 지역 발전 및 교육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나 2011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교육을 도구로 인위적으로 농촌을 재편하는 결과

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유지보다는 향후 다른 과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은 농어촌 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확대 및 내실화하고,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그들의 자립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학교의 도서관을 휴일 및 방과 후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시설 개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가 지역 주민의 교육,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이르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사회 간 접촉하거나 인적·물적·정보적 자원을 공유하는 활동, 학부모·지역 주민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적용하여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구분할 수 있다.
 - 최돈민(2013: 275-276에서 재인용함)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동모형을 통해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9-2>.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유형은 학교 지원형과 지역사회 자원활용형이 있다.
 - 먼저 학교지원형 연계 모형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학교 활동에 활용하는 모형으로 보조교사 등 지역의 전문성을 지닌 교육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수업의 보조 및 지원 등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 지역사회 자원 활용형 연계 모형은 지역의 전통 문화 견학이나 체험학습, 현장 학습 등 지역사회의 교육적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모형이다.
 -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가 사

회와 연계하는 유형은 학교 자원 활용형 연계 모형과 지역자원형 연계 모형으로 구분된다.

- 먼저 학교 자원 활용형 연계 모형은 학교 자원을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형이고, 지역자원형 연계 모형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지역의 동아리 활동이나 지역사회의 지도자나 강사로 활동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 학교의 교육력을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림 9-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유형



자료: 최돈민(2013: 275)

- 여섯째,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은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 중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설비(기숙사 신축, 리모델링, 특별실 구축 등), 인건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단기 인건비), 기자재비(각종 기자재 및 장비 구입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각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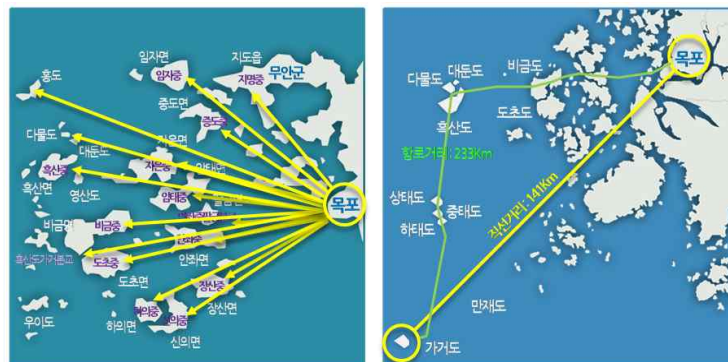
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종료는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향후, 지역의 거점 중학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 종료 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편,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일부는 타 사업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경우가 있다. 특히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청은 지역 내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학교를 대상으로 ICT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선정 학교는 ICT 연수 및 컨설팅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사업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내의 각 사업담당자는 관련 사업을 협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일곱째, 농산어촌 학교 ICT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교육정보화 시스템을 농산어촌 학교에 접목하여 지원함으로써,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확보, 콘텐츠 활용 여건 개선, 콘텐츠 활용 능력 제고,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교실 수업 개선과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기존 지원 대상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학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부터 스마트 학습 단말기 보급 등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 무선인터넷 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섬드리 하나로’ 정책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남 신안지역 1,004

개의 섬지역 39교 21개 분교 총 2,878명의 학생들에게 원격으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그림 9-3>.

- ICT 지원을 통해서 집중이수 및 미개설 교과수업, 원격화상 수업, 방과후 학습 등이 가능하다.

그림 9-3. ‘섬드리 하나로’ 정책: 전남 신안 지역



2.2. 추가되어야 할 과제

- 정책적 요구 및 학교 육성 정책의 개선점을 고려하여 3차 기본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산어촌 초등학교 육성 지원 사업
 - 둘째, 농산어촌 진로교육 지원
 - 셋째, 농산어촌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농산어촌 초등학교 육성 지원 사업]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는 과소화 비율이 높고,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추세이며, 학교의 돌봄 기능이 강조되어

야 한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초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초·중학교이 학력을 증진시키고, 특기·적성 계발을 지원하며, 맞춤형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 또한 과소화된 농어촌 초등학교들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학생 수 부족, 인력 부족,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이에 면지역에 인접한 과소화된 농어촌 학교끼리(최대 통학거리 10km 이내) 교육 시설과 인적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동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농어촌 교육 여건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산어촌 진로교육 지원] 농산어촌 지역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모든 중·고등학교에 확대 배치되도록 해야하며,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는 순회교사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농어촌 전체 중·고교에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을 확산하여 진로 체험, 심리검사, 상담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권역별·거점별 모의 진로 체험 관련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며, 생활권 내 협력학교를 연계하여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화상 시스템을 통한 전문직업인 멘토링과 같은 ICT 기반을 활용한 진로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서 개발 및 적용된 사례를 타 학교로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

- [농산어촌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학교 규모, 교육 내용 등 여러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소규모학교 교수·학습 모델, 식생활·생태·전통 문화 등 농어촌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학교에 맞는 맞춤형, 학습자 중심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부 록 1

설문조사 개요(보건의료 부문)

□ 조사목적 및 방법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가는 사업의 적용을 받는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제공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함께 비교함으로써 계획의 성과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 대상자로서 통신원을 선정하였으며, 지역 주민과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보건진료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국 853곳의 보건진료소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157곳에서 조사에 응하여 18.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 조사내용

○ 통신원 조사의 주요 내용

주제	세부 문항
응급의료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응급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의료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 의료기관 - 전반적인 의료접근성 -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 및 불편사항 - 공공의료기관 기능에 대한 평가 - 미충족 의료 현황 및 원인 - 과거, 현재 미래의 외래의료 접근성 변화 -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찾아가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찾아가는 서비스의 문제
의료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력의 양적 충분성 -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사업 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전과 비교한 사업환경

○ 보건진료소장 조사의 주요 내용

주제	세부 문항
응급의료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요 -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 - 과거, 현재, 미래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변화 - 응급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의료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역의 의료 수요 - 지역 주민의 상용 의료기관 - 과거, 현재 미래의 외래의료 접근성 변화 -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국가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원사업별 만족도
찾아가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역 주민의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찾아가는 서비스의 문제
의료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력의 양적 충분성 -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 공중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사업 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전과 비교한 사업환경

□ 응답자 현황

- 조사에 참여한 통신원은 50대 이상 고령자가 상당수를 이루며, 주로 읍면 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농어촌 거주기간이 길어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의 변화와 요구를 잘 반영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조사대상자 중 40대 이하는 7.5%로 적고, 지역별로는 경북과 전남이 각각 17.9%, 16.3%로 많았고, 대구, 세종, 울산, 인천 지역 거주자는 5명 내로 적었다.
 - 읍면 소재지 또는 읍면 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의 거주자가 73.9%로 대다수를 이루어, 조사대상자들은 농어촌 거주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해당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농어촌 지역 거주기간이 평균 46.3년이고, 현재 지역의 거주기간이 평균 44.5년으로 지역 주민의 이동이 거의 없었다.
 -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상태는 나쁘다는 응답(20.2%)보다 좋다는 응답(27.1%)이 더 많았다.
- 조사에 참여한 보건진료소장의 연령은 50대가 63.9%로 가장 많았고, 40대(27.1%)가 뒤를 이었으며, 총 업무 경력이 평균 20.4년, 현재 근무지에서의 경력도 평균 9.7년으로 농어촌의 의료 제공 환경의 변화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역은 전남(36.8%)이 가장 많았고,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지역이 각각 10%이상이었다.
 - 지역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농어촌이 67.1%로 가장 많고, 도서 산간 지역(벽오지)이 18.9%, 도농복합지역이 14.0%를 차지하였다.

부표 1-1. 조사 대상자의 일반 현황(통신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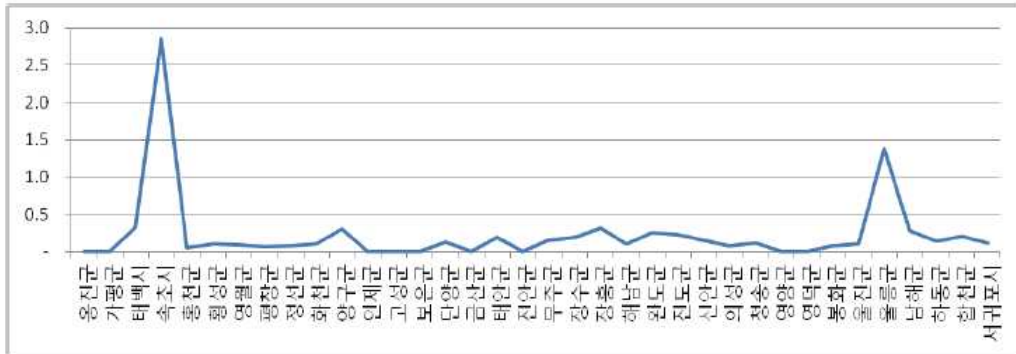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30대	10	1.5
	40대	39	6.0
	50대	169	26.1
	60대	211	32.6
	70세 이상	219	33.8
지역	강원	54	8.5
	경기	64	10.0
	경남	92	14.4
	경북	114	17.9
	대구	1	0.2
	세종	3	0.5
	울산	3	0.5
	인천	1	0.2
	전남	104	16.3
	전북	62	9.7
	제주	11	1.7
	충남	74	11.6
	충북	55	8.6
지역 특성	읍면소재지	244	38.0
	읍면 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	231	35.9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168	26.1
거주기간	농어촌 지역 거주기간		평균 46.3±22.2년
	현재 지역 거주기간		평균 44.5±23.1년
건강상태	좋음	177	27.1
	보통	345	52.8
	나쁨	132	20.2

부표 1-2. 조사 대상자의 일반 현황(보건진료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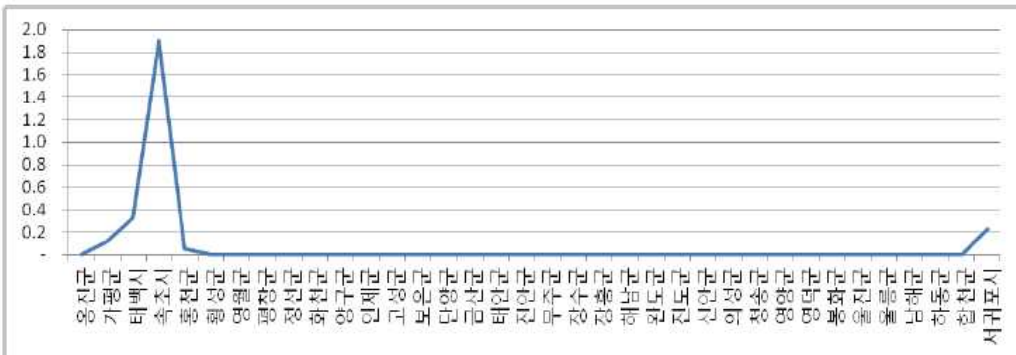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30대	11	7.6
	40대	39	27.1
	50대	92	63.9
	60대	2	1.4
지역	강원	8	5.6
	경기	3	2.1
	경남	19	13.2
	경북	16	11.1
	울산	2	1.4
	전남	53	36.8
	전북	17	11.8
	제주	4	2.8
	충남	15	10.4
	충북	7	4.9
지역 특성	일반농어촌	96	67.1
	도서, 산간 지역(벽오지)	27	18.9
	도농 복합지역	20	14.0
거주기간	현재 근무지 경력(년)		9.7 ± 9.9
	전체 근무 경력(년)		20.4 ± 10.9

부그림 2-2. 취약지별 100km² 당 응급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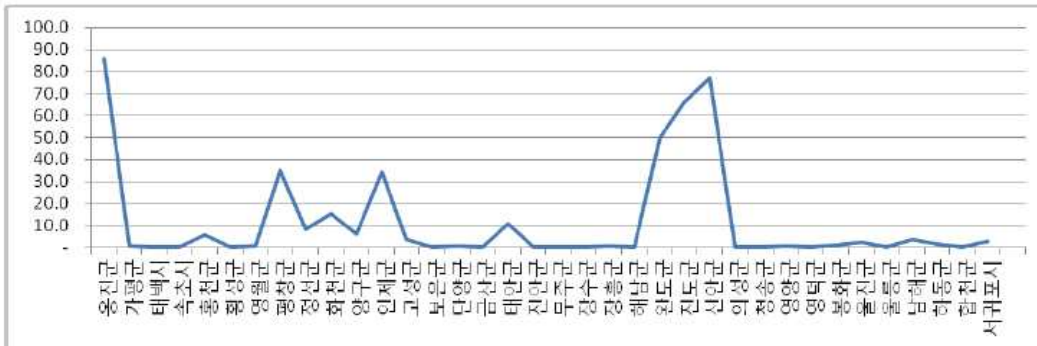
부그림 2-3. 취약지별 100km² 당 분만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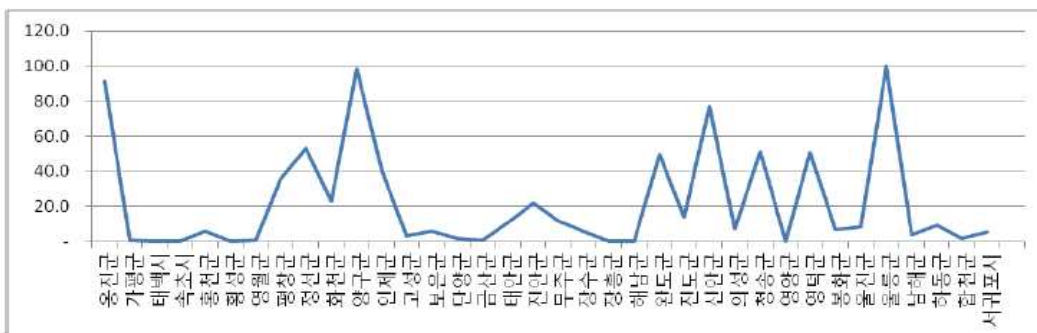
부표 2-2.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

구분			내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외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평균 비교	전체 평균		1.8	867	3.4	1,392	
	그룹I	취약지	전체	11.4	4,322	22.1	7,187
			도서	53.1	19,424	79.6	22,407
			육지	6.2	2,434	14.9	5,285
		비취약지		0.2	288	0.3	422
	그룹II	군	5.2	2,017	10.0	3,278	
		시	0.3	581	0.3	620	
구		0.0	101	0.1	331		

부그림 2-4. 내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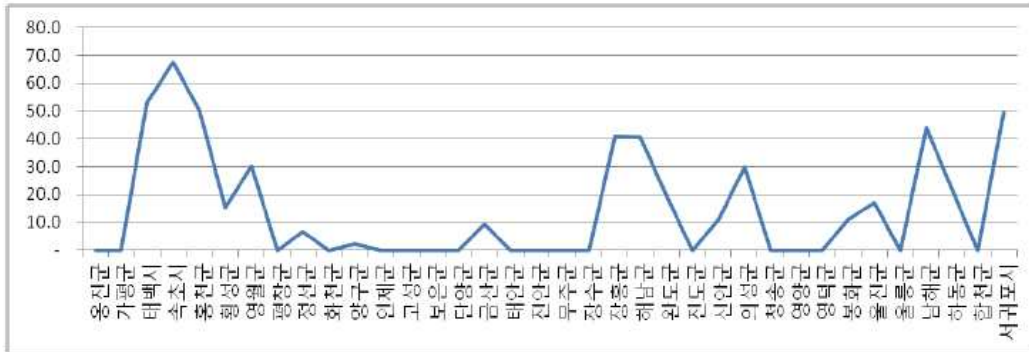
부그림 2-5. 외과가 개설된 병원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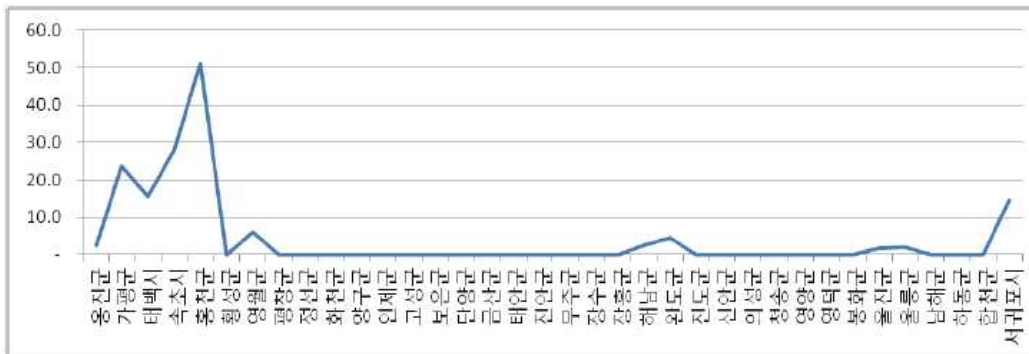
부표 2-3. 관내 의료 이용률

구분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평균 비교	전체 평균		36.3	17.1	34.9	
	그룹I	취약지	전체	14.4	4.2	14.7
			도시	7.6	2.3	13.1
			육지	15.3	4.5	14.9
	비취약지		40.0	19.2	38.3	
	그룹II	군	21.2	2.7	19.1	
		시	49.6	28.8	59.7	
구		40.3	21.4	32.2		

부그림 2-6. 관내 의료 이용률(응급실)



부그림 2-7. 관내 의료 이용률(분만실)



부 록 3

조사표(보건의료 부문)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기간: 2014. 10. 31 ~ 11. 13)
<p>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림수산물부의 의뢰를 받아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지 통신원 여러분들께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p> <p>설문지는 본인께서 직접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해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보장됩니다. 작성한 설문지는 동봉해드린 회신봉투에 넣어 11월 13일까지 보내주십시오(우표는 붙이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p>	

통신원번호 /성명 () / 연락처 ()

다음에 분야별로 제시한 질문들에 대하여 주십시오.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의료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8. 지난 1년 동안 귀하 혹은 귀하의 가족이 아프셨을 때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 | | |
|---------------------------|-----------------|
| ①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② 지방의료원, 사·도립병원 |
| ③ 동네 병(의)원 | ④ 종합병원, 대학병원 |
| ⑤ 기타(_____) | |

9.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네병원과 종합병원·대학병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 내에서 다음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용한 의료기관을 모두 V표시해 주시고 의료의 질, 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용 여부	의료서비스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0-1. 동네 병(의)원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10-2. 종합병원·대학병원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볍거나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동네병원과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실 때 이용하시는 종합병원 혹은 대학병원을 이용하시면서 생각하셨던 불편사항에 대해 여쭙는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2가지 골라 1순위, 2순위에 V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1-1. 동네병원 이용시 불편사항 (2개 선택)	11-2. 종합병원·대학병원 이용시 불편사항 (2개 선택)
①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다		
② 대기시간이 길다		
③ 의료기관 내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하다		
④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⑤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과목이 제한적이다		
⑥ 진료비용이 많이 든다		
⑦ 어느 의료기관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⑧ 기타(_____)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등을 말합니다.

12.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지역 주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
- ② 부족하지만 공공의료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는 편이다
- ③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 ④ 공공의료 기능이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다

※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찾아가는 서비스란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진료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13.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찾아가는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② 불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14.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민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2가지 골라 1순위, 2순위에 V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순위	2순위
① 찾아오는 횟수가 적다		
② 원하는 의료 서비스가 없다		
③ 의료 인력의 전문성이 낮다		
④ 의료 장비가 낙후되었다		
⑤ 기타()		

※ 주민이 원하면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5. 최근 1년 동안, 귀하 혹은 귀하의 가족께서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8-1번으로) ② 없다(☞ 9번으로)

15-1.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인 이유로
 ② 의료기관에 예약을 하기 힘들어서
 ③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어서
 ④ 교통이 불편해서
 ⑤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의료기관이 문을 열지 않아서
 ⑥ 의료기관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⑦ 증상이 가벼워서
 ⑧ 기타(_____)

16. 5년 전에 비해,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의료접근성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까? 해당되는 칸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악화됨	약간 악화됨	그대로임	약간 개선됨	매우 개선됨
16-1. 응급의료	①	②	③	④	⑤
16-2. 외래의료	①	②	③	④	⑤
16-3. 입원의료	①	②	③	④	⑤

17.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2가지 골라 1순위, 2순위에 V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순위	2순위
① 동네 병원 확충		
②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확충		
③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		
④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확충		
⑤ 기타()		

※ 응급시 응급센터까지의 이동 및 응급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응급의료를 이용하지 않으셨더라도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18.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는 사고나 질환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9.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V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9-1.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센터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송과정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19-2. 응급센터에서 도착해서 이용한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를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2가지 골라 1순위, 2순위에 V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순위	2순위
① 119 등 구급차를 요청한 후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② 119 등 구급차수를 늘려야 한다		
③ 구급차 외에 교통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자가용, 대중교통 등)		
④ 119 등 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 구조사를 늘려야 한다		
⑤ 119 등 구급차내에 설치된 응급 의료 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보다 먼 거리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응급헬기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⑦ 응급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⑧ 기타()		

2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응급실을 이용하셨을 때,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응급실 이용경험이 없으실 경우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2가지 골라 1순위, 2순위에 V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순위	2순위
① 가까운 거리에 응급센터가 없다		
② 응급센터에 도착한 후 응급서비스를 받기까지의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응급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④ 응급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최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⑤ 기타()		

※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22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현재 의료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의료인력의 수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충분한 편임	부족한 편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22-1.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2-2.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2-3. 민간 종합병원, 대학병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령	① 30세 미만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세 이상
지역	()도 ()시·군 ()읍·면·동
거주기간	농어촌 지역 거주기간 약 년 (현재 지역 거주기간 약 년)
건강 상태	귀하는 평소 본인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동거중인 자녀	귀댁에 동거중인 취학 전·초·중·고생 자녀(손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① 있음 (취학전: 명, 초등학생: 명, 중학생: 명, 고등학생: 명) ② 없음
학교까지의 거리	귀댁에서 인근 학교까지 몇 분 안에 가실 수 있습니까(차량 이용)? - 초등학교: ① 5분 이내 ② 10분 이내 ③ 20분 이내 ④ 30분 이내 ⑤ 30분 이상 - 중 학교: ① 5분 이내 ② 10분 이내 ③ 20분 이내 ④ 30분 이내 ⑤ 30분 이상 - 고등학교: ① 5분 이내 ② 10분 이내 ③ 20분 이내 ④ 30분 이내 ⑤ 30분 이상
지역	귀하가 사시는 지역의 특성은? ① 읍소재지내(시군청, 관공서 인접지역) ② 면소재지(면사무소 등 인접지역) ③ 읍·면 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 ④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 사 표 번 호	
-----------	--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개선을 위한 보건진료소장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계획)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중입니다.

본 설문지는 삶의 질 계획 중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관련된 내용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소장님의 모든 개인적 건강정보 및 기타정보는 코드화되어 오직 코드번호로만 식별될 것입니다.

소장님의 응답은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평가에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 응급의료의 접근성

※ 응급의료의 접근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어떠하다고 판단하십니까?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2.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최근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최근 의료이용 수요가 매우 감소하였다.
 ② 최근 의료이용 수요가 감소하였다.
 ③ 최근 의료이용 수요가 증가하였다.
 ④ 최근 의료이용 수요가 매우 증가하였다.
 ⑤ 별다른 변화 없다.
3.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의 **현재**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현재와 비교하여 **과거 5년 전**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후 5년** 이후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각각 평가하여, 해당되는 칸에 V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재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현재와 비교하여) 과거 5년전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5년 이후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예측)
① 매우 나쁨			
② 나쁨			
③ 보통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4.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2개를 선택하여 해당되는 칸에 √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순위	2순위
① 대기시간 및 의료기관까지 이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② 119등 구급차를 확충해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④ 응급의료 전문 인력의 수를 확충해야 한다		
⑤ 응급의료 전문 인력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⑥ 응급의료 장비가 확충되고 현대화 되어야 한다		
⑦ 기타()		

B. 의료의 접근성

※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5.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의 의료이용 수요는 최근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분		매우 감소	감소	변화없음	증가	매우 증가
의료 종류별	5-1. 입원	①	②	③	④	⑤
	5-2. 외래	①	②	③	④	⑤
의료 서비스별	5-3. 건강증진/보건교육	①	②	③	④	⑤
	5-4. 만성질환	①	②	③	④	⑤
	5-5. 급성질환	①	②	③	④	⑤
	5-6. 예방접종	①	②	③	④	⑤
	5-7. 재활	①	②	③	④	⑤
	5-8. 건강검진	①	②	③	④	⑤
	5-9. 사고 및 손상	①	②	③	④	⑤

6.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의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② 시·도립병원, 지방의료원
- ③ 민간 병(의)원
- ④ 민간 종합병원, 대학병원
- ⑤ 기타()

7.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의 **현재** 입원과 외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현재와 비교하여 **과거 5년 전** 입원과 외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후 5년** 이후의 입원과 외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각각 평가하여, 해당 되는 칸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재 의료서비스 접근성		(현재와 비교하여) 과거 5년전 의료서비스 접근성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5년 이후 의료서비스 접근성(예측)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① 매우 나쁨						
② 나쁨						
③ 보통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8.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2개를 선택하여 해당되는 칸에 V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순위	2순위
① 근거리 의료기관의 확충		
② 의료서비스 이용까지 대기시간 단축		
③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의사, 간호사)의 확충		
④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⑤ 진료과목 수의 확충		
⑥ 진료비 지원을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		
⑦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⑧ 기타()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등을 말합니다.

9.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에서 의료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역 주민의 의료욕구 충족을 위해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능이 매우 부실한 편임
 - ② 기능이 부실한 편임
 - ③ 보통임
 - ④ 기능이 충실한 편임
 - ⑤ 기능이 매우 충실한 편임

※ 정부에서 수행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10.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에서 수행되는 다음 각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해당하는 칸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해당 없음
10-1.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응급의료시설·장비비와 운영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⑨
10-2.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만실 운영 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⑨
10-3.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만족도 (시설 장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⑨
10-4.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⑨

※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찾아가는 서비스란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진료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11.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12.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여기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2개를 선택하여 해당되는 칸에 √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순위	2순위
① 찾아오는 횟수가 적다		
② 원하는 의료 서비스가 없다		
③ 의료 인력의 전문성이 낮다		
④ 의료 장비가 낙후되었다		
⑤ 기타()		

C. 보건 의료 인력/시설 및 장비

※ 보건 의료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13.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에서 현재 의료 인력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되는 칸에 V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력 수에 대한 충분성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충분	불충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3-1.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2. 동네 병(의)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3.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4. 종합병원, 대학병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의 공중보건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이유 : _____)
- ② 불만족 (☞ 이유 : _____)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D. 사업환경변화

15.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의 사업 환경이 5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1. 지역 주민의 인구구성이 변화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2.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이 악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3. 지역 주민의 평균 소득수준이 감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4.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5. 민간의료기관의 수가 감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6. 농어촌보건의료 취약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5-7.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정책이 강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8. 119등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6.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2개를 선택하여 해당되는 칸에 √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순위	2순위
① 민간 병의원 확충		
②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확충		
③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		
④ 마을단위 보건진료소 확충		
⑤ 기타()		

부 록 4

시도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실적

지역	사업구분	개소수/실적('10)		개소수/실적('11)		개소수/실적('12)		개소수/실적('13)		개소수/실적('14)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		'13 예산		'14 예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 계	-		-								7,432	6,711	5,401	5,380	8,725	7,002	7,002	26,248
경기	찾아가는 도민 건강서비스 운영	-		-								845	845						
강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5개 군(횡성, 양구, 인제,고성, 양양)	6개군 (정선 추가)	6개군(횡 성,정선,양 구,인제,고 성,양양)	6개군	2,222건 진료	5개군(정 선,양구,인 제,고성,양 양) 2,300명	1,925건 진료	5개군(정 선,양구, 인제,고성 ,양양) 2,300명		610	390	390	430	430	410	410	410
충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3개 시군(괴산, 단양, 영동)	3개군	3개 군(괴산, 단양, 영동)	2개군 (괴산, 단양)	2개군(괴 산, 단양) 786명 진료	2개군(괴 산, 단양) 700명	2개군(괴 산, 단양) 783명 진료	2개군(괴 산, 단양) 월4회(군 별2회)		460	100	100	80	80	80	80	2,728
충남	병원선 도서주민 진료		6개시군 4,450명	4,450명	6개 군/ 4,450명	4,229명	189일 218,229명 진료	6개 군/ 4,100명	186일 235,271명 진료	6개 군/ 4,151명		892	650	650	638	638	664	664	3,705
전북	방문건강관리서 비스		-		-				145,200명 관리	취약계층, 만성질환 자 건강관리		-	-					-	3,312

지역	사업구분	개소수/실적 ('10)		개소수/실적 ('11)		개소수/실적 ('12)		개소수/실적 ('13)		개소수/실적 ('14)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		'13 예산		'14 예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전남	무의도서주민 상비의약품 지원		11개 시군/188개 도서	11개시군/188도서	11개 군/187개 도서	11개 군/187개 도서	11개 군/150개 도서	11개 군/150개 도서	11개 군/184개 도서	11개 군/159개 도서										
	무의도서주민 순회진료 (병원선)		11개 시군/21,311명 진료	11개시군/17,536명	11개 군/22,309명 진료	11개 군/18,084명 진료	11개 군/23,802명 진료	11개 군/15,608명 진료	11개 군/21,532명 진료	11개 군/14,449명 진료		2,476	2,403	2,403	2,363	2,363	2,754	2,754	7,293	
경북	찾아가는 행복병원						3개 군/3,506명 검진	3개 군	8,896명 검진	8,000명 검진						2,400	360	360	360	
	찾아가는 산부인과		9개군/1,771명 검진	9개군/1,800명	9개 군/1,812명 검진	9개 군/1,812명	8개군/2,154명 검진	8개군				370	400	400	400	400	43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493,727회	23개 시·군 (5,170백 만원)								430	5,170	
경남	찾아가는 산부인과		6개군/3,019명 진료	6개군/1,270명	6개군/2,583명 진료	6개군/1,270명	5개군/2,491명 진료	5개군/1,270명				358	400	400	400	400	360			
	병원선 도서주민 진료		8개시군 3,116명	7개시군/2,996명	7개 시군 2,996명	7개군/2,892명	7개시군 2,996명	7개시군/2,849명	7개시군 2,849명	7개시군/2,932명		564	654	654	664	664	924	924	641	
	만성질환자 정기적 관리								118천명	115천명								360	870	
제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		-				25,000명 진료	25,000명 진료		-	-					-	1,167	
부산	-		-		-							-	-							

부 록 5

조사표(교육 부문)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관련 서면 인터뷰지

[1] [시·도 교육청 담당자 조사표]

[2]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조사표]

[3] [농촌교육전문가 조사표]

[4] [현지통신원 조사표]

[1] [시·도 교육청 담당자 조사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관련 서면 인터뷰 [시·도 교육청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계획)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 인터뷰지는 삶의 질 계획 중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서울대학교 연구팀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조사의 목적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은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의 「교육여건개선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과제로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학교 모델을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사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세부사업들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 달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농어촌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여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될 농어촌 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시어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들어본 적은 있다
④ 어느 정도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2.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육성 정책 사업”은 무엇입니까?

- ① 전원학교 육성 사업 ②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③ 기숙형 고교 지정 및 육성 사업 ④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
⑤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⑥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⑦ ICT 지원 사업

귀하께서 2번에 응답하신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임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사업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목간 변경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제때 예산 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원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자체 대응예산규모를 결정·조정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예산 집행을 위한 분명한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 지 않음	그렇 지 않은 편임	보통 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 함
1) 구체적인 사업 운영 매뉴얼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보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해당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기반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우수강사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과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께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경험하신 애로사항이나 혹은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6. 선생님께서는 담당 사업이 농어촌의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기여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기여한 편이다	매우 기여하였다
1) 교육기반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교육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께서는 담당 사업이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학교 모델”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7-1번으로) 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7-1번으로)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한 편이다 ⑤ 매우 적절하다

7-1. 귀하께서는 담당 사업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교육·복지 학교 모델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교육·복지 학교 모델이 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8. 귀하께서는 담당 사업의 지원 분야 / 대상 / 기간 / 예산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1) 지원 분야	①	②	③	④	⑤
2) 지원 대상	①	②	③	④	⑤
3) 지원 기간	①	②	③	④	⑤
4) 지원 예산 규모	①	②	③	④	⑤

9. 지원 분야/대상/기간/예산 규모 등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9-1. 지원 분야

☞

9-2. 지원 대상

☞

9-3. 지원 기간

☞

15. 귀하는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인근의 큰 학교로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하는 편이다 ⑤ 매우 동의한다

※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근무지역			근무 교육청		
근무경력	근무지 경력		년	개월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조사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관련 서면 인터뷰 [단위학교 사업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계획)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 인터뷰지는 삶의 질 계획 중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서울대학교 연구팀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조사의 목적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은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의 「교육여건개선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과제로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학교 모델을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사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세부사업들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 달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농어촌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여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될 농어촌 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시어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들어본 적은 있다 ④ 어느 정도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2.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육성 정책 사업”은 무엇입니까?

- ① 전원학교 육성 사업 ②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③ 기숙형 고교 지정 및 육성 사업 ④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
 ⑤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⑥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⑦ ICT 지원 사업

선생님께서 2번에 응답하신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께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업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목간 변경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제때 예산 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원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자체 대응예산규모를 결정·조정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예산 집행을 위한 분명한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선생님께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구체적인 사업 운영 매뉴얼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보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해당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기반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우수강사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과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께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경험하신 애로사항이나 혹은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6. 선생님께서는 담당 사업이 농어촌의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기여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기여한 편이다	매우 기여하였다
1) 교육기반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교육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7. 선생님께서는 담당 사업이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학교 모델”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7-1번으로) 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7-1번으로)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한 편이다 ⑤ 매우 적절하다

- 7-1. 선생님께서는 담당 사업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교육·복지 학교 모델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교육·복지 학교 모델이 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선생님께서는 담당 사업의 지원 분야 / 대상 / 기간 / 예산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1) 지원 분야	①	②	③	④	⑤
2) 지원 대상	①	②	③	④	⑤
3) 지원 기간	①	②	③	④	⑤
4) 지원 예산 규모	①	②	③	④	⑤

9. 지원 분야/대상/기간/예산 규모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9-1. 지원 분야

☞

9-2. 지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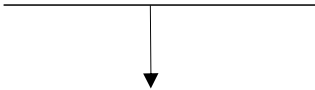
9-3. 지원 기간

☞

12.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역 학교 및 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12-1번으로)

② 그렇지 않다(⇒12-2번으로)



12-1.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경험했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 ② 네트워크 대상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충분하다
- ③ 유관기관 관계자가 비협조적이다
- ④ 업무 과중으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다
- ⑤ 기타 ()

12-2.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업 운영에 있어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지 않다
- 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 ③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 ④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으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
- ⑤ 기타 ()

13. 선생님께서는 담당 사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가능)

- ① 교육 기회 확대
- ② 교육 품질 향상
- ③ 교육비 부담 경감
- ④ 학생 만족도 향상
- ⑤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 ⑥ 학부모 만족도 향상
- ⑦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 ⑧ 학생 이탈 방지
- ⑨ 기타 ()

17. 선생님께서는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인근의 큰 학교로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하는 편이다 ⑤ 매우 동의한다

※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근무지역			근무학교		
지역구분	① 일반 농어촌 ② 도서, 산간 지역(벽오지) ③ 도농복합지역 ※ 도서, 산간지역 : 섬지역 또는 산간지역 ※ 도농복합지역 : 광역시 산하 군지역 또는 도시(동)지역과 농촌(읍,면) 지역이 함께 있는 시지역 ※ 그 외 지역은 일반농어촌				
근무경력	근무지 경력	년	개월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농촌교육전문가 조사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관련 서면 인터뷰 [농촌교육전문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계획)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 인터뷰지는 삶의 질 계획 중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서울대학교 연구팀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조사의 목적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은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의 「교육여건개선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과제로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학교 모델을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사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세부사업들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 달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농어촌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여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될 농어촌 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시어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르는 편이다 ③ 들어본 적은 있다
④ 어느 정도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2.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업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르는 편이다	들어본 적은 있다	어느 정도 안다	매우 잘 안다
1) 전원학교 육성 사업	①	②	③	④	⑤
2)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3) 기숙형 고교 지정 및 육성 사업	①	②	③	④	⑤
4)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	①	②	③	④	⑤
5)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①	②	③	④	⑤
6)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7) ICT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3.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우선 순위
1)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 육성	
2) 방과 후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3) 농어촌 지역 기숙형 고교 확대 및 내실화	
4)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기반을 확충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5) 군 단위 농어촌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교육 품질을 제고	
6) 농어촌 지역의 거점별 우수 중학교 선정 및 교육 지원	
7) 농어촌 학교의 ICT 인프라 구축 및 ICT 교육 활용 프로그램 확대	

4. 학교 육성 정책의 목표는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학교모형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업들이 학교 육성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적절하지 않다 (4-1번 으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4-1번 으로)	보통이 다 (5번으 로)	적절한 편이다 (5번으 로)	매우 적절하 다 (5번으 로)
1) 전원학교 육성 사업	①	②	③	④	⑤
2)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	①	②	③	④	⑤
3)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4) 기숙형 고교 지정 및 육성 사업	①	②	③	④	⑤
5)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	①	②	③	④	⑤
6) 평생교육기반 확충 사업	①	②	③	④	⑤
7)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8) ICT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8. 귀하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과 관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세 가지만 우선순위로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보기	
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양 교육 제공	⑧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②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	⑨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기숙사 제공
③ 지역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⑩ 방과 후 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
④ 학생을 위한 특기 적성 교육 실시 예: 체육, 미술, 음악, 외국어 등	⑪ 우수한 학교 교원 확보
⑤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실시	⑫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연계 교육 활동 실시
⑥ 학생을 위한 입시교육 실시	⑬ 지역 내 학교-산업체-교육청의 협의체 구성
⑦ 학생을 위한 교양·문화 프로그램 제공	⑭ 농어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⑮ 기타(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_____	
⑯ 기타(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_____	

9. 귀하는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학생이 적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동의하는 편이다 ⑤ 매우 동의한다


10. 귀하는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인근의 큰 학교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동의하는 편이다 ⑤ 매우 동의한다

11. 농어촌 지역의 교육기반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 육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현지통신원 조사표]

	<p>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p> <p>(조사기간: 2014. 11. 3~11. 20)</p>
<p>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림수산물부의 의뢰를 받아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지 통신원 여러분들께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교육 및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p> <p>설문지는 본인께서 직접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해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보장됩니다. 작성한 설문지는 동봉해드린 회신봉투에 넣어 11월 14일까지 보내주시시오(우표는 붙이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p>	

통신원번호 / 성명 () / 연락처 ()

▣ 다음에 분야별로 제시한 질문들에 답하여 주십시오.

■ 농어촌 교육 정책

참고 문헌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3.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 교육부. 2009.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한 종합적인 육성방안 추진”. 교육부 보도자료 (2009. 8. 26).
- 교육부. 2009~2012.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원학교(2009년 선정 110교 기준)”.
- 교육부. 2014.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세부시행과제 평가 자료”. 학생복지정책과.
- 기명, 나백주, 이원진, 정백근, 이희영, 박성우, 김은주. 2012.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성과 평가 및 향후 투자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을지대학교/한국건강증진재단.
- 김승보. 2014. “모두를 위한 진로교육: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의 과제”. THE HRD REVIEW 1월호: 84-101.
- 나백주. 2010.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 보고서[일반재정]: p.503. 2012. 보건복지부」에서 재인용)
- 나백주, 김철웅, 김미희, 장명화, 박선희, 김건엽, 이무식. 2006.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10개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농촌의학·지역보건 31권 1호; 81-107.
- 농림수산식품부. 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 _____. 2010. 「2010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_____. 2011a. 「2011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_____. 2011b. 「2010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_____. 2012a. 「2012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_____. 2012b. 「2011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2013a. 「2012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_____. 2013b. 「2013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_____. 2014a. 「2013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_____. 2014b. 「2013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마상진. 2010. “농어촌 교육 실태와 개선 과제”.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에서 발췌(p.133-1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정주, 이기환, 이태호, 이흥훈, 광미영, 임준, 정백근. 2013. 「의료취약지 도출에 따른 거점 의료기관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박광순, 박광서, 엄기욱, 정근식, 정성일, 홍성흡. 2001. 「일본 산촌의 지역경제와 사회정책」. 경인문화사.
- 박선희, 이수진, 소운기, 나백주, 이진용. 2011. “농어촌 보건소 신축과 보건소 진료량의 관련성-IMF 경제위기의 혼란효과 검토”. 보건행정학회지 제21권 제3호; 34-364
- 박성희. 2012. “좋은 농촌학교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17(2): 51-73.
- 보건복지부. 2010.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안)」.
- 보건복지부. 2013a.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10. 31)
- 보건복지부. 2013b. 「2013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14. “분만의료취약지에 ‘정부 지원 산부인과 확대’ 설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4. 14)
- 삼일회계법인. 2012.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 송미령, 노승철. 2013. 「통계로 살펴보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영호. 201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연기. 2012.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의 추진내용과 성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2): 79-103.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2.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결과와 관련한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2012. 10. 23)
- 정영호, 고숙자. 2012. 「보건소 이미지 명칭변경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진호, 김계형, 김민선, 박상민, 손지훈, 이유경, 최연악. 2013.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인력 지원 제도화 방안」. 보건복지부.

- 조재국, 최정수, 신호성, 한동운, 나백주, 윤강재. 2006.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심층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천성아, 나백주, 김철웅, 이무식. 2008. “농촌 보건기관의 신축이 고혈압 환자혈압 조절에 미치는 영향”. 농촌의학·지역보건 33권 1호: 37-45.
- 최돈민. 2013.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교육종합연구 11(4): 269-291.
- 한국건강증진재단. 201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실적(누계)」
- Unutzer J, Katon W, Callahan CM, et al. 2002. “Collaborative care management of late-life depression in the primary care setting: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228(22): 2836 - 2845.
- Hiss RG, Armbruster BA, Gillard ML, et al. 2007. “Nurse care manager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based physicians providing diabetes car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Diabetes Education* 33(3): 493 - 502.